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주권정부로 이어가다!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더불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축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의 소중한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국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발굴한 촘촘하고 세밀한 사례들을 보며 우리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국민의 일상을 바꾼 이 기록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산물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1주년을 맞는 2026년, 대한민국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을 좌우할 국가대전환의 방향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정통합과 광역협력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토대를 다질 최적의 시기입니다.

올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당원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사례집이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과 실천의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수한 정책과 조례 발굴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과 지방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심사와 편집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생의 희망을 키우는 길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발간사

◆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승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승원입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국정 비전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제대로 닿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이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소명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과 현장에서 검증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방시대’와 ‘국민주권정부’가 정책과 조례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기본사회 정책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조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추구해 온 정책 방향이 이미 지역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현장의 혁신 사례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본 사례집은 수상작을 중심으로 정책과 조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정책 실무자와 지방의원은 물론 예비 정치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과 조례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져 지방선거 승리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민주권정부를 굳건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사례집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승원

목차

우수정책

01	환자는 해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14
02	지방소멸위기 극복,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18
03	모두의 삶을 두텁게 하는 안전망, 남해군 기본사회	20
04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지원	23
05	파주 에너지 꽃이 피었습니다	26
06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28
07	화성형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30
08	어르신 일상에 스마트를 더하다,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33
09	탄소중립·햇빛연금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36
10	병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일상 속 돌봄으로 전환하는 "진천형 노인 통합돌봄"	38
11	모두의 도시, 더 나은 주택 '새빛하우스'	41
12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관악	44
13	주민과 함께 걸어온 길, 주민주권의 청사진 광산구 동미래발전계획	48
14	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봄 - 함평형 단계별 마을공동체 회복 모델	50
15	전지적 농민 시점 고창형 농촌살리기 프로젝트	53
16	일상에 녹색을, 구민에게 쉼을 녹색정원도시 금천	57
17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휴	60
18	24시간 작동하는 안전도시 진안, 주민과 함께 생명을 지키는 통합안전체계 구축	63
19	Ageing in Guro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치매통합돌봄	66
20	청년이 빛나는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	69
21	고립사회 위기극복, 지역밀착형 시민주도 '전주 함께' 시리즈	72
22	지역을 살리는 1등 공신, 전국 최초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75
23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체계 구축	78

우수조례

01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82
0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84
03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86
04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88
05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90
06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92
07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94
08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	96
09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8
10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100
11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101
12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103
13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105
14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107
15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110
16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112
17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114
18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116
19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18
20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120
21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123
22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125
23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127

목차

우수조례

24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129
25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131
26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133
27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135
28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137
29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139
30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41
31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143
32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145
3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7
34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49
3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51
36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153
37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용어 오남용 개선 조례	155
38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157
39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59
40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61
41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163
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165
43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	167
44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169
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171
46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173

목차

우수조례

4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175
48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77
49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179
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182
51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184
52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186
5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188
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190
55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192
56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194
5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196
58	의정부시 이에스지(ESG)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98
59	사상구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	200
60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
61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4
62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6
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208
64	광주광역시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	210
65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212
6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14
67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16
6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18
69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20

목차

우수조례

70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2
71	대구광역시 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224
72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226
7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	228
7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	230
75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32
76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234
77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236
78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238
7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40
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3
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45
82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 조례	247
83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49
84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251
85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253
86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55
87	구리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257
88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59
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262
90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64
91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67
9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269

목차

우수조례

9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271
94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74
95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276
96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278
97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280
98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82
99	여주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84
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86
101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88
102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290
103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92

**우수정책
우수정책**

01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
지역원격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소방-응급의료지원단-의료기관 간 이송 · 전원 핫라인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

현행 (종합상황판)

병원 정보 위주의 시스템

- 병원별/질환별 가용병상 확인
- 환자이송 및 당직현황 확인 불가



개선(제주형 응급의료 상황판)

병원과 소방의 공유형 시스템

- 지역/병원별 가용병상 확인(실시간 반영)
- 실시간 환자 이송 및 당직현황 확인 가능(추가)

⇒ 응급환자 이송·전원 핫라인 구축으로 **응급실 뱅뱅이 사망사고 '제로'**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지표 개선

- 응급실 도착 후 의사진료 평균 대기시간: ('23) 43.3분 → ('24) 20.8분

◆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개선 ⇒ 구급차 평균 이동속도 **18.9% 상승**,
10km 이동시 2분 24초 단축

◎ 사업기간: 연중(계속사업)

◎ 참여기관: 도, 소방, 6개 응급의료기관 등

◎ 주요내용: 지역 협력체계 기반의 응급의료체계 대응 단계별 개선

2 주요내용

① 지역 응급의료 운영 조직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조직강화

- ◎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조기 출범**(24.2.)
- ◎ **응급의료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조정**으로 업무집중도 향상
 - ('25) 道 응급의료팀 신설,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전담인력 증원(3명→4명)
- ◎ 중증응급환자 현장대응 위한 **소방 특별구급대 확대 편성**(57개→97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중증응급환자 전용병상 지정**
 - ('24.9월) 16병상 지정 → ('25) 19병상 (3병상 추가 지정)

◎ 24시간 중증응급질환 당직체계 구축·확대 (5개 질환·578백만원)

구분	2024년 9월~12월	2025년 1월~12월
대상질환	흉부·복부 대동맥질환, 수족지접합 (영유아) 기관지내시경, 혈관중재술	흉부·복부 대동맥질환 (영유아) 기관지·위장관 내시경, 혈관중재술
지원일수	월 20일 지원	365일 지원
예산액	104백만원	474백만원

◎ 포괄 2차 종합병원(6개소) 100% 선정 (‘25.7.)

◎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체계 강화 위한 권역모자의료센터 신규 지정 (‘25.8.)

2 기존 응급의료체계 혁신과 유기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 혁신

◎ 소방-응급의료지원단-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핫라인 구축

- (‘24) 3,959건 (‘25.8.) 2,653건 응급환자 적정이송 지원

◎ 제주형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단계적 확대

- (‘25)시스템 구축안 마련→(‘26)시스템 구축·시범운영→(‘27) 시스템 고도화

- 실시간 이송/병상 이용 현황 등 확인, 적정병원으로 신속 이송 가능

현행 (종합상황판)

병원 정보 위주의 시스템

- 병원별/질환별 가용병상 확인
- 환자이송현황 및 당직현황 확인 불가능

개선(제주형 응급의료 상황판)

병원과 소방의 공유형 시스템

- 지역별/병원별 가용병상 확인(실시간 반영)
- 실시간 환자 이송현황 및 당직현황 확인 가능(추가)

◎ 「도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마련·시행(‘24.8.)

- 치료자원 기반 8개 중증 응급질환 별 이송병원 선정안 제시

-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 수요 반영하여 지침 개정(‘24.12.)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이송문제 사례 조정(‘24.3.)

- 도↔소방↔응급의료지원센터↔응급의료기관(6개소) 유기적 관계 구축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로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24.7.)

- 권역정신응급의료기관-경찰 협업, 정신응급환자 신속 대응

◎ 응급의료 3개 협력분과 구성(정책·연구/실행/모니터링): 14개기관

◎ 응급의료취약지 환자 신속이송을 위한 헬기운영기관 협약 체결(‘24.12.)

◎ 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 개최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협력 강화(‘24.12.)

◎ 도-도의회-소방-의료기관 응급의료 공동 협력대응 선언식 개최(‘25.3.)

도민홍보 강화

- ◎ 응급실 에티켓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도민 홍보 강화
- ◎ 명절연휴기간 등 응급실 이용문화 캠페인 동영상 집중 홍보(3회)
- ◎ 응급환자 이송전원 핫라인사례 홍보 숏드라마 제작·등록(유튜브(' 25.8.))
- ◎ 응급의료 홍보 콘텐츠 4부작 제작·송출(KCTV 제주(' 25.8.6~9.2.))
- ◎ 제주형 이송지침 홍보 교육 및 영상제작·송출(JIBS제주(' 25.9~10.))

3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 구축

- ◎ (전국 최초) 제주국제공항내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40억원)
- ◎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개선으로 이동시간 단축(15분→6분)
- (광역 최초)도내 모든 교차로 확대 및 긴급차량(146대) 적용
* 119차량 등 긴급차량 접근시 전방 5~6개 교통신호기를 시기반으로 자동제어, 교차로 신속 통과(교통사고 발생 ZERO)
- ◎ 의료취약지 서귀포지역 이송체계 구축 헬리포트 사업비 확보(38억)

4 일차의료체계 기반 강화 및 취약분야 보완한 의료격차 해소

- ◎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개원으로 읍면지역 경증환자 수용(' 25.1.)
-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동(119병상) 준공으로 지역격차 해소(' 25.2.)
-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선정(4개 지자체): 24명·676백만원(' 25.4.)
- ◎ 의료취약지 서귀포지역 등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3개소→4개소)
- ◎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신규 지정·확대(77개소, 2012년 전국 최초 시행)
- ◎ 포괄적 건강관리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 개시(' 25.10.)

3 추진성과

- ◎ 응급환자 이송·전원 핫라인 구축으로 **응급실 뱅뱅이 사망사고'제로'**
-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지표 개선
- **응급실 도착 후 의사진료 평균 대기시간: (' 23) 43.3분 → (' 24) 20.8분**
※ 병원찾고 진료까지 걸리던 시간 절반 단축
- **이용 응급의료서비스의 방문목적 해결정도: (' 23) 70.2% → (' 24) 74.1%**
- ◎ 응급실 에티켓 집중홍보로 전년대비 응급실이용 및 경증환자 비율 감소
- 전년대비 `24년 **응급실 내원환자 19.1% 감소, 경증환자 25.1% 감소**
- ◎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선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이송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 계류장에서 한라병원까지 소요시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 구급차 평균 **이동속도 18.9% 상승, 10km이동시 2분 24초 단축**
- ◎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제주연구원 `25)
- 7개 중점정책사업 중 '**응급의료체계 혁신**' **만족도 1위(81.4%)**
- ◎ `25년(' 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2개 분야 동시 선정**(정성평가, 국민평가)

4 기대효과

-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 역량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
- ◎ 응급의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이송체계 개선
- ◎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도민 생명 보호
- ◎ 응급의료 홍보 강화로 도민 인식 제고 및 응급실과밀화 해소
- ◎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

5 향후계획

- ◎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캠페인 지속 홍보로 응급실 적정 내원 유도
- ◎ 서귀포의료원 전원체계 개선 위한 옥상 헬리포트 착공('25.11.)
- ◎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주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안 마련('25.12.)
- 제주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26.上) 및 시범 운영('26.下)

02

지방소멸위기 극복,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 추진배경

- ◎ 지방소멸위기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인구문제에 직면,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획기적인 인구대책 필요
- ◎ 저출생 극복
 -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응답, 양육부담 경감 시급 *한국은행(22.)
- ◎ 국가책임 강화
 - 기본사회 구현의 선도모델로서 육아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 도모 *OECD 32개국 중 19개국 아동수당 지급,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매월 30~40만원 아동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 대상 1세~18세까지(18년간) 지원
- ◎ 지원내용
 - 월 20만 원(18년간 1인당 총 4,320만 원 지급)
- ◎ 추진경과
 -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22개 시군과 공동 추진 업무협약('24. 2. 1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4. 8. 21.)
 -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24.10. 24.)
 -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개최('24.12. 24.)
 -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25. 1. 24.)

3 주요내용

- ◎ 기본사회 실현
 - 국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양육 전 과정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모델 개발
- ◎ 패러다임 대전환
 - 1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양육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전국 최초 출생기본수당 지급
국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첫 걸음

4 추진성과

- ◎ (출산율 반등) '24년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25년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 출생아 수 6.5% 증가 등 반등 성공
- ◎ (실질적 효과) '24년 결혼연령기(30~34세) 전남인구 순유출이 늘어났음에도, '24년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모두 증가, 실질적 출산율 증가
- ◎ (경제적 파급효과) 양육비 절감이 소비로 연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창출

*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표창 (대상) 수상('25.9.)

5 기대효과

- ◎ (최초·최대 성과) 도입 논의 초기부터 전국 최초 양육 전주기 수당으로 큰 주목, 최근 실질적인 합계출산율 회복 성과 집중 조명
- ◎ (벤치마킹) 전남의 사례와 같은 출생기본수당 도입 주장

6 향후계획

- ◎ (국가사업화) 이재명 대통령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언급('25.5.), 선도사례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모델의 국가사업화 건의
- ◎ (성과관리) 전남도가 확보한 합계출산율 등 정책효과성을 빅데이터 시 분석을 거쳐 전국에 공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

03 모두의 삶을 두텁게 하는 안전망, 남해군 기본사회

장충남 경상남도 남해군수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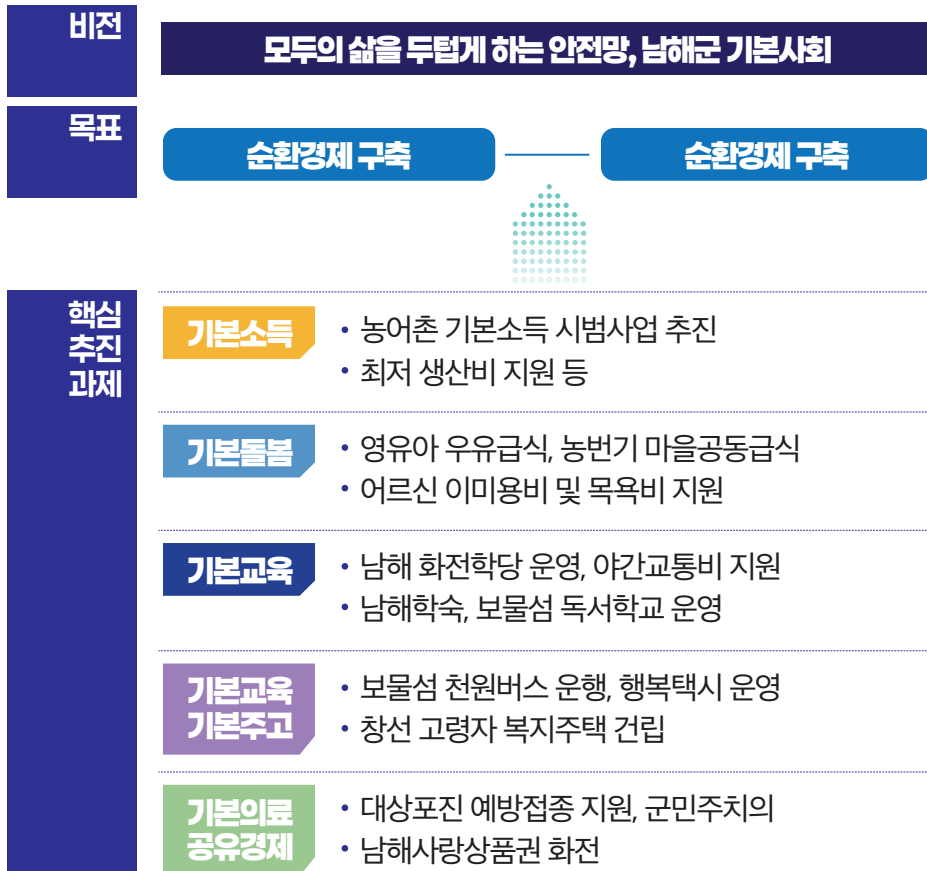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용·일자리 변화 대응, 기본권 확대, 사회 신뢰 회복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
-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

◎ 추진목적

-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신뢰 제고

◎ 비전과 목표



2 주요내용

◎ 핵심추진 과제 : 총 과제 11대 분야 52개 정책 중, 핵심과제 12개

사업명	사업개요(핵심)	추진기간 / 사업비	기대효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농어촌 주민에게 조건 없는 정기소득 지급으로 생활안정·공동체 회복 도모	기간 : 2026~2027 사업비 : 연 290억 정도 대상 : 전 군민(39천명)	기본소득 제도화로 농어촌형 생활안정모델 구축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전으로 가격하락 피해 최소화	기간 : 2022~2026 사업비 : 50억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용)	농가소득 안전망 확립 및 안정적 생산유도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우유 무상 제공, 성장기 영양불균형 해소	기간 : 2025~ 사업비 : 0.2억원 대상:영유아 600명	보편적 아동영양 복지 강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농번기 일손 부족 마을에 공동 급식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노동부담 완화	기간 : 2022~ 사업비 : 1.5억원 대상: 46개소(마을)	농촌 공동체 돌봄형 복지 확산 및 농업생산선 향상
어르신 이미용·목욕비 지원	·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6만원 이용권 지급	기간 : 2025~ 사업비 : 5.4억원 대상:9천명	어르신 생활복지 향상 및 건강·정서안정 지원
중·고교생 야간교통비 지원	· 농어촌 학교 학생의 야간통합 부담 해소 및 안전귀가 지원	기간 : 2019~ 사업비 : 1.3억원 대상 : 220명(누적12,375명)	교육의 질 향상으로 우수 인재 성장 기반 마련
보물섬 독서학교 운영	· 지역 청소년에게 품질 높은 독서 인문교양 프로그램 제공	기간 : 2011~ 사업비 : 0.5억원 대상 : 103명	평생학습 기반의 인문도시 조성
보물섬 천원버스 사업	·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관계없이 1천원으로 받는 단일 요금제 시행	기간 : 2023~ 사업비 : 4.5억원 대상 : 전 군민	교통비 절감을 통한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기간 : 2024~ 사업비 : 174억원 대상 : 64세대	고령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만 60세 이상 군민 대상 대상포진 접종 지원	기간 : 2023~ 사업비 : 3억원 대상 : 8,642명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발병률을 낮추어 군민 건강증진 기여
군민주치의 사업	· 핵심마을 및 취약계층 주기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건강상담 체계 구축	기간 : 2023~ 사업비 : 0.7억원 대상 : 전 군민(취약계층)	군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마련과 의료취약지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 2019~ 사업비 : 33억원 연간 200억 규모	지역 내 소비 순환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3 추진성과

- ◎ **군민 생활체감형 복지정책 확대**
 - 12개 사업 모두 일상생활 직접 지원 형태로 군민 만족도와 체감도 높음
- ◎ **경제·복지 통합효과 가시화**
 - 소득·돌봄·교육·교통·주거, 의료, 공유경제 등 전 영역에 걸친 균형적 성과
- ◎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기반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해형 생활안정체계 확립

4 기대효과

- ◎ **군민 체감형 변화와 경제 선순환 구축**
 -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화전 지급(26~27)으로 연 700억 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형성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소비 승수효과로 매출 상승 (경제유발효과 약 3,700억 원 예상)
 - 기본소득·소비·매출·고용·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경제 모델 정착
- ◎ **지방소멸 대응 및 정주 안정 강화**
 -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인 → 귀농귀촌 세대 2025년 대비 30% 증가 목표, 기본소득 연계 정주여건 개선
 - 노년층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초생활 안정 및 빈곤율 감소 기대
 - 생활인구 확대(체류형 관광 연계)로 인구 순유입 전환 기반 확보
- ◎ **기본사회 완성 모델 실증**
 - 기존 11개 분야 52개 기본사회 정책 (예: 농어업인 수당, 천원버스, 이미용비, 영유아 급식 등)과의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생활복지, 교육, 돌봄, 교통, 의료 등 일상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남해형 기본사회 모델' 정립
 - 이를 통해 '보편적 기본생활 보장 + 지역경제 활력 촉진'이라는 이중효과 달성

5 향후계획

- ◎ **남해형 기본사회 비전을 통한 정책 지속 추진**
 - 소득·복지·건강·교육·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
-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포용적 사회분위기 형성으로 국가정책 확산**
 - 마을 공동급식, 군민주치의, 독서학교 운영 등과 기본소득을 결합하여 '함께 사는 남해' 브랜드 구현
 - 남해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형 농어촌기본사회의 모델로 연계

04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지원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추진배경

- ◎ 광주 동구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0% 이상으로, 저층 주거지와 쪽방촌이 혼재된 대표적인 광주 원도심
 - 개발 소외, 고령화, 빈집 증가로 주거불안 및 사회적 고립이 심화
- ◎ 이에 동구는 물리적 개선(집수리 지원)과 사회적 회복(쪽방주민 지원)을 아우르는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2 사업개요

- ◎ 사업명: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지원(더샵 집수리 + 쪽방주민 지원)
- ◎ 기간: 2024년~현재
- ◎ 총사업비: 약 30억 원(국비·시비·구비 및 민관협력 포함)
- ◎ 주요대상: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 쪽방·비주택 거주민, 주거취약 1인가구
- ◎ 추진체계: 통합돌봄과 주거정책과 협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

3 주요내용

주거환경 개선 - 「더샵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 단위 최초

- ◎ 지원대상: 20년 이상 노후주택 747동(시범) → 7,974동(확대계획)
- ◎ 주요내용: 성능(단열, 방수, 창호교체 등)·경관 개선, 안전 보강 등
 - 주택성능지원구역 지정: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49개 구역 지정
 - 집수리 지원 확대: 일반계층(저소득층 포함)에도 지원 기회 제공
 - (성능 개선)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취약계층 100%) 지원
 - (경관 개선) 최대 300만원(100%) 지원
 - 시범운영: 92가구 지원(취약 12, 일반 80) / 안전성·에너지효율 개선

- 단계적 사업 추진

2024년 ~ 2026년(3년)	2027년 ~
<p>[단기계획] 시범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산수동 일대 2개구역 20년이상 주택 747동 대상 • 실행방법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집중하여 주거환경 개선 • 소요예산 총 20억원 • 달성목표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수행방식 등 검증, 사업 체계 구축 	<p>[장기계획] 사업 구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동구 주택성능 개선 지원구역 20년이상 주택 7,974동 대상 • 실행방법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전체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집수리 지원 • 소요예산 총 263억원(참여율 약30%) • 달성목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사업 운영

- ◎ 특징: 자치구 단위 최초, 일반저소득층까지 포함한 '집수리조례' 제정
- ◎ 브랜드: 주민참여형 '더샵 집수리 DAY' 운영 - 현장상담, 체험,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립

사회적 관계회복 및 돌봄복지 -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광주·전남 최초

- ◎ 지원대상 : 대인동·계림동 비주택 밀집지 거주민
- ◎ 사업체계 : 5대 전략, 25개 세부사업(주거복지·건강관리·일자리·공동체 회복 등)
- ◎ 주요내용 :
 - **정책 기반 및 거점 공간 구축**
 -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 '쪽빛상담소' 운영 : 치료실, 쉼터 및 쪽방 주민 지원 및 상담을 위한 거점센터
 -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조성·운영 : 식사, 샤워실, 빨래방, 건강증진실 등 정비공간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상위기관·부서간·유관·민관기관 협업
 - 식사지원 1일 평균 50명, 후원 500여명 수혜
 - CCTV·화재예방설비·보안등 교체로 생활·안전환경 개선
 - 노인일자리사업, 거리노숙인 자활사업, 빚고을 50+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쪽방촌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
 - 공동이용공간 조성, 골목길 환경·건축물 미관 정비(국토부 지역특화재생사업),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
 - 맨홀·하수 약취덮개 설치 및 정비
 - 쪽방촌 지역 내 공공주택 조성을 목표로 '쪽방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LH, 광주도시공사)

4 추진성과

구 분	주요성과	비고
제 도	‘집수리 지원조례’ 및 ‘쪽방주민 복지조례’ 제정	제도 기반 마련
물리환경	92 가구 집수리, 2개 구역 환경정비	주거안전·경관 개선
사회관계	거점공간 2개소, 연간 1,000여명 프로그램 참여	고립 완화
협력체계	민·관·학·의료·기업 등 30여 기관 연계	지속가능 거버넌스

5 기대효과

- ◎ 주거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복지 안전망 완성
- ◎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 방지
- ◎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확립

6 향후계획

- ◎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산수동→계림동·지산동 등) 확대
- 2027년부터 7,900여 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 ◎ 쪽방촌 공공주택화 및 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 창출
- ◎ 주거·안전·돌봄·의료복지 등 연계, AI 기반 스마트 건강도시 플랫폼 구축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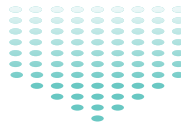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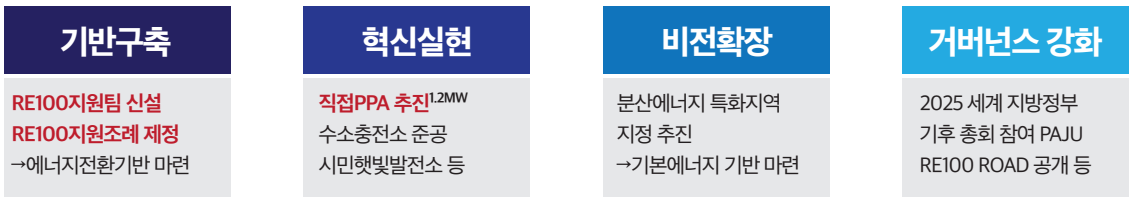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 대응
파주 에너지꽃이 피었습니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1 추진배경

- ◎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위한 방안 모색
- ◎ 글로벌 RE100 무역장벽 대두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 ◎ 기존 대규모 발전 위주의 정책 한계로 지역 전력 불균형 발생
- ◎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전환 필요

2 사업개요



공공·민간·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대전환으로 PAJU ENERGY BLOSS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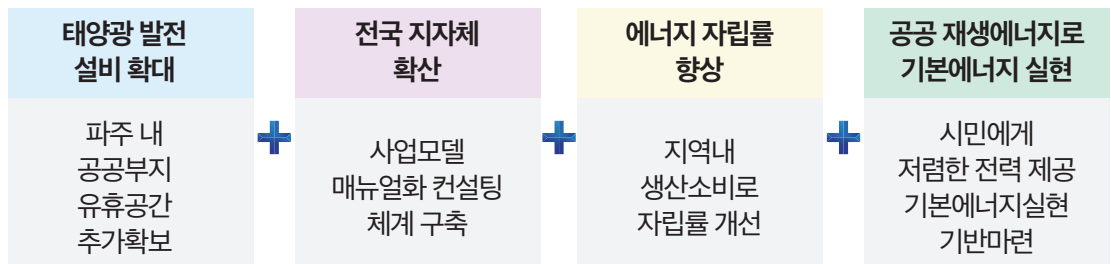
3 주요내용

- ◎ [기반구축] 에너지 전환의 초석을 다지다
 -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 지원팀」 신설 (‘24. 1월)
 -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 지원 조례」 제정 (‘24. 6월)
 -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및 지자체 표준 모델안 마련
 - ◎ [혁신실현] RE100 실현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전국 최초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PPA(1.2MW) 중소기업 공급 추진(‘25.2월~)
 - 市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생산전력을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공급 (2025) 파주시도시관광공사 40억(2MW) 편성 → (2026) 60억 추가(5MW)
- (2025) 30년간문산정수장 태양광발전소(1.2MW) → 연간1,277MWh 공급 예정
 (2026) 총5MW(100억원)시비100% →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실질 지원 계획

- 중소기업에게 3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 공급
- 전국 최초 대형 체육대회(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전 과정 RE100 운영 (‘24.5월)
 - 개회식부터 대회종료까지 모든 경기장 필요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확대 (수소충전소 준공 및 수소버스 도입) (‘24.10월)
 - 수소버스 3대 동시 충전가능 경기북부 대형 수소충전시설 운영
 -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노선에 수소버스 7대 도입
- 관내 마을·단체와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준공(5개 단체, 총 930KW)(‘24.6월)
 - 1개 마을·단체에 1개 발전소 운영 목표(경기도 공모 참여)
- 소상공인 에너지절감 컨설팅(265개소), 어린이교실 운영(16개소 261명 교육), RE100 시민강사 양성으로 어린이집 등 전 생애주기 교육 추진 등
- ◎ [비전확장] 기본에너지로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대전환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으로 기본에너지 실현 기반 마련
 - 시민 대상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제공
 - 국공유지 내 공공태양광 발전소 구축으로 전력사업 다변화
- ◎ [거버넌스강화] 국내외 연대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 2025 ICLEI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PAJU RE100 ROAD 공개(‘25.4월)
 - 국회 RE100 정책토론회 참석 및 국회의장 정책 건의사항 전달(‘24.7월)
 - 경기연구원과 파주시 RE100 이행 전략 연구 완료(‘24.9월)

4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v 지방정부가 전국 최초로 공공 재생에너지를 민간에 직접 공급한 실증모델 구축
 v RE100 미이행으로 수출 차질 우려 중소기업의 RE100 대응 체계 마련
 v 산업용 전기 대비 요금 인하로 기업 전기료 절감 효과 → 30년간 40%
 v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으로 기본에너지 실현 기반 마련



06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이재영 충청북도 증평군수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증평군은 인구의 95%가 중심지에 집중된 콤팩트시티로 전국 최소 행정체제(1읍·1면)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기반 지방자치의 최적지
- 콤팩트시티의 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롤모델 증평 구축

◎ ‘증평형 동네 한바퀴’

- 동네(同+NE): 함께+NEtwork → 우리 동네 한바퀴, 이웃 동네 한바퀴
- 집(House, 集, ZIP): 모음, 압축파일 → 압축도시 증평의 집(家, 集, ZIP)

2 주요내용

◎ 소통이네(NE)집(ZIP)_쌍방향 소통·공감밴드 운영(SNS)

- 온라인소통창구 개설일 : 2022. 7. 1.(민선6기 출범일)
- 불편사항 등록(주민) → 신속처리(총괄·담당부서) → 처리결과 등록(담당자)

구분	게시글	정보 제공	생활불편 신고 처리결과				기타 제안	가입자
			소계	완료	처리중	불가		
계	2,335	773	1,299	1,285	9	5	263	2,283

◎ 기록이네(NE)집(ZIP)_증평기록 아카이빙 추진

- 행정복합라키비움 조성(도서관+기록관+박물관)
- 위치: 증평군청 별관 1층 공간 활용
- 규모: 연면적 383㎡
- 시설구성: 마을기록서재, 기록카페, 회의실, 작은도서관
-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구분	인원	배출일	비고
어린이 기록가	8명	2022. 10. 27.	15개 마을·단체와 Archive Network 구축
청소년 기록가	100명	2022. 9. 30.	
마을 기록가	24명	2023. 1. 27.	
기록발전연구회	14명	2023. 1. 27.	

- 마을기록과 활동과 수집

계	1회	2회	3회	4회
2,451건	582건	139건	1,474건	256건

쌍방향 소통 아카이브 활동
 - 마을기록집 제작 : 60권, 주간 웹진 발행 25호, 증평기록 소식지 발행 20호

◎ WITH(NE)집(ZIP)_마을교육 활동가와 함께하는 온마을 배움터

- Network: 학교 ↔ 마을활동가(증평군) 협력형
- 마을활동교육가: 19명 양성 운영
- 내용: 마을로 찾아가는 증평탐험 아카데미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11과정/26,128명	79과정/10,103명	82과정/10,817명	60과정/5,208명

◎ 아청이네(NE)집(ZIP)_아동·청소년·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아동네트워크(3개/68명), 청소년네트워크(2개/102명), 청년네트워크(3개/108명)

아동·청소년·청년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분야 정책 심의

3 추진성과

◎ 기록이네 집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3대 디자인상 석권

- 주민들이 발굴한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2025.4.10.)
- IF디자인 어워드 본상(독일), IDEA 본상(미국)

◎ 지역활력지수 전국 1위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활력지수 전국 1위

4 기대효과

◎ 주민들이 참여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 동네와의 연계성, 지역사회 연계성과 같은 지역사회 유지 요소 구축

5 향후계획

- ◎ 지역특성(콤팩트시티, 생활권의 중심)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기반 지방자치모델 구축 지속

07 화성형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정명근 경기도 화성특례시장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 6. ~ 현재
- ◎ 사업목적: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를 통한 시민의 경제·정서적 회복 지원
- ◎ 총사업비: 307,768천원(시비 100%)
- ◎ 운영주체: 화성시(화성시복지재단)
- ◎ 사업내용
 - 채무상담, 재무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연계 및 법원 단계별 실시간 관리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 실비지원으로 시민 부담 완화
 - 행정복지센터·자활센터·자살예방센터 등과 통합연계
 - 노인복지관, 자활기관 등 현장 방문상담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2 주요내용

- ◎ 사업대상: 화성시민
 -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
 -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시민
- ◎ 운영장소: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
-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 전담인력: 총 3명(센터장 1, 상담관 2)
- ◎ 운영내용: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 상담방식: 방문·전화·찾아가는 상담
 - 지원내용: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연계체계: 법원·신용회복위원회·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과 통합지원

3 추진체계 및 경과

- ◎ 추진체계
 - 상담→법원연계→복지지원→사후관리‘원스톱 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1단계 (초기 상담)	- 심층 상담으로 채무 원인·상황 진단, 신뢰 형성	심리 안정 및 과정 예측 가능성 부여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2단계 (서류 준비)	- 맞춤 서류 제공,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지원, 법률구조공단 접수 지원	중도 포기 방지, 실질적 장벽 제거
3단계 (법원 절차 지원)	- 사건 모니터링, 대응 코칭, 법률 자문 연계	불안감 감소 및 심리적 지지 제공
4단계 (보정 대응)	- 보정명령 대응, 서류 보완, 주요 기일 동행·코칭	면책·인가 결정 확률 극대화
5단계 (복지 연계)	- 생계·주거·의료 등 복합 위기 개입 및 신속 연계	재기 지원 및 채무조정 완주력 강화
6단계 (사후관리)	- 재무상황 점검, 맞춤 교육, 불법추심 대응	재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 추진경과

- 2023. 10.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 4. 센터 업무개시
- 2024. 6. 센터 개소식 개최
- 2025. 2. 찾아가는 채무상담 운영 개시
- 2025. 6.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4 추진성과

◎ 화성시만의 원팀(One-Team) 협력행정 구현

- 행정복지센터·무한돌봄센터·자살예방센터 등 10여 개 기관이 상시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채무·복지·심리 등 복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화성형 민·관 협력행정 모델 구축**
-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연계를 실현, **광역단위 센터보다 긴밀하고 즉시 대응이 가능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원팀행정 구현**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실현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을 운영하여 복지관·노숙인시설 등을 직접 방문, 상담이 필요한 16명 발굴 및 10명 채무조정 연계(63%)
- **총 1,953건의 상담 중 방문상담 1,400건(72%)**으로, 단순 안내를 넘어 센터 방문 중심의 심층상담 체계 정착 및 상담의 깊이·지속성 강화
 - ※ [참고] A시(연평균 약597건) 대비 화성시는 3배 이상 실적 기록, 단기간 내 상담 활성화
- 시 및 센터 홈페이지에 감사·칭찬글 16건이 게시되는 등 시민의 신뢰와 공감 확산, 이를 통해 **행정이 시민을 찾아가고 시민이 다시 행정을 찾는 ‘쌍방향 체감복지’ 실현**

◎ 실질적 경제회생 및 통합복지 효과 창출

- **총 457억 원 규모 채무조정 달성**(법원 접수 414억,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43억)으로 시민의 경제회생 지원, 도내 최고 수준 실적 달성

- 부채증명서·민사에납금 실비지원제도 도입으로 상담진입 장벽 해소, 초기상담 포기 감소 및 채무조정 성공률 향상

- 복지·심리상담 등 271건 연계로 복합위기 대응 강화, 채무해결과 동시에 정서·심리 안정 및 주거·생계지원까지 통합복지 효과 실현

◎ 전문상담 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 체계 확립

- 금융복지상담사 26명 수료, 20명 자격취득으로 지역 전문인력풀 구축

- 수료생들이 지역 금융복지 지킴이로 활동하며 생활권별 상담 및 자원봉사를 지속,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 선순환 지원체계 정립

5 향후계획

◎ 병점지소 개소(2026년)를 통한 동부권역 접근성 강화

◎ 금융교육·사전예방 상담 확대로 채무 악순환 차단

◎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를 통한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관 협력망 확대로 촘촘한 화성형 금융복지 안전망 완성

08

어르신 일상에 스마트를 더하다,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조용익 경기도 부천시장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구분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인구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 및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돌봄·복지체계 구축
디지털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부족으로 정보격차 심화 → ICT 기반 경로당 운영을 통한 디지털 복지포용 및 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여가·소통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의 단순 여가공간화로 이용률 저하 및 공동체 약화 → 건강·교육·소통 복합공간 전환으로 활기찬 노년 공동체 조성

◎ 사업기간: '21년 ~ 계속

- ('21. 전국 최초 도입 → ('22. ~ '25.) 단계적 시스템 확대

◎ 사업대상: 스마트경로당 45개소

◎ 사업비: 28억 9,702만 원(국비 19억 원, 시비 9억 9,702만 원)

◎ 추진체계: 민·관 협력 추진

구분	주체	항목	내용
민	노인복지관		-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경로당 관리사 배치·관리
	대한노인회지회	○여가 프로그램 운영	-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현직의사가 진행하는 건강강좌 운영 - 어르신 소근육 운동 프로그램 운영
官	노인복지과	○사업기획 및 총괄 ○모니터링, 건강상담 등	- 스마트 경로당사업 총괄(인프라 설치, 유지)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성과관리 및 홍보 등

2 주요내용

ICT 화상플랫폼
 여가·건강 프로그램
 주 5일, 45개소 동시 운영

IoT 헬스케어
 건강수치 측정 및
 경로당 주치의 건강상담

IoT 스마트팜
 스마트팜 운영재료
 공급 및 관리

- ◎ ICT화상플랫폼을 이용한 여가-건강 프로그램 제공
 -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 실버로빅, 건강체조, 웃음치료, 의료복지 등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주 5일 제공**
 - ICT 양방향 화상플랫폼 활용한 45개소 동시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 ◎ IoT헬스케어 건강수치 측정 및 경로당 주치의 건강상담
 - 내 집 앞 경로당에서 **필수 건강데이터**(혈압, 혈당, 체성분, 체온) **측정**
 - 측정된 수치 이력을 근거로 작은보건소(100세 건강실) 연계 건강상담
 - 시음성인식 치매 1차선별 검사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치매 등 **판별**
- ◎ IoT스마트팜 원예치료 및 먹거리 나눔
 - IoT 실내스마트팜에서 빛·바람·물 자동 공급, 온도와 조명 원격관리
 - 수확한 채소는 경로당 공동체 밥상(점심) 활용
 - 식물 재배 등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 심리·정서적 안정 기여
- ◎ 스마트로(路) 운영으로 어르신 생활맞춤형 교육
 - 경찰서 등과 **협업**해 범죄예방·보이스피싱·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 및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 ◎ ‘부영이 예술단’의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트로트, 민요, 클래식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경로당 방문 공연 및 스마트경로당 화상 공연 병행

3 추진성과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여가-건강-소통의 디지털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스마트 복지정책의 대표 성공사례**로 평가

- ◎ (시민 체감형 복지성과 창출) 19만 명의 어르신이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가-건강-소통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
 - 여가-건강-소통이 융합된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하며, 스마트 복지 실현
- ◎ (건강관리 및 만족도 향상) IoT 헬스케어기기를 통한 1,459명, 58,782회(24년 기준) 건강측정 등
활발한 참여로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이용자 만족도 지속 상승(90점→92점)
 -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기주도형 복지모델 정착
- ◎ (전국 확산 및 정책 파급력 입증) 전국 48개 지자체(세종, 수원, 광주 등)에서 벤치마킹 방문, 섬·산간
지역(진도, 봉화, 부안군)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무상 공유(9개소)
 -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전국 표준모델로 정착
- ◎ (협업·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 맞춤형 프로그램 다각화
 - 보건·안전 등 다분야 융합행정 모델 구축으로 체감하는 변화 실현

- ◎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기여)** 스마트경로당 관리자 등 119명('24.~'25.) 일자리 창출, 어르신이 직접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세대 간 교류·사회참여 활성화 실현
 -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
- ◎ **(지속운영 및 확산기반 마련)** ICT·IoT 유지관리 체계 및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로 지속가능한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어르신의 정보문화 격차 해소
 -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복지체계로 고도화

4 향후계획

- ◎ **(기능 고도화) 치매 예방 중심의 스마트경로당으로 확장, 건강·여가·인지훈련 통합형**
복지모델로 발전 ※ '25년 말까지 구축
 - (스마트경로당) 45개소 → **150개소** / (스튜디오) 1개소 → **3개소**

구분	기존(버전 1.0)		개선·확대(버전 2.0)
프로그램	여가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	개선 + 노래방(CT 화상플랫폼 기능 추가)
	건강	건강수치 측정·연계 상담	개선 + 보건소 간호사 경로당 방문 상담
	치매예방	-	신규 AI분석 기반 인지 건강 검사, 맞춤형 인지훈련 프로그램
	디지털교육	-	신규 키오스크, 모바일 교육

- ◎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IoT·클라우드 기반 건강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소 간호사 방문상담 및 의사와 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 ◎ **(전국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전국 확산 모델 정립** 및 외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1 추진배경

- ◎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따른 지방정부 이행 필요성 증대
 - ※ 국정과제 연계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전환 필요
- ◎ 에너지 소비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재생 보급을 확대할 지역 차원의 실행 기반 마련 필요

2 사업개요

- ◎ 추진기간: 2019년 ~ 현재(지속 추진 중)
- ◎ 목적
 - 2050 탄소중립 국가 전략에 따른 지방정부의 선도적 이행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확립
-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전역(신효천마을 등 거점 포함)
- ◎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25, 시비 60, 구비 35, 기타 8)
-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태양광, 태양열 등)
 - 에너지효율 향상(취약계층 개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주민 주도 실천운동(교육, 캠페인, 축제)
 -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구축

3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 ◎ 제도 지방 정비와 행정체계 마련
 - 「에너지 기본조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제정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확립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 주택·상가 1,990개소, 공공시설 138개소에 설비 보급
 - 광주 최초 기축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합의 기반 태양광 설비 설치
(2024년 대촌동 일진스위트포레 105KW)

◎ (전국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 신호천마을 64가구 대상 태양광·태양열 설치, ESS·전기차 충전소 등 공동시설 조성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기반 구축
-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연간 1,300~1,500만원의 공동수익 발생 예상
- 2023년 교육부 C2X 전력직거래 실증사업 선정으로 사업 확장 추진

◎ 에너지 효율화 및 복지 연계

- 취약계층 5,580가구 단열개선, 고효율 조명(LED) 교체로 에너지 사용량 20~40% 절감
- 희망주택 리모델링, 7979 봉사단 활동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문화확산형 실천사업

- 에너지 활동가 양성 및 전 주민 대상 교육·캠페인 전개
- 에너지전환 축제 개최 및 실천 약속 2천여 건 달성
- 에너지전환 거점센터(3개)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거점 확립

◎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AI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캔·페트병 회수),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운영
- 자원순환마을 프로젝트로 투명페트병·우유팩 등 수거

◎ 수상실적

- 2021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
- 2023 제 29회 녹색환경대상(환경부 장관상)
- 광주시 에너지절약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4 기대효과

◎ 에너지자립도시로의 지속 확장

- 지역 내 유휴부지 추가 발굴, 공동체 태양광 확대
- 민간·공공 연계 확대를 통한 실질적 에너지 자립 실현

◎ 주민주도 실천문화 정착

- 활동가 중심의 생활실천 기반 강화, 자발적 참여 문화 확산

◎ 자원순환 인프라와 실천운동으로 녹색도시 조성의 시작

◎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 전국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마을 모델 사례 공유 가능
- 광주형 에너지전환거점센터 모델 전국 확산 잠재력 보유

◎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에너지 복지 병행 → 지속가능도시 전환 기반 마련

10

병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일상 속 돌봄으로 전환하는 “진천형 노인 통합돌봄”

송기섭 충청북도 진천군수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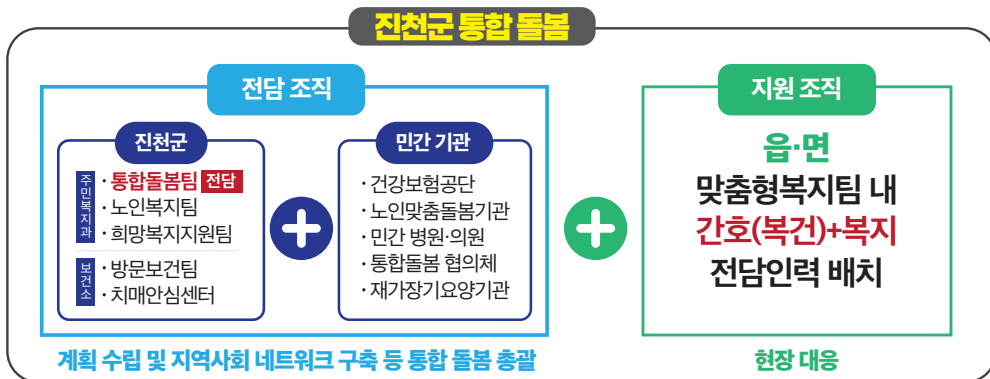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16년만에 고령화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해 의료·돌봄 수요가 동반 상승하였으나,
- ◎ 소규모 가구 비중이 크게 늘며 가정에서 돌봄 역할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개인의 의지에 반해 입원 또는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노인 증가

2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19. 7.~現
- ◎ 사업대상: 퇴원환자,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등 돌봄 필요 인정 대상자
- ◎ 사업비: 130억원(국비51억39%, 광역14억12%, 기초64억49%) ※'19~'25 전체 예산
- ◎ 사업목적: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추진내용: 돌봄 조직 구성,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 연계사업 추진 등

3 주요내용

◎ 조직구성



◎ 신뢰성 높은 대상자 및 서비스 선정



- (평가의 신뢰도) 보건복지부 기준 돌봄 우선순위 대상자인 75세 이상 노인(6,987명) 중 5.3% 표본 조사 *시범지자체 평균 1.8%
- (철저한 사전계획)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월 평균 23.4회 개최 *시범 지자체 평균 3.9회
- (적재 적소의 서비스) 전담조직의 사전계획과 지원조직의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
*(진천군) 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종합 제공 / (시범 지자체) 인당 1.8건

구 분		대상자 (24년신규)	서비스 연계 (누적)					
			소계	보건의료	요양	생활 지원	주거 지원	기타
진천군	대상자(명)	690	2,302	1,242	190	612	244	14
	비율(%)	3.3건/인	100%	54.0%	8.3%	26.6%	10.6%	0.6%
시범사업 평균	비율(%)	1.8건/인	100%	31.7%	20.0%	32.8%	8.4%	7.1%

◎ 방문형 재가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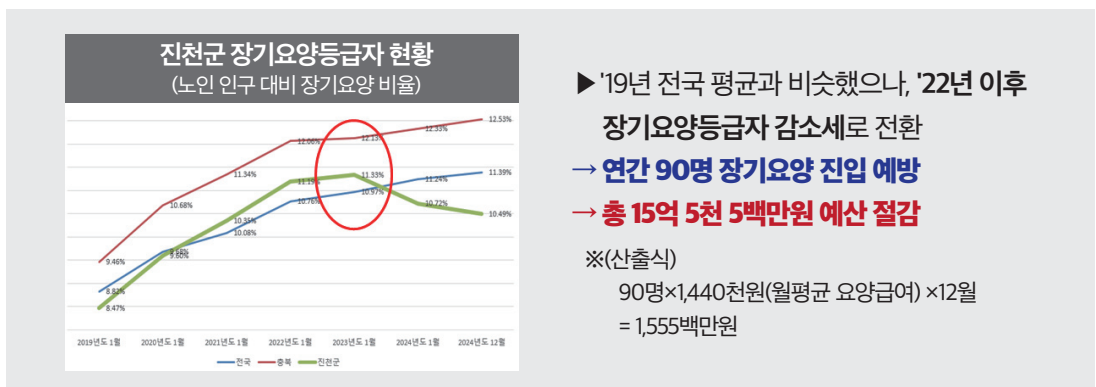
- (전국유일)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진천형 통합간호센터로서 지역 거점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체계 구축 및 방문형 보건의료(진료,간호,재활,영양,약료) 서비스 통합 지원
- (전국유일)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외자까지 포함하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방문진료·간호서비스 지원

◎ 통합돌봄과 연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전국유일) **생거진천 케어팜(carefarm)**: 사회적 농업과 돌봄 서비스를 융합하여 경증치매 노인, 발달 장애인 등에게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12. 2.)
-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마을 주민을 동네복지사로 교육·임명하고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돌봄센터를 조성하여 공동체 돌봄 추진

4 추진성과

◎ 경제와 복지가 상호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돌봄



- '26년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돼 정착, 장기요양등급자 인정비율이 감소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실용주의적 돌봄 실현 가능**
 ※ ('24년 기준) 진천군 장기요양등급자 인정 비율은 **전국보다 4.3% 낮은 74.5%**
- 2023년 이후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전환, 지자체의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책 확대를 위한 신뢰성 입증

◎ **통합돌봄의 이정표**

-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에 특히 **적합한 모델**로,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7년간의 보안을 거쳐 완성되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구 분	대상자 ('24년신규)	종결 사유								
		목표 달성	본인 거부	입원	시설 입소	진출	사망	대상자 부적합	기타	
진천군	대상자(명)	278	186	9	13	11	9	39	3	8
	비율(%)	100%	66.9%	3.2%	4.7%	4.0%	3.2%	14.0%	1.1%	2.9%
시범사업 평균	비율(%)	100%	55.2%	13.5%	5.7%	5.1%	2.5%	9.7%	1.8%	6.5%

- ※ 평균(55.2%) 대비 높은 목표달성 비율(66.9%)과 사망 종결 비율(14%)
- 사업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꼽히던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①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전 '20. 9. 조례를 우선입해 운영 기준을 세우고 ②실전을 거치며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창출

◎ **전국 통합돌봄사업의 모범사례로 정착**

- ('25년) 중앙기관, 언론기관, 지자체에 더해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43회 방문
- ('25. 6. 18. 조선일보) 진천의 통합돌봄을李정부 1호 복지 정책 모범사례로 선정해 집중 조명, 단독 보도
- 세계보건기구(WHO)는 '15년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인복지의 핵심 실천 가치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제시
- ('25. 8. 7. APEC)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진천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발표

진천은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통합돌봄을 실제로 구현한 전국으로 확산할 제도적 기반이자 표본**”으로서
 “**住民이 主人인 땅, 함께 행복한 生居(생거)진천**” 실현

5 향후계획

- ◎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 및 돌봄 조직 확대
- ◎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센터, 서비스형 주택 도입,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체계 구축



모두의 도시, 더 나은 주택「새빛하우스」

이재준 경기도 수원특례시장

1 추진배경

- ◎ 노후주택의 지속적 증가, 낮은 주택성능 및 에너지 효율
-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단 경관 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제고
- ◎ 소규모 집수리 시공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 사업비: 17,400백만원
- ◎ 지원대상: 집수리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주택유형	지원공사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	· 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 ·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1,200만원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 상가주택(지상 4층 이하, 주거공간만 해당)	· 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 ·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500만원	
	※ 단, 현관문을 단열방화문으로 교체 공사 포함 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다세대, 연립주택공용부분	· 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 ·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9세대 이하	1,400만원
		10~14세대	1,700만원
		15세대 이상	2,000만원

※ 집수리 공사 시, 접지공사 및 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별도 지원(전기공사만 단독 신청 불가)

- ◎ 지원금액: 총 공사비의 90% 이내(주택유형별 최대 지원금액 내)
- ◎ 지원내용: 주택성능 개선 공사, 주택성능 개선 전기공사, 재해방지 시설 설치 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 공사

3 주요내용

① 소외된 곳에 희망을 비추는 '새빛하우스'

✓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주택의 집수리 활성화,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

◎ 누적 2,000호 집수리 사업 추진

- 이용자 99.2% 긍정 평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지원

◎ 1개소당 최대1,200만원 지원(공사비의 90% 이내)

※ 취약계층의 경우 100% 지원

◎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상승(4등급 → 2등급)

- 약 1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

② 찾아가고, 들어주고, 바꿉니다, 시민중심 새빛하우스

◎ 찾아가는 새빛하우스 상담소

- 2월부터 3월 14일(새빛하우스 접수 전)까지 매주 수~금, 오후 2~5시에 고색역 1번 출구, 만석공원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새빛하우스 상담소 운영

◎ 찾아가는 컨설팅

- 3월 31일까지 상담소를 찾아오기 어렵거나, 집수리가 너무 막연한 시민들을 위해 사업담당자와 건축사 또는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찾아가는 컨설팅'진행

③ 새빛하우스,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의 선도모델

✓ 타 지자체 노후 주거 환경개선사업과의 차별화 3가지

◎ 집수리 종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수원시 집수리종합정보시스템 새빛하우스(www.suzip.or.kr)운영
- 집수리 관련 제도 안내, 시공업체 정보,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플랫폼 내 제공

◎ 새빛하우스234 홍보관 운영

- 집 수리 전후 모습 비교 공간, 집수리 자재 체험 공간, 집 수리 상담실 등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 및 무료 컨설팅 지원

◎ 시공업체 및 단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수원도시재단)
- 업체정보 확인, 지속적인 관리와 공종별 시공방법·건축법 교육지원, 나아가 업체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시공업체의 역량 강화

4 추진성과

✓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대통령상 / 국토부 주관)

◎ 지원현황(2025년 기준 누적 2,082호 달성 / 2026년 누적 3,000호 예정)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요예산(백만원)	17,400	1,160	4,740	5,800	5,700
지원(호)	3,000	305	791	986	918(예정)

5 기대효과

- ◎ 주거복지 실현과 기본사회 구현
 - 노후주택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 실현**
 - 주거 불평등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의 품격과 안전성 제고**
 - 지역 시공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 및 일자리 창출**
- ◎ 탄소중립 기여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단열·창호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
 - 수원형 에너지 리모델링 모델로 발전 가능
- ◎ 시민 체감형 성과 확산
 - 누적 1,000호 이상 지원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주거복지 향상으로 지역 전반의 삶의 질 개선

6 향후계획

- ◎ 사업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시범사업(23년 305호) → 확대사업(24년 791호) → 25년 목표 1,000호 지원 추진 중
 - 높은 참여와 호응에 따라 26년까지 누적 2,000호 목표를 **3,000호로 상향 조정**
- ◎ 주민 참여형 운영체계 강화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새빛하우스 상담소' 운영으로 **접근성 개선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심사-시공-사후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
-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구축
 - 공사 후 **사후관리(품질점검·만족도조사) 및 성능지표 관리체계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관리체계 마련
 - 에너지 효율개선, 고효율·취약계층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도시 혁신 기반 마련
 - 단순한 주택개선이 아닌 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도시 기반 마련**
 -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 수원” 비전 실현

12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관악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추진배경

- ◎ 관악구는 청년 인구비율 전국 1위(41.4%)의 도시
- ◎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 속에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업 역점 추진
- ◎ 관악구 자체 조사와, 정부의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니즈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 친화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 추진기간: 2025.~2029.(5년)
- ◎ 추진체계: 3대목표, 6대 추진전략, 10개 세부과제
- ◎ 소요예산: 2,500백만 원

3 추진체계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행력 확보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청년전담조직(서울시 자치구 최초 청년정책과(2018.11.), 청년문화국 신설(2022.11.)) 청년친화도시 실행추진단TF (2025.7.) 청년친화도시 협의체(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총 26개 공공·민간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1.11. 개정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3.12. 개정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22.10. 제정	관악구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4.4. 개정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23.2. 제정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4.7. 제정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청년수도 관악' 도시 BI 개발, 모두가 청년처럼 활기찬 도시라는 의미의 청년친화도시 정체성 확립(2024. 4.)
-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 시행(2025. 7.~10.)
 - ▶ (청년 체감도 높은 추진과제 발굴 노력)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 면담 및 청년 참여기구 참여 방안 논의 등 진행

4 분야별 대표사업

① (자립지원) 청년의 첫 꿈 터 관악, 희망찬 미래 설계 지원

◎ (일자리·교육) 청년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문을 제공

- 청년들의 상상이 창업으로 이뤄지는 '관악 S밸리' 조성
 - 서울대와 협력해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미래형 일자리 창출
 - ▶ 창업인프라 18개소 구축, 238개 기업·1,273명 창업가 활동, 창업지원펀드 총 259억원 운용 등
 - ▶ 벤처기업 증가율(18년~24년): 관악구(56.59%), 서울시(28.84%), 전국(4.56%)
- 디지털 신기술 교육 등 4차산업 대비 인재 양성 박차
 - 삼성전자 멘토링,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협력 사업 등 총 7개 사업
 - ▶ (21~25년 기준) 청년 2,344명 참여
-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48개소, 74명 일자리 창출
 - 관내 기업과 미취업 청년 취업 연계, 인건비 80% 지원

◎ (주거·자산) 청년이 마음껏 자산을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지원하는 관악

- (전국최초)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1,700여 명 혜택
 - 7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중개보수의 20~25% 감면 효과 지원
- (서울시 유일) '으뜸관악 청년통장' 총 620명 선정, 구예산 1,691백만 원 지원
 - 최대 3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시, 저축액만큼 근로장려금 최대 1,080만 원 제공

② (문화·복지)청년이 서로 연결되고 회복하는 도시, 일상 속 문화 힐링 네트워크 조성

◎ 전국 최초·최대 청년전용공간 운영으로 활발한 청년네트워크 기반 마련

-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관악청년청'
 -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 전용 공간
-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 2021~2025년 청년 135,060명 지원
 - 서울청년센터 중 멤버십 가입자 최대(5.2만명)
- ◎ 정부 동향에 발맞춘 '쉬었음청년' 예방 및 '사각지대 청년' 재도약 적극 대응
 - 취업 이전 단계의 청년회복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약 22억 8천만 원 유치
 - 구직단념청년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쉬었음청년예방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립·은둔청년 사회 진입 '가상회사(디깡클럽) 체험', 보건복지부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
 -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적극 활용

◎ 청년 트렌드와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여가·일상형 문화교류 정책 활성화

- 관악청년축제: 청년이 기획하는 관악구 대표 청년축제
 - 연1회, 19년부터 총7회, 18,880명 참여

- **그루브인관악**: 청년 스트리트댄스 주제의 댄스배틀 페스티벌
· 참여관객 15,061명, 청년예술문화 확산
- **청년 1인가구 e스포츠대회**: e스포츠(LOL리픽)를 매개로 청년 1인가구 관계망 형성
- **청년 힐링팜**: 텃밭경작, 힐링트레킹, 팜파티 등 자연을 활용한 청년 마음치유

③ (참여권리) 관악 청년이 주도·기획한 서울시 최초 사업 시행

◎ (서울시 최초) 청년 전담 변호사 배치

①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해드림(DREAM)”	②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구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따른 신속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운영, (25.9. 기준 피해구민 112명 상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 청년 법률 접근성 강화를 위해 25년부터 월 2회 청년 전담 변호사 법률 상담 실시, (25.9. 기준 청년 48명 상담)

◎ (서울시 최초)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토요일 확대 운영

- 관악구 거주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운영 총 420명 이용
☞ 총 46종: 간염(A·B·C형), 간기능, 단백, 신장, 통풍, 중성지방, 고지혈, 혈당, HIV, 간암검사 등

5 추진성과

창의성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하위에도, 청년예산 18년 5천만 원 → 25년 236억 원 437배 증가 · 청년정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 ◎ 2025. 상반기 통계청 조사,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고용률 1위(61.6%) ·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입증 ◎ 2024. 7.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문화상 우수도시 선정 · 세계적인 수준의 청년문화정책 역량 인정
창의성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도시추진단 TF 실시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22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 확보 · 청년정책 추진 동력 강화 ◎ 정책 참여 주체로서의 청년 역할 강화, 단순 수혜자에서 정책 파트너로 전환 · (21~25년)청년위원 150명 배출, 공론장 858명 참여, 청년수요정책 36건 제안 24건 반영
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2. 11. 국무조정실 전국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 (25. 4.~10.) 17개 지자체 80여 명 방문·벤치마킹 ◎ 25. 2. 12. 연합뉴스, “관악구, 국내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등 언론보도 5건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강조 가운데 관악구의 선도적인 청년친화도시 프로젝트는 타지자체 확산·전파 가능

6 기대효과

- ◎ 청년친화도시 조성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우수정책 교류로 전국 최고의 청년정책 롤모델 정립
- ◎ 지역청년 맞춤형 정책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로 관악구 청년의 기회 및 삶의 질 확대

7 향후계획

연도	2025(1차)	2026(2차)	2027(3차)	2028(4차)	2029(5차)
추진 사업	청년의 첫 꿈 터, 인재로 활기찬 관악	청년의 든든한 삶 터, 살맛 나는 청년 관악	앵커사업 브랜딩 및 제도적 지원 이후 지속 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아카데미 √ 인재양성 프로젝트 √ 기반강화, 고도화용역 √ 교류홍보 & 힐링팜 √ 거버넌스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아카데미 √ 인재양성 프로젝트 √ 주거안정 프로젝트 √ 교류홍보 & 힐링팜 √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아카데미 √ 교류홍보 사업 √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아카데미 √ 교류홍보 사업 √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아카데미 <p>평가·환류를 통한 글로벌 청년친화도시 도약</p>

13

시민 거버넌스가 만든 마을의 변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작!
주민과 함께 걸어온 길, 주민주권의 청사진 광산구 동미래발전계획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역이 외부 충격을 견디고,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며,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역량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 주민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필요
-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로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 확보

◎ 추진방향

행정주도, 일회성·형식적 참여	→	주민주도, 숙의 기반 다회성 사회적 대화
제한된 권한, 행정-주민 일방적 관계	→	기획, 실행, 예산 자치 전과정 경험,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위기대응시 중앙의존적	→	자치계획으로 빠른 대응, 회복탄력성 확보

2 주요내용

- ◎ 기간: 2024. 1. ~ 지속추진
- ◎ 주체: 21개洞 + 계획수립 주민참여단 + 중간지원조직 + 분야별 전문가 등
- ◎ 추진절차: 참여단구성→토론·학습 등 워크숍→공유·공론장 운영→실행 및 지속적 숙의·보완
- ◎ 추진방식: 주민참여단의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 방식

STEP1	지역 신뢰 기반 거버넌스 구축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민관협력 '동 거버넌스' 구성·운영(동별 20~40여명) • 공동대표·담당자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 구축(총 15회)
STEP2	사회적 대화를 통한 동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회적대화 추진(총 220여회) • 주민이 주민에게, 공유·계획 수립(21개 동 비전, 63개 전략, 153개 사업) • 주민이 직접 선정·발표 및 전문가 심사 통한 예산 확정 ➢ '25 실행사업(32건, 442백만원) 추진 중, '26 핵심사업(35건, 784백만원) 의회 제출 예정 • 현장에 실현중인 2025 실행사업(대표사업 4가지) ➢ 스포츠마케팅(첨단1·2), 마을화페(송정1), 금나와라 뚝딱(수완), 반려문화 조성(신가·수완)
STEP3	자치에서 비롯된 회복의 힘-일상이 된 민주주의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특색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2가지 방법(자율·자조·자발적 마을단위 자치활동) • 지역사회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경제위기, 금호타이어 화재, 폭우) ➢ 상권살리기 캠페인, 소상공인 식당 이용, 수해복구 현장 지원 등 • 마을이 변화가 구 정책으로 확산(첨단2동 "천원상생거리" → 광산구 "천원 더가치 프로젝트")

3 추진성과

◎ 수상실적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지방거버넌스 대상 수상(4개 사업 중 하나)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적자본분야 최우수상
-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지방행정혁신 대상(리부팅시대 반영)

4 기대효과

◎ 마을이 만든 변화가 행정과 정치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동미래발전계획

- 주민이 기획한 일들이 마을에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민주 자치역량 강화**
- 위기의 시대 **치유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진짜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진일보

5 향후계획

◎ 지속적 수정 보완(사회적 대화 지속) 및 '26 핵심사업 추진(7.8억) 통한 주민 실행력 강화

◎ **참여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권한과 예산을 주민에게 나누는 **자치분권 시스템 구축**

14 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봄 함평형 단계별 마을공동체 회복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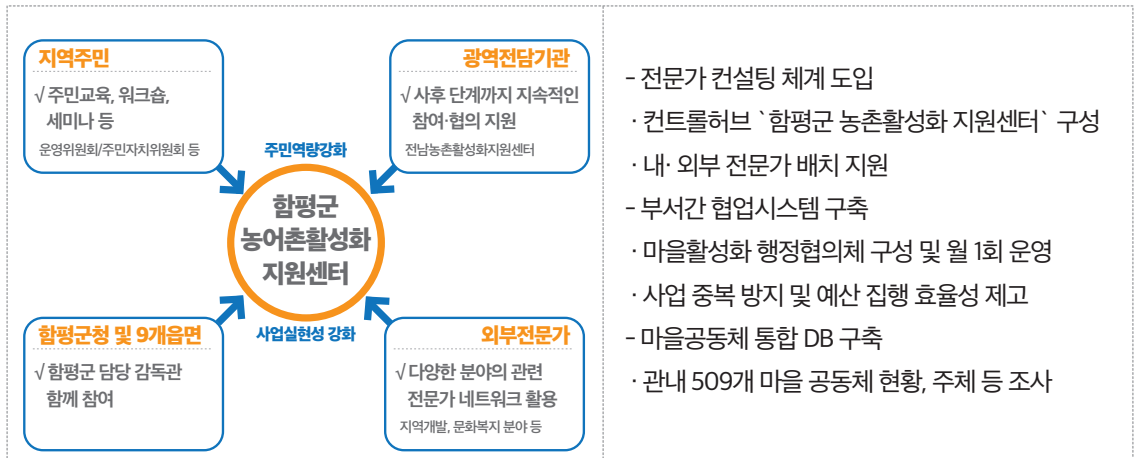
이상익 전라남도 함평군수

1 추진배경

-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력저하 및 붕괴 위기 직면**
 - 3만인구 붕괴[29,514명], 초고령화율 42.7%, 빈집율 15.5%
 - 유입된 귀농·귀촌인도 원주민과의 생활·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 ◎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서별로 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유사 사업의 중복 등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 발생**
 - 일자리공동체팀(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개발팀(마을만들기), 자치협력팀(으뜸마을)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립된 **유휴시설 방치 및 활용을 저조**

2 추진전략

◎ 통합 관리체계 운영



◎ 단계별 성장 체계 구축

- 마을의 성숙도와 역량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매칭**하여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단계	주요내용	매칭사업
씨앗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발굴 및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으뜸마을 지원사업 (마을당 5백만원 × 3년)
새싹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유대감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당 55백만원×1년)
열매	마을 하드웨어 개선(시설·공간정비) 및 공동체 운영 기반 구축	마을만들기 사업 등 (마을당 5억~19억 원)

◎ 주민참여 중심의 실행 구조

- 마을별 자율적 운영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주민이 기획·참여하는 성과발표회와 전시회 개최로 공동체 간 교류 활성화 및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3 주요내용



◎ 준비(기반단계 - 민·관 협력기반 마련)

- 「마을 활성화 행정 협의체」운영으로 민·관 소통·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구축
- ※ 마을활성화행정협의체 구성 및 역할

구성	총무과 (자치행정팀)	농어공동체과 (일자리공동체팀)	농어공동체과 (농촌개발팀)	함평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역할	· 으뜸마을사업 · 마을 활동가 컨설팅 지원	+ · 마을공동체 활동, 행복드림 돌봄지원	+ ·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	+ · 농촌공동체 활성화 통합지원

◎ 씨앗(발아단계 - 공동체 발굴)

- 마을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발굴·형성
- 예) 환경정비를 통한 공동체 활동 가능성 모색, 마을 활동가 양성, 지역자원조사

◎ 새싹(성장단계 - 공동체 활동 활성화)

- 공동체 간 문화·예술 등 생활 중심 교류 활동을 통해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예) 공예품 제작, 지역 특산물 요리개발, 돌봄을 통한 세대통합, 마을 텃밭가꾸기, 약기교실 등

◎ 열매(정착단계 - 자립공동체 육성)

- H/W와 S/W 기반 지원을 통해 공동체 자립 및 지속운영체계 구축
- 예) H/W : 유희공간 개보수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 S/W : 생활속 문화 생활·주민 역량 강화·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공동체 자립 지원

4 추진성과

◎ 체계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 기반 조성

- 씨앗단계에서 시작된 마을이 새싹·열매단계로 성장하며 마을 공동체 복원
- ➔ (씨앗단계) 201개 마을, (새싹단계) 50개 마을, (열매단계) 34개 마을
- 활성화된 마을의 경우 마을 수익사업(생태체험마을, 할머니다방 등) 추진

◎ 행정 효율성 제고

-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유사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유사 사업 중복 해소 및 인적·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달성
- 마을별로 방치되어 온 유희시설(공동체 센터, 문화 공간 등)의 이용율 증가
- ➔ 이용자수 증가 : (' 23) 320명 → (' 24) 1,608명 [500 %증가]
- ➔ 시설물 개방 일수 : (' 23) 26일 → (' 24) 95일 [365 %증가]
- ※ 2개시설 샘플링 자료임(손불면 공동생활홈센터, 대동면 휴센터)

◎ 주민 자발적 참여 확대

-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이 생활환경 개선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
- 주민이 기획·참여하는 전시·공연과 공동체 축제의 장 개최로 소비자가 아닌 창작자로 참여하며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 대외성과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 (' 22) 최우수상 → (' 24) 대상 [상사업비 1억원]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 (' 22) 은상 → (' 23) 우수상·최우수상 → (' 24) 농어촌공사장상
-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 (' 23) 우수상, (' 24) 장려상

5 정책적 의미 및 기대효과

◎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행정 일원화

- 함평군형 마을공동체 통합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제고

◎ 공동체의 단계적 성장 모델 제시

-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이 스스로 성장·확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 유희시설 재활용과 지역자원 선순환

- 기 확보된 시설물의 활용률을 높여 '공간의 회복'을 넘어 '관계의 회복'으로 확장

15

전지적 농민 시점 고창형 농촌살리기 프로젝트!

심덕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

1 추진배경

- ◎ 고창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인구 비율이 높고 농가의 62%가 65세 이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
- ◎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원예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로 농촌인력 수요공급 불균형 및 **인건비 폭등**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
- ◎ 또한, 반복되는 농업재해와 농산물 수요공급 불일치로 발생하는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 보호 방안**과 고창농업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향상 대책** 필요

2 지역여건

- ◎ **산업구조**
 - 농림어업 24.1% 건설업 10.9% 제조업 9.7% 기타 55.3%
 - 지역내총생산(GRDP) 전북자치도 군부 중 2위
 - **농업인구는 감소추세**지만, 가공 및 유통 증가 등으로 **농업생산력은 증가추세**
- ◎ **농업여건**
 - 행정구역 전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 ‘해풍+붉은황토, ‘농사짓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명품 농산물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고창수박(10년연속), 고창멜론(6년연속), 청보리밭축제(4년연속)
 - 명품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 고창복분자주(‘04), 고창복분자(‘07), 고창수박(‘24.9.)
 - 넓은 평야와 완만한 저구릉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원예작물 생산량 증가
- ◎ **인구**
 - 2023년 말 기준 인구 51,750명 * 전년대비 588명 감소(▼)
 - **65세 이상 인구비중 31.7% (도내 3번째)**
 - 2023년 말 기준 농가인구는 15,370명 * 전년대비 458명 감소(▼) * 최근 3년간 18% 감소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61.6%**
 -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40년 농가인구는 20년 대비 30% 감소 전망

3 추진성과1

□ STEP1. 전지적 농민 시점! 농촌인력문제 창의적 해결

① 전국최초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제시 및 인건비 안정

◎ 추진배경

- 지역소멸위험지역'고창, 극심한 농촌 일자리 가뭄에 **농작업 인건비 폭등**
 - 2023년 말 기준 인구 51,750명 * 전년대비 588명 ↓ 최근 5년간 9.3% ↓
 - 농가인구의 61.6%가 65세이상 고령농가이며, 농가인구 최근 3년간 18% 감소

◎ 주요성과

- 전국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제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평균 인건비 하락('21년~'23년 : 남자 14만원, 여자 13만원 → '25년 : 남자 11만원, 여자 10만원)
 - * 가이드라인 준수 시 농업분야 사업선정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반 마련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최대 공급!

◎ 추진배경

-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제시와 연계한 '실질적인' 인력 총원 방안 필요
- 검증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각종 사회문제 발생
- 농민의 인력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한 목소리 증가
 - 2022년 계절근로자 최대 이탈(281명 중 241명 / 이탈률 85%)

◎ 주요성과

- 계절근로자 전국 최대 공급
 - '23년 600명 → '24년 1,800명 → '25년 3,000명(전국최대)
- 원스톱 행정 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장
 - 농가 맞춤형 인력 컨설팅, 외국인 등록대행 서비스, 맞춤형 원콜(근로자 수송서비스) 지원
 - 무료 건강검진,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 희년의료공제 가입, 헌 옷 기부행사 등
 - 계절근로자 안정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으로 무단이탈률 대폭 감소('22년 85% → '25년 0.2%)

③ 전국최초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추진배경

- 고창군 계절근로자 사상 최대 공급에 따른 근로자 거처 문제 발생
 - 대부분 계약농가에서 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가 사정 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에 제약

◎ 주요성과

- 전국최초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흉물 폐건물 활용 경관 개선 우수사례, 외국인 근로자 편의기능(취사,세탁 등)제공
- 전국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설립
 - 계절근로자 전문관 채용·육성(6명/임기제 등), 1일 2농가 방문제도 도입, 근로자 보듬이 서비스,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365 통역제도, 고충해결 등

4 추진성과2

□ STEP2. 농업인 실질소득 UP, 부가가치 UP, 양질의 일자리 공급↑

① 전액군비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 추진배경

- 기후변화, 품목 집중현상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촌경제를 지탱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사업내용

- 조 성 액 : 30억원(27년까지) / 대상품목 : 7개품목(무, 고구마, 수박, 고추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 지원

◎ 주요성과

- 민선8기 핵심공약,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기금 '전액 군비'로 지원
- 제값받는 농산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농산물 유통 촉진 및 영농의욕 고취
- 가을무, 고구마, 건고추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지원금 지급(31농가 155백만원)

② 공약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완화

◎ 추진배경

-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필요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495억원 / 농가 부담률 : 20→10%, 군 부담률 : 15→25%
- 대상품목 : 벼, 고추, 수박, 복분자 등 70개 품목

◎ 주요성과

- 농작물 재해보험 2년간('24.~'25.) 5,600건 270억원 지급으로 농업인 실질혜택 제공
- 전북자치도 군단위 최초 농업재해 복구지원 조례 제정 및 복구비 지원
- 국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24.~'25. 749농가 240백만원)

③ 군 직접 시행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 추진배경

- 향토토양을 가진 고창은 김치원료(무, 배추, 고추 등)의 최대생산지이지만, 가공을 거치지 않고, 1차 농산물 그대로 판매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320억원 / 저온저장 및 절임가공시설, 절임염수재활용시설 구축

◎ 주요성과

- 최근 소비트렌드는 완제품 구매 형태로, 생산·가공·유통까지 한번에 가능한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실질소득 향상 기여
-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행정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고창군 김치특화지구가 전북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선정('25.6. / 50억원 지원)

④ 농산물 명품 보증 수표, 고창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3관왕!

◎ 추진배경

- 고창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우수 농산물이 시장가격 경쟁 속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주요성과

- 고창군이 직접 나서 농산물의 명품인증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고창복분자주(2004), 고창복분자(2007)에 이어 2024년에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지리적표시제 3관왕 달성!
-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힘입어 '25년 고창 수박의 도매시세 전년 대비 10% 상승 및 '25년 약80억원 규모 경제효과 발생

16 일상에 녹색을, 구민에게 힘을 녹색정원도시 금천

유성훈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추진배경

- ◎ 금천구는 국가산단 G밸리와 저층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 타 지역 대비 공원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18년 1인당 공원면적 1.60㎡, 서울시 자치구 25위)
- ◎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권리 보장**의 기본사회 기틀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도약

2 사업개요



3 주요내용

□ 일상을 그린(Green), 생활권 공원

- ◎ 화합·상생의 숲길 '생태문화 탐방길'(시흥동 산24-15일대/0.8km)
 - 시흥중학교와 시흥계곡을 이어 단절된 지형보완 및 일상 산책로 조성
 - 사유지 무상사용과 학교부지 사용 협조 노력으로 가용 녹지 확보
- ◎ 안양천 '장미원'(독산보도교~기아대교/2km)
 - 2019년 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수변꽃길 조성(68종, 15,1724주 장미 식재)
 - 형형색색 장미 만개로 수변경관 조성 및 금천구 안양천 브랜드화에 기여
- ◎ 공원 소외지역 해소 '가산동 생활권공원'(가산동 144-2번지 외/903.5㎡)
 - 가산동 내 가산생활문화센터 철거부지와 인근 부지 토지 매입을 통해 특화 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지역별 녹지환경 불균형 해소
- ◎ 일상 속 힐링공간 '다채로운 공원·정원·숲길'
 - (문화공원) 금나래중앙공원 및 금빛공원의 문화체험형 오픈공간으로 개선
 - (동네정원) 금천구청역 광장 배웅과 마중, 독산3동 안개정원 등 지역곳곳 11개소에 각각 주제와 특색있는 매력을 지닌 소규모정원 확충
 - (호암숲길) 서울둘레길 12코스, 호암늘솔길 등 호암산 일대 숲길(8.9km) 조성

□ 금천을 그린(Green), 남서울 특화 공원

- ◎ 초대형 산림문화휴양시설 '남서울 희망의 숲'(시흥동 산6-7일대/300,000㎡)
 - 사유지(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 약 74,506평 규모 대형 토지의 무상 사용계약 성사
 - 숲속 야영장 등 남서울 대표 초대형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추진중
- ◎ 다섯가지 테마정원 '오미생태공원'(시흥동 산77-1/20,000㎡)
 - 5개 주제(꽃·물·흙·사람·숲) 테마정원과 백인백향기원 등 지역특화 생태공원 조성
 - 훼손된 유휴지를 주민 휴식·여가 기능이 조화된 복합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 ◎ 산업단지의 녹색화 'G밸리 가든팩토리'(G밸리 일대/187,364㎡)
 - 지식산업센터 공개공지와 가로수를 활용한 녹지축 및 열린쉼터 조성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린산단' 이미지로 전환(산자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연계)
- ◎ 시흥대로 랜드마크 '금천폭포공원'(시흥동 937-2/4,835㎡)
 - 인공폭포 재조성, 장미정원, 칼바위 등 지역특성을 담은 이색 공원으로 새단장
 - 재활용 지하수로 폭포수를 사용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체험형 공원으로 명소화
- ◎ 금천의 관광명소화 '금천체육공원'(독산동 산118-4/103,306.8㎡)
 - 하늘다리 및 무장애숲길과 연계한 파노라믹 전망대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 약자를 그린(Green), 모두의 공원

- ◎ 금천체육공원 '무장애숲길'
 - 무장애 숲길과 감로천 별빛다리, 전망대까지(총 2.18km)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 완성(폭 2m 이상, 경사도 8.3%)으로 보행약자의 공원이용 생활권 강화
- ◎ '호암늘솔길' 산책로
 - 서울둘레길 관악산 인근 산책길 및 삼각공원 내 무장애 데크 산책로 (0.41km) 조성으로 경사로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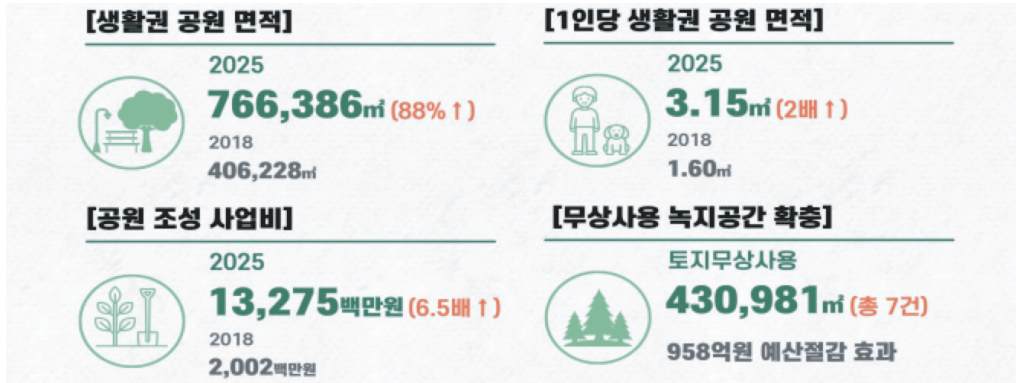
□ 환경을 그린(Green), 기후대응 공원

- ◎ 수도권 최초 '기후변화 안심공원'(시흥동 산138-3/8,412㎡)
 - 기존 산기슭공원을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대응형 설계를 도입하여 바람, 태양열, 숲 등을 활용한 이상기후 대비 안심공원 조성중
- ◎ 안양천 '기후대응 도시숲'(G밸리 일대, 안양천 한내교, 철도변/4.8ha)
 -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수종(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등 1,469주)을 식재하여 초미세먼지 차단 및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전

□ 참여를 그린(Green), 녹색 공동체

- ◎ 숲·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해설, 도시농업 등 다양한 공동체 참여형 콘텐츠 운영
- ◎ 공원시설 연계 교육문화 프로그램
 - 금천정원지원센터 정원치유, 가드닝 등 공원의 복합문화 기능 강화 및 일상 속에서 지역을 함께 가꾸는 공동체 녹색환경 활동 증대

4 추진성과



- `25년 현재 `18년 대비 생활권 공원면적 88% 상승, 1인당 공원면적 2배 상승
- 430,981㎡ 토지무상사용 성과로 가용 녹지공간 확충과 958억원 예산 절감
- 오미생태공원, 남서울희망의숲 등 금천형 특화공원 브랜딩 지속 추진중
- 수도권 최초 기후변화 안심공원 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 기여
- 무장애숲길(8개소), 어린이공원(21개소) 등 도심 약자 배려형 공원 조성 선도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일상 속 공원 확충으로, 생활권 체감 공원면적 서울시 중위권 도약
- ◎ 거점 특화공원 브랜딩으로, 금천만의 문화감성힐링 랜드마크 완성
- ◎ 수도권 최초 기후위기 대응 공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녹색도시 정체성 확립
- ◎ 모두가 즐기는 공원으로, 누구나 친환경 생활을 향유하는 기본사회 실현
- ◎ 참여형 공원 프로그램 확대로, 녹색환경 공감대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17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후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사업개요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에 자리잡은 수락 휴는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라는 조성 철학에 따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눈길이 닿는 모든 공간에 자연적 요소를 담아 설계하였으며, 힐링형 숙박과 체험을 결합하여 자연 속 휴식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심형 산림복지 모델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사업기간 : 2018. 8. ~ 2025. 7.
- ◎ 사업목적
 -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을 설치하여 산림문화의 관광자원화 선도
 -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심근린형 관광·생활문화 콘텐츠 육성
-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총사업비 : 23,177백만원
 - 국비4,300, 광역3,300, 기초11,037, 특교금 4,000, 특교세 500

2 주요내용

- ◎ 조성철학 :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 숲과 도시를 연결하는 산림복지 거점 조성
 - 단순 숙박 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치유·휴식 공간 제공
-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5-28 일대
- ◎ 사업규모 : 9,800㎡(건축면적 1,466.62㎡)
- ◎ 시설구성
 - 주요시설 : 18개 동 25객실 (트리하우스 3동, 장애인실 1동 포함)
 - 부대시설 : 레스토랑, 카페, 방문자센터, 무장애숲길, 계곡피크닉장 등
- ◎ 사업특성
 - 높은 접근성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
 - 자연 속 호텔식 숙박 시설 조성
 - 산지 직송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 제공

3 추진성과

◎ 도심 속 녹지 공간을 고품질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호텔급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속 휴양 및 치유 공간 제공
- 공공이 주도하는 휴양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오감을 만족시키는 힐링형 숙박 및 체험공간 제공

- '디지털 디톡스'와 '아날로그'를 테마로 TV 대신 LP 플레이어를 배치하고 도서·보드게임 대여 등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대형 불멍존 설치, 유아숲 체험원, 산림치유센터 등 복합체험시설과 국궁체험, 숲해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가족 단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 지역과 함께 만드는 휴양 공간

- 조성 공사 중 배출한 폐목재를 지역 작가와 협업하여 자연조형물로 재탄생시켜 휴양림 곳곳에 배치
- '노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릉동 '바네하임' 수제맥주를 레스토랑에 입점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
- 마을정원사 관리구역으로 자연휴양림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시민 참여 유도

4 기대효과

◎ 도심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서비스 향상

- 예약이 평균 5분 내 마감될 정도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 제고
- 도심형 자연휴양림 확산 모델로 관악산 자연휴양림 등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공 사례 및 운영 노하우 확보

◎ 공공성 중심의 산림복지 실현

-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 및 편의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무장애 숲길 및 장애인 객실을 조성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산림복지 모델 구축
-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시행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

◎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카페·레스토랑·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시설과 국궁·택견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 기대
- 지역 축제·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5 향후계획

- ◎ 연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락산 힐링타운 완성
 - ‘유아숲체험원(25년 10월)’ 및 ‘산림치유센터(27년 11월)’등 산림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락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고도화
 - 관내 4대 권역별 힐링타운(불암·영축·초안·수락)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원형 산림복지 네트워크 구축
- ◎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 계절별, 연령별 등 맞춤형 산림치유·마음건강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학교·기관과 협력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 ◎ 지역 상생 및 문화·관광 연계 강화
 - 인근 산림자원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 노원구 주요 문화축제와 연계한 산림문화, 힐링형 콘텐츠 개발
 - 축제 연계 숙박·체험 패키지 기획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 ◎ 노원형 산림복지 모델로서의 브랜드 확립
 - 도심 속 대표 힐링 거점으로 확장하여 서울 동북권 대표 산림휴양브랜드로 육성

1 추진배경

-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안전취약계층 증가에 대응하여 선제적·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 필요성 대두
- ◎ 산림·농촌지역 특성상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해소
-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안전관리를 넘어 주민 참여형 상향식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망 구축
- ◎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달성을 통한 '안심 진안' 브랜드 구축

2 주요내용

- ◎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체계 구축
 - 전북 농촌지역 최초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 11개 읍·면 대상, 361개소, 710대 설치
 - 방범·어린이보호·산불·재난·시설관리 등 목적별 CCTV 통합관제
 - 경찰관 1명, 관제요원 12명, 운영관리요원 2명 등 15명 2교대(4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상황 조기 감지 등 신속 대응체계 가동
 - 성과: 범죄율 감소 및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1등급 달성(2024년)
- ◎ 주민 주도형 안전망 구축 - 민관협력 거버넌스
 - 8개 읍면별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 (면별 단장 중심 주민 참여형 조직)
 -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 안전관리 인력 30여명 활동
 -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정례화 (진안고원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정책 수립 및 실행 단계 주민 참여 보장
 - 특징: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내 마을 안전 지킴이' 모델
- ◎ 선제적 위험요인 제거 - 집중안전점검 체계 구축
 - 연 2회(상·하반기)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99개소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
 - 부단체장 주관 민관합동 현장점검 추진 (진안소방서, 자율방재단 합동)
 - 계절별 특화점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 겨울철 화재·폭설 대비 점검
 -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 맞춤형 점검 실시
- ◎ 농산촌 초기대응체계 구축 - 산불 골든타임 확보
 - 전북 최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추진
 - 1차년도 20개 마을 설치 완료, 향후 연차별 확대 계획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주민이 직접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 배치
- 마을 이장, 의용소방대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 **감염병 대응 예방시스템 강화**

- 경로당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50회 이상)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전 가구 배부 (농촌지역 특화)
- 친환경 연무 소독 장비 운영 및 취약지역 정기 방역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감염병 관리 서비스 제공

◎ **생명존중문화 확산 - 자살예방 종합대책**

- 고령·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 마을 단위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 주민 밀착형 상담·돌봄 서비스 제공 → 생명존중 안심마을 신규 조성

3 추진성과

- ◎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안전지수 평가’ 3개 분야 1등급 달성
 -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최고등급 획득
 - * 농촌 소규모 지자체 중 전국 최상위권 안전지수 기록
 - * 등급별 평가: 1등급(안전)일수록 우수, 5등급(매우 위험)으로 구분
- ◎ 행정안전부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
-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우수기관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유일 3관왕 달성
→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종합 3위 달성’

* 문화·공동체(1위), 환경·안전 (2위), 보건·복지(11위)

◎ **정량적 성과 지표**

- 범죄 발생률: **전국 최저** 수준(지속적인 전국 최상위권 안전도 유지)
- 자살률: 전국 평균(27.3명) 대비 **18%(5.2명) 낮은 수준 유지**
- 감염병 발생: 조기 방역으로 **확산 차단을 95% 이상 차단**
- 재난 대응 시간: **평균 15분 이내** 초동조치 완료 (통합관제 연계)

◎ **CCTV 통합관제 운영 성과(통신관제 확인)**

- 범죄 예방 및 검거 지원: 연평균 120건 이상
- 실종자·치매노인 조기 발견: 연평균 15건
- 화재·재난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연평균 30건
- 주민 체감 안전도 95% 이상 (자체 설문조사)

4 기대효과

- ◎ 주민 체감형 안전복지 실현
 - 24시간 CCTV 통합관제로 주민이 **‘항상 보호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
- ◎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
 - 전국 농촌지역 226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제시
- ◎ 농산촌 특화 안전대책의 혁신성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산불 초기 진화의 게임 체인저**
-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로의 진화
 - AI 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 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5 향후계획

- ◎ 스마트 안전도시 고도화
 - 드론 연계 재난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IoT 센서 기반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광역 협력체계 강화
 - 인접 지자체 간 CCTV 통합관제센터 상호 연계 협약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통합 재난대응 훈련 주관
- ◎ 국가 정책 확산 선도
 - ‘대한민국 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 추진 (WHO 인증)
 - 인구감소지역 안전관리 컨퍼런스 개최

19 Aging in Guro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치매통합돌봄

장인홍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추진배경

-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공백 심화
 - 구로구 고령화율(21.1%), 전국(20.0%)·서울(19.4%)보다 높음 [2024.12. 기준]
 - 구로구 추정 치매환자수: 4,634명(17년) → 7,702명(24년) 66% 증가
- ◎ 거동불편 치매 고위험군의 검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미검진자의 사유 중 1위는 거동불편, 보호자 부재(2,221명 중 500명, 23%)
 - 교통약자의 61%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움
- ◎ 매년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 실종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 구로구 실종 신고 611건 중 치매환자 225건(37%/2024년), 전국(31%)에 비해 높은 수치
 - 야간 치매 실종 빈도 높고,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24시간 내 대응 체계 확립 필요
- ◎ 시설 인프라보다 내 집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원하는 시니어 라이프(Aging In Place)

⇒ 치매 검진 이동 지원(기억동행 이동카) + 치매 실종 대응(G브로 프로젝트) 결합
‘전주기 치매통합관리 모델’구축 필요

2 주요내용

비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도시 구로		
총괄 목표	조기발견부터 실종 예방까지,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추진 전략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 치매 조기발견·돌봄 연계 강화	치매 실종 예방 위한 지역사회 보호 대응체계 구축	야간 치매 실종 예방으로 24시간 대응 체계 완성
추진 사업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 치매 검진·진료「기억 동행 이동카」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G브로 프로젝트」	야간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G브로 수호대」
세부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 치매 예방·관리 협력 체계 구축 •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 기억 동행 이동카 서비스 제공 •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치매 관리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통합 솔루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치매 실종 대응 「G브로 수호대」 발대식 개최 •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야간 모의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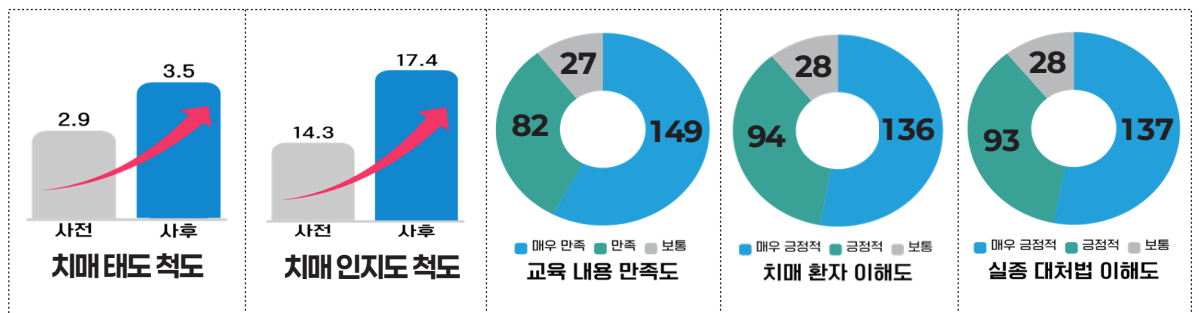
3 추진성과 (사업실적)

◎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 치매검진·진료 「기억 동행 이동카」

- 서울시 최초 '치매 통합 이동지원 서비스'로 사각지대 조기발견률 대폭 향상
 - 치매 고위험군 중 102명 진단 성과 : 치매 36명, 경도인지장애 66명
 - 기존 조기검진 사업과의 치매진단률 비교 : (전) 3.4% → (후) 15.1%
- 문 앞에서 병원까지! 교통약자 동행지원(281건) **의료 접근성 강화**
 - 치매 상담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 '간호사 동행+이동지원'
 - 이동 대상자 중 95%는 75세 이상, 92%는 독거·고령 부부로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실질적 의료 접근 장벽 해소
- 집중 설득콜과 단계별 안내로 **미수검·고위험군 검진 참여율 확연히 향상**
 - 미검진 치매 고위험군 4,189명 전수 전화 및 문자 상담 진행(진단검사 예약률 11.2%→12% 향상), 외부 치매 진단자 55명 발견 및 등록
 - 치매 검사 거부 고위험군(1,031명) 142명(13.7%) 집중관리로 진단검사 완료
- **사후 관리 이행을 획기적 향상(70%→95%)**으로 치매 예방 및 중증화 지연
 - 전담 간호사 1:1관리(약물, 생활, 건강상태), 인지·운동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사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심주치의 등) 연계로 사후 관리체계 강화

◎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G브로 프로젝트」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지역주민(자율방범대·학교·시장), 경찰서 간 **신속한 대응 협력 체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서울시 최초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진행
 - 지역 밀착형 실종 안전망 구축 위한 실종 예방 지킴이 양성
-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인식 향상 확인



◎ 야간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G브로 수호대」

- 자율방범대 및 봉사단과 협력한 「G브로 수호대」로 야간 치매 실종 체계 구축
 - 치매 야간 실종 대응 지역 안전망 공식 출범 선언
 - 전국 최초 야간 실종 대응 모의훈련 진행으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4 추진성과 (수상실적)

- [2025]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 우수프로그램(치매실종 G보로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주최: 보건복지부)
 - '2025 치매극복 유공자' 구로구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표창
 - '2025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 구로구 치매극복 봉사단 보건복지부장관상
- [2025] '제24회 보건간호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주최: 대한간호협회)
- [2024] 2024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부문 '대상' (주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 [2024]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주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5 기대효과

- ◎ 검진 사각지대 해소로 치매 조기 진단률 향상 및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실종 안전망 정착 및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으로 확산 기대
- ◎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도 향상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20

청년이 빛나는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

정헌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1 사업개요

- ◎ 개청일: 2022. 12. 10.
-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22-202
-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2,911㎡)
- ◎ 주요시설: 청년민원실(카페, 오락실 등), 취·창업 지원 공간, 창업보육실(16실), 공유오피스, 미디어실, 홀로그램 쇼룸 등
- ◎ 주요역할: 청년 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이자 커뮤니티 플랫폼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익산청년시청>



2 주요내용

- ◎ 청년정책 한방에!: 청년 맞춤형 종합행정 원스톱 추진
 - 종합행정: 1층 로비 청년인턴 배치 청년정책 정보제공 안내·상담
 - 각종 청년 지원사업 상담에서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놀터! 삶터! 희망터! :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제공

- 복합문화공간 : 청년예술가들의 작품(미술, 사진) 전시회,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등 청년시청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 휴식 공간 : 자유로운 소통공간(북카페), 오락실 등 멀티 공간 제공

3 추진성과

- ◎ **연간 이용객** : 연간 2만명 이상(2023년 21,755명, 2024년 23,772명)이 청년민원실, 문화공간, 창업보육실 등을 이용
- ◎ **견학 및 홍보** :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견학(2023년 14회/233명, 2024년 24회/389명)이 활발하며, 다양한 박람회 및 행사를 통해 청년시청 및 정책 홍보 진행
- ◎ **청년문화프로그램** : 청년 수요를 반영한 장·단기 문화 강좌 운영
 - 2023년 69개 강좌/644명, 2024년 61개 강좌/612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2023년 75명 수료/17명 취업, 2024년 145명 수료/41명 취업
-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무원 면접 대비반, 토익 특강, 챗GPT 교육 등 청년이 희망하는 취업 프로그램 제공
 - 2023년 15개 강좌/439명, 2024년 16개 강좌/310명

◎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역량 강화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활동비 제공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325명	320명	320명
청년 면접정장 지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접을 위한 의류 일체 지원 (1인당 연3회 면접정장 무료 대여)	270명	223명	44명

◎ 근로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중소중견 기업 재직 청년 소득 보전 (월 30만원 3년간 지원)	501명	500명	500명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월 30만원 1년간 포인트)	480명	479명	524명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의 든든한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원 2년간 동일금액 매칭)	30명	150명	200명

◎ **매월 다방면의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 구직자와 기업 간 현장면접을 통한 기업 구인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제공
- 개최 실적 : 24회(참여기업 300개사, 참여구직자 3,907명, 취업연계 371명)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 창업공간 입주 제공**

-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우수한 청년창업가 지역 유입
 - 익산청년시청 내 16실 운영(3인실 3개, 2인실 4개, 1인실 9개)
- 2025년까지 익산시 내 약 70실이 조성 완료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 예정

4 기대효과

◎ **지역 활성화 및 청년 정착 유도**

-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머물며 활동 유도 효과
- 청년 주도의 창업·문화 활동이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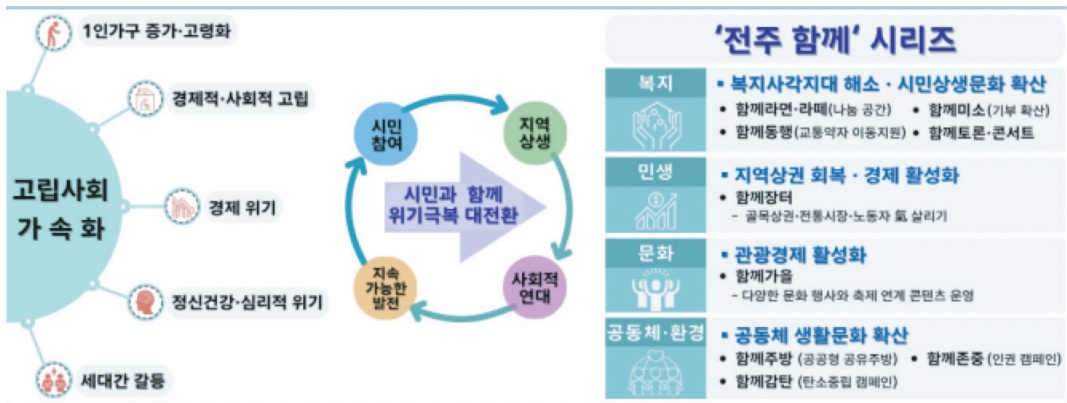
◎ **소통과 창의공간 마련**

-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

5 향후계획

◎ **청년시청 내 청년 지원시설 조성 및 청년 지원정책 지속 추진**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 지속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한 자발적 고립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심화
- 전국적인 내수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저하
→ '수혜자 낙인 없는' 복지 정책, 골목상권 회복, 사회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자와 기여자간 구분없는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시민주도 혁신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2024년 6월 ~ 지속

※ '함께 라면' 시범운영(23. 7 ~ '24. 6.) 후 시정 전 분야 확대 추진('24. 6.~)

[전주 함께 라면]

- (목적) 사회적고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공유공간 조성, 사회관계망 형성
- (내용) '누구나 놓고가고, 누구나 먹고가는' 무인라면 카페 운영
- (예산) 40백만원(고향사랑기금 20, 국 10, 도 6, 시 4) ※ 전주시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

◎ 사업내용

- 고립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시정 전 분야(복지·경제·문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위기극복 및 사회 문제 해결

2 주요내용

비전	맞춤형 복지와 민생회복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전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속에서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지역상생형 복지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자생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시민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과제	단위과제	세부내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함께라면·라떼 (나눔공간)	· 기부라면 무인쉼터 운영 · 위기가구 휴식 및 대화 공간 조성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연계
	함께힘!피자 (세대상생)	· 시니어클럽 시장형일자리 창출 · 아동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
	함께미소 (米笑)	· 민생소비쿠폰 활용 시민 참여형 기부 확대 · 독거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 민·관 협력모델 구축으로 나눔문화 확산
시민상생 문화 확산	함께토론·콘서트	· 복지사각지대 대응 시민토론회 개최 · 전주 함께 시리즈 나눔콘서트 개최
	함께동행	· 복지관별 특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바우처택시 도입, 전용택시 확대 등)
지역상권·경제 활성화	함께장터 (상권활성)	· 기업·시민·기관 등이 기부와 나눔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 공무원·자생단체·봉사단체 합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 식사 지원으로 비정형 노동자 사기 진작, 지역상권 상생문화 확산
지역상권·경제 활성화	함께장터 (상권활성)	· 기업·시민·기관 등이 기부와 나눔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 공무원·자생단체·봉사단체 합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 식사 지원으로 비정형 노동자 사기 진작, 지역상권 상생문화 확산
문화·축제 연계	함께가을 (전주페스타)	· 청년과 함께, 지구와 함께, 미래와 함께하는 축제시즌 운영 · 페스타 축제 간 통합홍보 및 기념행사로 시너지효과 창출
청년자립 지원	함께성장	·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으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 나눔과 소통으로 상호간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캠프 개최
청년자립 지원	함께주방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방 조성 · 취약계층에게 밀반찬 등 나눔 봉사 운영
	함께존중	· 직장 내 인권 존중 캠페인으로 지속적인 인식개선 도모
탄소중립 확산	함께감탄	·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실시

3 추진성과

◇ '전주 함께' 정책을 통한 시민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기부금품 1,642회 5.2억원 모금/130,954명 수혜)
 ※ 전주시 복지재단 전체 기부금품 22%증가[(24.) 9.9억원 → (25.10.기준) 12.1억원]

- ◎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고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체계 구축**
 - (함께라면/라떼) 8개소 54,421명 이용/6개소 27,415명 이용 ※ 총 957회, 1.7억원 후원
 - ※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5개 지자체 '함께라면' 모델 도입 중(25. 9월 기준)
 - ※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지원 : 164건(안부확인 52, 정서지지 39, 서비스 연계 73)
 - (함께힘!피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8개소) 피자·샌드위치·짬뽕 등 간식 지원
 - (함께미소(米笑)) 후원물품 및 후원금(2억 1,827만원), 수혜대상(13,647명)
 - (함께복지) 복지관별(6개소) 특화프로그램(13개) 개발
 - (함께동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도입(50대), 전용택시 확대(25→30대)

- ◎ **시민·기업·기관·소상공인 참여 유도 및 골목경제 활성화 기여**
 - (함께장터) 총 35회, 1억 3,400만원 기부, 약 5,000명 수혜
 - ※ 자생·봉사단체 장보기(3회/약 200명), 노동자 식사 지원 '함께 브런치', '수요든든' 연계추진
- ◎ **지역 대표 문화예술 축제 통합으로 참여 확대 등 관광경제 활성화**
 - (함께가을) 전주 문화·예술·음식 등 가을 축제(매년 약 30만명 방문) 통합 개최
- ◎ **지역 공동체 생활문화 확산**
 - (함께성장) 청년대상 함성멘토링 8개조(48명) 활동, 함성캠프(70여명),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전북대/1,000여명)
 - (함께주방) 공공형 공유주방 신규 개소(2개소), 공유주방 활용 음식 나눔
 - (함께존중) 찾아가는 존중문화 캠페인 실시(5회 700여명)
 - (함께감탄) 탄소중립 시민 교육 추진 등(총 490회, 22,030명)

4 기대효과

- ◎ 함께하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이 없는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과 **시민상생형 소비체계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및 시정 전 분야 활력 증진**
- ◎ 시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5 향후계획

- ◎ **시민참여 통한 '전주 함께' 시리즈 확대 추진**
 - ※ 기부자(업체·단체·개인 등) 발굴 및 찾아가는 위기가구 발굴 등
- ◎ **복지·경제·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진 함께 잘사는 전주 구현 및 전국 확산**

1 사업개요

- ◎ 사업명: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 ◎ 사업기간: 2024년 ~ 현재
- ◎ 사업비: 총73억 원*(22억 원2024 + 51억 원2025) *반값여행 정산금
- ◎ 사업내용: 강진 관내 여행비용 50%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지원
- 개인 최대 10만 원까지, 팀(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2 추진방향

-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내수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
- ◎ 전국 최초 여행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관광객 재방문, 재소비 유도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 공격적인 여행경비 지원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500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모든 사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구조 구축
- ◎ 관광과 경제를 결합한 반값여행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제 활성화 유도, 관광소비가 2차, 3차 소비로 이어지고 생산 증가 및 고용 창출로 확대되는 승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3 추진경과

-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3. 9.)
- ◎ 반값 강진 관광의 해 활성화 전략 포럼 개최('23. 12.)
- ◎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3. 12.)
- ◎ 전담 운영본부 구성 및 콜센터 운영('24. 1.)
- ◎ 2024년 강진 반값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24. 2.)
- ◎ 군 운영 온라인몰(초록민음 강진) 취급 품목 확대, 품질 및 가격 관리
- ◎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지 인프라 정비
- ◎ 분야별 종사자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참여 분위기 조성
- ◎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추진('24. 2.)
- ◎ 2024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추진('24. 6.)

- ◎ 강진 반값여행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24. 11.)
- ◎ 제2회 반값여행 1번지 강진 포럼 개최('24. 11.)
- ◎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4. 11.)
- ◎ 2025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세부 실행계획 수립('24. 12.)
- ◎ 2025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추진('25. 1.)
- ◎ 2025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시즌2 추진('25. 7.)

4 추진성과

◎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

- 관광객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 내 소비 촉진
- 단순 관광지 방문을 넘어 소비 생활권역으로 확장 및 관광객(방문인구) 체류시간 증가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 기여

관광객 및 방문인구 지표

- 2024년 **관광객 282만 명** (+43만 명, '23 대비), **방문인구 709만 명** (+74만 명, '23 대비)
- 2024년 강진군 일평균 방문인구수 1만9천명으로 강진군 인구(3만2천명) 대비 약 1/2의 방문객이 유입 *강진군 일평균 생활인구 5만명 이상
- ☞ 출처: 강진군 관광객 통계, 이동통신사 skt

◎ 반값여행 정산금(모바일 지역화폐) 사용구조와 업종별 파급효과

- 반값여행 정산금(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관광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1차 산업부터 자영업·서비스업까지 전 업종에 고르게 파급되면서 지역경제 전반 활성화
- **(2024년) 1차산업 32.6% 외식업 28.6% 소매업 28.8% 숙박업 0.6% 서비스업 9.4%**
- 정산금의 32.6%가 1차 산업(농수축임산물 구매 등)에 집중되면서, 그동안 관광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남
- 관광객이 단순히 숙박·외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며 농가 소득 안정에 직접 기여
- **(2025년) 1차산업 19% 외식업 31% 소매업 45% 숙박업 1.5% 서비스업 3.5%**
- 2025년에는 소비 구조가 외식업(31%)과 소매업(45%)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상권 전반의 매출 증가로 이어짐
- 특히 소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전통시장·상점가까지 파급 효과가 확산되었고, 숙박업 비중도 0.6% → 1.5%로 증가하여 강진군이 단순 당일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남
- 반값여행 시행으로 **2024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률이 시행전(2023년) 대비 71% 증가**하고, **가맹점도 1,232업체(2023년)에서 1,602업체(2025년)로 확대**되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정착

◎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한 예산 효율 극대화

-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일정 금액을 선 소비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매칭형 구조로 관광객의 자발적 추가 지출을 유도하여 강진군이 투입한 지원금 이상으로 민간 소비를 확대시킴
 - 또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반드시 지역 내에서 재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농가·숙박·서비스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순환되며 지역 내 소비 승수효과를 극대화
 - 2024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투입 예산(22억)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
 - 총 생산유발효과 약 240억 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약 13배 ROI 달성
 - 총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00억 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약 5배 ROI 달성
- ※ 산출기초: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 산업별 계수 산출
※ 목포대학교 관광학과 심원섭 교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25. 1월)

5 향후계획

◎ 지역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확대

- 반값여행은 강진군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1순위 정책으로 확산
- 방문 벤치마킹 : 경남 하동군, 진주시, 경북 상주시, 전남 해남군, 여주시, 충북 충주시 등 다수 지자체가 현장 체험과 학습을 위해 강진을 직접 방문
- 실제 시행 지자체 : 전남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충남 홍성군 등은 강진군 사례를 토대로 자체 반값여행을 시행 중이며, 충북 충주시는 내년도 도입을 확정
- 현재 경기권·충청권·영남권으로까지 '반값 정책'이 본격 도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전국적으로 변형·적용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강진군에서 출발한 「반값여행」은 중앙정부가 직접 제도화한 국가정책 모델로 성장하였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국비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2024. 12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회복 최우수 시책」 선정(특교세 3억원)
- (2025. 9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반값여행」 언급
- (2025.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반값여행과 지역경제」 발제
- (2026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사업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반값여행)」 시행 확정(인구감소지역 20곳(공모) 시범사업, 국비 65억 원 지원 예정)

23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 자원순환 혁신모델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체계 구축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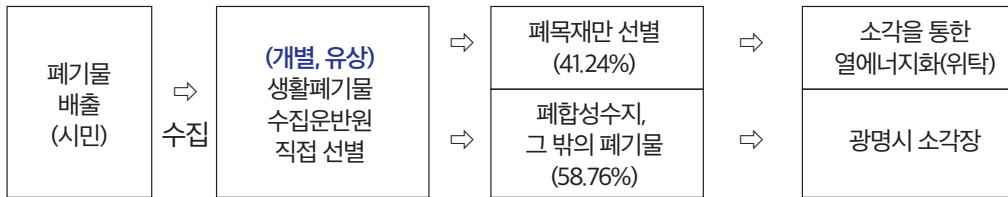
- ◎ 생활폐기물의 소각·매립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원순환 혁신은 곧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임
- ◎ 이에 광명시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 모델로서 '생활폐기물 처리구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함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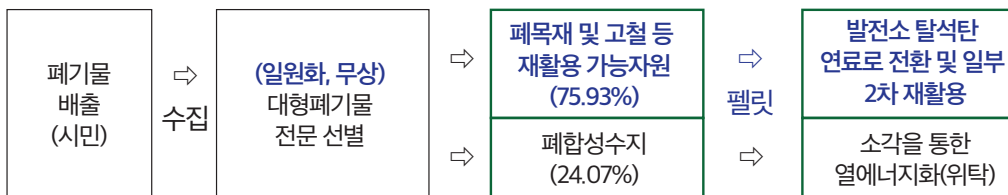
- ◎ 사업기간 : 2024. 1. 1. ~ 현재
- ◎ 사업주체 : 광명시
-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3대 혁신사업 추진**
 -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 및 100% 자원화사업 도입
 -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사업
 - 커피박 무상수거·재활용

3 주요내용

- ◎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 및 100% 자원화사업 도입**
(기준) 2023년: 폐목재 선별 처리에 따른 220,000천원 예산



(개선) 2025년: 처리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및 재활용률 향상



→ 폐기물 처리가 아닌 자원화 및 수익화(연 1천1백만원)로 전환

- ◎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시행
- 폐가전 수거량 및 재활용량 시행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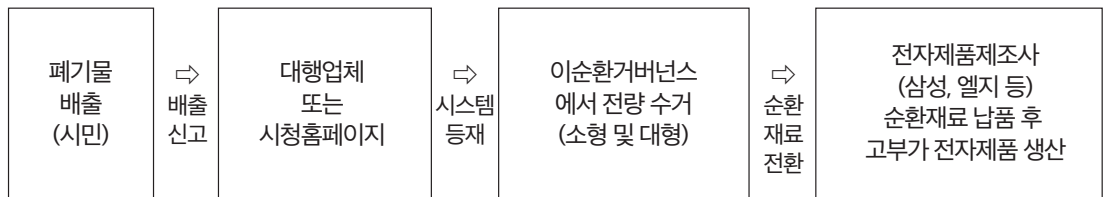
구분	시행전(2023년)	시행 후(2025년)
배출량	102톤	541톤
재활용량	23톤(22.55%)	541톤(100%)

- 폐가전제품 처리구조 개선사항

구분	기존 (이순환거버넌스, 광명시 수거)	개선 (이순환거버넌스로 통합)
적용대상	주택구분 없음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상품목	(소형) 광명시 무상수거(일부 유상) (대형) 이순환거버넌스 무상방문 수거 또는 광명시 유상수거(조례)	소형 및 대형 폐가전제품 통합무상수거 ※ 조례개정 전면 무상화 안료
신청방법	- 이순환거버넌스 : 인터넷 신청 - 광명시 : 전화신청	- 시 홈페이지 또는 대행업체 배출신고 必 ▶ 이순환거버넌스 시스템 연계 등록
수거방법	소형	수거함 자율배출 후 순회 수거 및 동 주민 단지별 수거(월1회) 센터 수거함(상시)
	대형	대행업체 : 외부배출 후 수거 - 이순환거버넌스 : 방문수거 (주 2주 소요)

※ 폐가전 수수료 조례 개정 전면 무상화 → 30년 만에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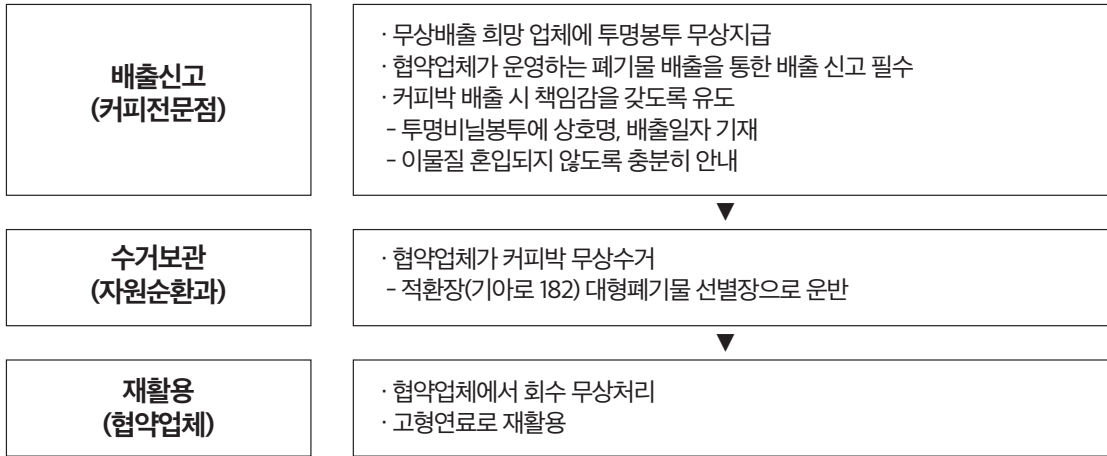
- 폐가전제품 처리구조 개선사항



※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전 지역 100% 참여 달성

◎ 커피박 무상수거·재활용

- 커피전문점 대상 무상 수거·배출 신고 체계 마련
- 2024년 9월 시행 이후 54톤 무상수거, 고품연료·우드칩으로 재활용
- 소상공인 참여 확대, 시민 환경인식 제고



4 추진성과

- ◎ (전국 최초)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사업 및 폐합성수지 자원화로 순환경제 실현(재활용률 100%)
 - 대형폐기물 재활용률 : 2023년 41% → 2025년 100%
 - 2025년부터 선별 후 남은 잔재물(폐합성수지)도 전량 재활용 처리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100% 재활용 달성(온실가스 저감량 3,728톤 저감)**
 - 2년간 공유재산 유상수익 허가를 통한 **2천 2백만원 수익화(처리비 무상)**
 - ※ 순처리비 기준 **소각장 운영비 약 1억 2천만원 예산 절감**
- ◎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제 도입으로 폐가전 재활용률 100% 달성
 - 폐가전 재활용량 급격한 향상 23년 23톤 → 25년 현재 541톤
 - (재활용율 100%), 수집운반 예산 약 1억 5천만원 절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6. 1. 1.)에 따른 표준 수거체계로 확립
 - 대한민국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선 시행, 후 조례개정)
- ◎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재활용으로 생활 속 순환경제 실현
 - 커피전문점 350개소 중 283개소 참여(참여율 81%)
 - 수거된 54톤 커피박 전량 커피박 활용 우드칩으로 재활용처리
 - 커피전문점 대상 무상 수거·배출 신고 체계 마련
 - 소상공인 참여 확대, 시민 환경인식 제고

5 기대효과

- ◎ (기후위기 대응형 순환경제 모델 확립) 생활폐기물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원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실질적 해법 제시
- ◎ (전국 확산 가능성) 폐가전 통합수거, 대형폐기물 선별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즉시 도입 가능한 표준화된 자원순환 시스템
- ◎ (예산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확대에 따른 연간 3억원 예산 절감과 3700여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우수조례

01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김화신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입법 취지

- 전라남도 농어촌·도서지역 등 약국 접근성이 낮아, 도민은 야간·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이 지속됨
- 2022년 제정된 기존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는 지원체계와 운영평가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비 지원, 성과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근거 구체화

-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시간 등 규정

◎ 운영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 도 및 시·군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강화

- 도지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남약사회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성과

◎ 의정활동

- 2024. 11. ~ 2025. 3. 보건복지국 및 지역약국 관계자 면담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선 의견 수렴)
- 2025. 5.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2025.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본회의 의결

◎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2025년 기준)

- 전라남도 내 11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구례(2), 고흥, 보성, 영암, 무안, 신안)에서 1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중임.
- 운영시간: 매일 20시부터 익일 1시 사이 3시간(연중무휴)
- 제공내용: 의약품 구입 및 복약지도 서비스
- 총 사업비: 48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약사 수당: 시간당 4만원, 약국당 연 43.8백만원 지원

- '24년 기준 이용건 수 35,623건, 1일 평균 96건 이용
(일반약 30,707건, 처방약 1,967건, 전화상담 2,949건)

◎ 정책 추진성과

-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에 기여. 2024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운영기준이 명확해졌으며, 2025년부터 중앙정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

4 기대효과

◎ 도민 의료접근성 향상

-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신뢰도 제고

◎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 심야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기관·약국 간 연계 체계를 통해 경증환자 분산 효과 기대

◎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 국비가 포함된 중앙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명확화 됨

5 향후계획

- ◎ 신규 희망 지역(6개소: 목포 1, 여수 1, 영암 1, 무안 2, 신안 1) '26년 추가 지정 검토
- ◎ 시·군별 1개소 이상 지정 목표(총 22개 시군 단계적 확대 추진)
- ◎ 운영관리·홍보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점검

0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김진남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 절실
-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2 주요내용

- ◎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함
- ◎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 홍보사업 추진
 - 피해자 상담·치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 가능

3 추진성과

- ◎ 제정 추진 경과
 - 교육청 내 관련 부서 및 현장 교원·전문가 의견수렴, 관계 법령 검토, 조문 정비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학생인권 보호와 성평등 교육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문 설계
- ◎ 시범사업 추진 및 교육자료 제작
 - 조례 제정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확보

4 기대효과

- ◎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
 -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이 강화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됨
- ◎ 피해자 보호 신뢰도 향상
 - 피해자 지원 절차가 제도화 되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짐

◎ 타 시·도 확산 가능성

- 학교 단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지방교육청 최초 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시도의 유사 조례 제정 모델로 활용되고 있음

5 향후계획

◎ 정책적 연계 강화

- 양성평등, 인권교육과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 전문기관 협력 및 상담체계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 강화

◎ AI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확대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위험 탐지, 가상사례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체계 구축 추진

03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마트 없는 마을, 밥상도 사라진다" - 전북 83.6% 행정리, 먹거리 기본권 사각지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회' 구성, 6개월 연구용역·3차례 정책세미나·현장답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 전북 5,245개 행정리 중 4,386곳(83.6%)이 식료품점 전무 : 전국 최악
 - 정읍 93.3%, 진안 89.8%, 남원 87.8% 등 소멸위험지역일수록 식품접근성 저조
- ◎ 지역소멸·인구감소가 만든 생존권 위기, 제도로 답하다
 - 슈퍼마켓·신선식품점 소멸로 고령 취약계층의 두부·콩나물·우유 등 단백질 식품 구매 불가
 - 온라인 쇼핑 접근 어려운 농촌 어르신, 건강권·행복추구권 침해 방지 불가
 - 민간 폐업→식품사막→건강악화 악순환 차단이 목표

2 주요내용

- ◎ 4대 핵심 제도 도입 - 실태조사·지원계획·재정지원·협력체계
 - 식품사막 지역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도지사의 연간 식품접근성 지원계획 수립·시행 책무 명시
 -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이동장터·배송지원·식품바우처·공동체 유통망 등
 - 민관협력 공동체 육성 및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포함
- ◎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목적기부사업' 전국 최초 도입
 - 신선식품 제공 목적기부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비 마련
 -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 보고 완료, 제도 안착 기반 확보

3 추진성과

- ◎ 전국적 의제화 성공 - 28건 이상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확산
- ◎ 2025 국정감사 핵심의제 채택 - 정부 차원 대응 촉발
 -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마트 사라진 마을, 밥상도 사라진다" 질의
 - 국회서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 예고, 전북 조례가 입법 모델로 주목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필요성 공감, 관계부처 협의" 답변, 국가정책 연계 가능
- ▶ 식품사막화는 2024-2025년 전국 언론·국회·학계·지자체가 주목하는 핵심 사회의제로, 전북 조례는 이 흐름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4 기대효과

- ◎ **고령 취약계층 생존권·건강권 실질적 보장** - “더 이상 먹거리 고립 없다”
 - 식품사막 지역 고령자의 신선식품 접근성 개선으로 **‘영양실조·만성질환 예방’**
 - 이동장터·배송지원·식품바우처로 ‘어르신 소비선택권 회복’, 삶의 질 직접 체감
 - 디지털 소외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제도적 보장, 행복추구권 증진
- ◎ **지역소멸 악순환 차단** - “먹거리 안전망이 인구유출 방파제”
 - 식품접근성↓→건강악화→정주여건 붕괴→인구감소, 악순환 고리 끊기
 - 일본·미국·영국 사례처럼 ‘먹거리 접근권=복지 기본권’ 인식 전환
 - 지역공동체 복원 및 농촌 정주 만족도 향상으로 인구 유지 기반 마련

5 향후계획

- ◎ 데이터로 정책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 및 식품사막 지도 제작
 - 연간 행정리별 식료품점·접근성·주민수요 조사를 통해 식품사막 지수 개발
 - GIS 기반 식품사막 지도 제작, 정책 우선순위 지역 선정 및 예산배분 최적화
- ◎ **고향사랑기부제 목적기부사업 고도화** - “기부로 어르신 밥상 지킨다”
 - 경로당 식재료 꾸러미·영양 맞춤형 식품박스 등 다양한 지원모델 개발
 - 기부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기부 성과 가시화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국가 상위법 제정 연계 및 타 시도 확산 주도
 - 국회 ‘식품사막화 방지법’ 입법과정 적극 협력, 전북 조례 내용 반영 건의

04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김재균 경기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각 학교급별 교육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의 학습 연속성과 진로 탐색 미흡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존립 기반 약화
-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목적

-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도모
- 경기도의 교육 경쟁력과 지역 인재 육성 강화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 의의

- 학교급 간 연계성 강화와 지역대학의 공공적 역할 회복을 동시에 지향하는 종합적 정책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생태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

2 주요내용

- ◎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시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
- ◎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정함
 - 진로·진학 교육 및 체험 교육, 학습결손 보완, 교양 함양 및 인성 교육, 시설·설비 공동 활용 등
- ◎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를 설치
- ◎ 협력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의 환류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3 추진성과

- ◎ (2025.2.2.) 경기도의회, 대학-초중고 협력사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2025.5.2.)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 2025.7.31. 기준 예산 20억 원, 프로그램 수 224개, 수강자 4,019명
- ◎ (2025.4.15.) 제정 조례 본회의 통과

4 기대효과

-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학급 간 단절을 해소하고, 초·중·고·대학 간 연계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전국 지자체의 교육정책 모델로 확산 가능
 - 학교급별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진로탐색·진학설계·지역 정착률이 향상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교육자원 효율성 극대화
- ◎ 도·교육청·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행정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 ◎ 학생은 지역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진로체험과 학습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변화를 체감하며, 학부모는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자녀의 진로 설계와 교육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
- ◎ 경기도형 교육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교육·고용·정착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
- ◎ 협력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정책수립에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타 시·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 ◎ 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제도로 발전할 것

5 향후계획

- ◎ 경기도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평가-확산 구조 정착
 - 사업성과 분석 후 성과평가 질적 지표 마련, 예산 배분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 조례 시행성과를 정례적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에 공유하여, 지방교육협력모델로의 전국적 확산 유도

1 조례개요

◎ 학생 통학 지원 현황

-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에듀버스 · 에듀택시 등) 실시

◎ 제안배경

- 전라남도 내 5개 시의 동(洞) 지역 학생 가운데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
- 특히 중학교 배정이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제안이유

-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함

2 주요내용

- ◎ 교육감이 통학 지원의 기본 방향과 그 대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제4조)
- ◎ 농어촌학교,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
- ◎ 교육감이 매년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받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게 규정(제8조)
- ◎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제10조)
- ◎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정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폐지

3 추진성과

◎ 교육행정 질문(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2023. 9. 12.)

- 도시개발로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 사업자의 통학 지원이 6년에 그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시 지역 학생 통학 지원 필요성 제기
- ◎ 시 지역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2024. 9.)
 - 시 지역 원거리 통학생 현황 및 재정 소요액 등
 - 시지역 원거리 통학생 현황(초등학교: 도보 1.5km, 중학교: 대중교통 30분 이상)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원거리 통학생 수	원거리 통학율	학생수	원거리 통학생 수	원거리 통학율
목포	13,737	594	4.3%	7,396	475	6.4%
여수	13,847	794	5.7%	6,973	1,102	15.8%
순천	15,952	932	5.8%	6,973	291	3.4%
나주	6,490	249	3.8%	2,879	72	2.5%
광양	8,744	357	4.0%	4,584	53	1.1%
합계	58,770	2,926	4.9%	28,805	1,993	6.5%

<자료: 전라남도교육청, 2024. 9. 임형석 의원 주관 간담회 자료(발췌)>

◎ 재정 소요액 (비용추계의 결과)

- 총 5년간 39,553백만 원 (연평균) 7,910백만 원의 소요비용 예상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	합계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	2029년
총비용		39,553	637	10,700	10,084	9,333	8,799
세출	시지역 통학지원	39,553	10,700	10,084	9,333	8,799	8,799

<자료: 비용추계서, 전라남도의회, 2024. 10. 일부 발췌>

◎ 조례 제정 관련 버스업계와의 간담회 개최(2024. 10. 25.)

- 학생 통학 지원이 시내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 등 협의, 버스업계의 우려 청취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사례 확인

4 기대효과

◎ 시 지역 4천 명 가량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 제공

- 2026년부터 통학 지원이 본격화하면 그동안 학교가 멀어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 지역 4천 명 안팎의 초·중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됨

5 향후계획

◎ 조례 시행에 따른 시 지역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진행 경과 지속 점검 실시

◎ 통학로 안전, 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 지원 만족도 등 평가 점검 등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주당 정부의 역사정의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한말과 일제강점기 의병·학생·항일운동의 중심지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이어진 전남에서, 후손 부재와 자료 부족으로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적극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시급성 및 적절성)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은 신청할 후손이 없거나 4-5대가 지난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등 지속적인 조사와 서훈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상시적 조사·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역적 특성 반영) 전남은 22개 시군 전지역에서 의병운동과 학생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독립운동의 중심지이나 기록이 소멸되거나,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해 독립운동 참여자 수에 비해 유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미서훈자 2천여명)으로 대한민국 역사 속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 필요

◎ 추진방향

-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발굴·조사 및 서훈 신청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차원의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 행정적 기반 마련
- 전문가·민간단체·시군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예산지원 명문화

2 주요내용

- ◎ (책무)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 (정의)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
- ◎ (지원사업) 독립운동 입증자료의 발굴·수집 및 고증, 서훈 신청 등 추진사업 근거 명시
- ◎ 조례 추진 과정
 - (19.9.23. / 도정질문) 의병선양사업 문제점 지적 및 독립운동 지장정부 차원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지원 건의
 - (21.8.20. ~ / 상임위 중심 사업 추진) 3·1운동 및 한말의병 중심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사업 추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

- (24.5. 21. / 조례 제정)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했지만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25.7.22. / 도정질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기관 참여 필요성 제기 및 개관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미서훈자 발굴과 공훈 조사 기능 병행 제안
- (25.10.23. / 간담회 추진) 전남도 사회복지과(보훈선양팀) 및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학예전시팀)과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협의

3 추진성과

- ◎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성과(2021~2024)
 - (1단계) 3·1운동 중심 128명 발굴 → 80명 서훈 신청 *사업비 77백만원
 - (2단계) 1895~1945년 전 계열 확대 2,456명 발굴 → 1,023명 서훈 신청 *사업비 292백만원
- ◎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확정
 - (1단계) 19명 서훈 확정
 - (2단계) 13명 서훈 확정 (11. 17. 순국선열의날 이후 본격 서훈예상)
- ◎ 조례제정 이후 도정질문, 기관간담회 통해 사후 관리체계 지속 추진

4 기대효과

- ◎ (역사정의 실현) 서훈 누락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재평가하여 명예회복 및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
- ◎ (정책 파급력) 보훈·선양 정책의 제도적 모델로 자리매김 및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벤치마킹 확산(전북특별자치도·충청남도 조례 제정)
- ◎ (교육·문화 확산)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 교육 확대

5 향후계획

- ◎ 미서훈자 서훈 신청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및 조례 개정 추진
- ◎ 서훈 신청자 국가보훈부 조속 심사 건의
- ◎ 발굴사업 반영한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추진
- ◎ 도교육청과 연계한 교과·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07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한춘옥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상반기 기준 유·사산아 비율이 전체 임신의 25%에 달할 만큼 유산과 사산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됨
-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 검시비용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등을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유산과 사산을 겪은 부부가 이를 극복하고 다음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

◎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 난임 등의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만족도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장려

-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도내 기업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난임치료 등으로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3 추진성과

◎ 난임지원 확대 촉구 본회의 5분 발언(2023.5.17.)

- 전남형 난임지원 확대, 타 지역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정책 입안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고 과감한 전남의 난임 지원 정책 마련 촉구

- ◎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2024.05.21.)
 - 난임부부 지원의 ▲정부 지원 연령제 차등 폐지와 지원 금액 확대 ▲공난포 발생시 지원 ▲전국 난임 시술 병원 확대 촉구
- ◎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대표발의(2025.10.02.)
 -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5.10.23.)

4 기대효과

- ◎ 전라남도 출산율 제고
 - 2024년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난임 등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지역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저출생 대응과 도민 건강권 보장
 - 기존 난임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지원의 폭을 넓히고 유산과 사산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체계로 확장되며 유산과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임

5 향후계획

- ◎ 난임치료에 따른 간접비용 지원 항목 확대 노력
 - 올해 시범 운영 중인 교통비 지원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숙박비 등 난임치료 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
- ◎ 유·사산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유·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유·사산 휴가, 유·사산 급여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활용되도록 노력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전라남도는 지형과 생활환경에 따라 주민의 생활양식과 공동체 정서를 반영한 돌담 문화가 형성·발달 해온 지역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는 돌담을 생활형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전통경관의 지속가능한 계승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시급성 및 적절성

- 돌담은 단순한 경계나 방풍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고유의 경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온 생활형 문화유산임.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거나 시멘트·블록 담장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와 풍화작용으로 인해 원형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음**
- 기존 문화재 지정 제도는 특정 명소 중심의 보호에 한정되어, 마을 단위에 분포한 **생활형 경관유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대두됨**

- 지역적 특성 반영

- 전라남도는 지형과 생활환경에 따라 토석담·강담 등 다양한 형태의 돌담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는 **주민의 생활양식과 공동체 정서를 반영한 대표적 향토경관**임. 특히 섬과 농촌 지역에서는 돌담이 바람을 막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며 마을 경계를 형성하는 등 **실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 그러나 지역별 전통 축조기법이 기록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상 정비·복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남의 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돌담을 지역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보존·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도 차원의 **보존·정비계획 수립과 기초조사 제도화**
- 시·군의 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별 보존 역량 제고**
- 전문가·기간단체·시·군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 ◎ **(기초조사)** 돌담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 규정**
- ◎ **(재정지원)** 돌담의 보존·정비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근거 마련**
- ◎ **(협력체계)** 돌담의 효율적 보존과 정비를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명시**

3 추진성과

- ◎ 생활유산의 소멸 위기
 - 전통 돌담이 훼손·소실되며 지역 고유의 경관과 정체성 위협 문제 제기
- ◎ 광역자치단체 최초 제도화
 - 돌담을 생활형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보존·정비 및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생활유산에서 지역문화 자산으로
 - 돌담을 지역의 역사·정서를 담은 문화자산으로 재조명하고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
- ◎ 공동체·문화·관광 진흥의 선순환 구축
 - 보존 활동을 주민 참여와 문화·관광 진흥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형성

4 기대효과

- ◎ (지역 경관의 보존과 회복) 마을 단위 전통 돌담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보존·정비로 전남형 경관 정체성 강화
- ◎ (전통 기술 계승 및 인력 양성) 지역별 축조기법을 조사·기록해 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구축
- ◎ (주민참여형 보존 모델 정착)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해 주민참여와 공동체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유도

5 향후계획

- ◎ 도내 돌담의 분포·훼손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 역사·경관 가치가 높은 돌담을 중심으로 보수·복원 사업 추진
- ◎ 협업체 운영과 정기 평가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정책 환류 체계 구축

1 조례개요

- ◎ 조례명: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 ◎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 ◎ 조례 의의
 - 기존 '청년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에서 더 나아가 '중장년 창의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정책 분야를 제시하여 서울의 사회적·경제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일자리정책의 혁신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음

2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 상시적인 구조조정·노동유연화로 '평생직장' 개념 붕괴
 -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층 실업 증가, 인생 2막을 준비할 제도적 기반 부족
 -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1인 단위 창업 수요 급증
 - 2022년 기준 전국 1인 창조기업 1,007,769개, 이 중 22.4%(225,331개)가 서울 소재
 - 최근 경제 구조는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무형 자산 기반 창업이 빠르게 확대됨
 - 기존 창업 지원정책이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력형·창의형 1인 창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 목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
 - 중장년과 청년이 경력과 아이디어로 자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서울 경제의 지속가능한 혁신 구조 형성
- ◎ 사업기간 및 대상
 - 사업기간: 조례 시행일(25.9.29.)부터 지속 추진(3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
 - 사업대상: 서울 소재 1인 창조기업 및 4인 이하 공동창업 기업, 예비창업자
- ◎ 추진 방향
 - 법·조례 연계체계 확립: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
 - 창의적 창업 인프라 조성: 서울형 1인 창조기업 허브 설치·운영
 - 교육 및 역량 강화: 경력전환·창의교육·브랜딩 지원

- 홍보 지원: '나를 브랜드로 여는 인생 2막'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학·기업·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 전략

- 제도 기반 구축: 시장의 책무 명시(제3조), 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5조)
- 실태 기반 정책 설계: 실태조사(제6조)로 현황 진단 및 정책 반영
-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판로, 자금연계, 홍보사업(제7조)
- 전문기관 위탁 운영: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제8조)
- 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표창 제도 도입(제10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 사업비

- 초기 3년(25~27) 예산 약 30억 원(서울시 창업지원 예산 내 연계)
- 민간위탁·협력사업 포함 시 연간 약 10억 원 규모로 추진 예정

3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체감성

- 중장년층: 장기근속 직장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린 현실적 창업 지원책
- 청년층: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1인 비즈니스 모델 육성
- 창업생태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심에서 지식·경험 기반 창업으로 저변 확대
- 소득·일자리 창출: 자립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시민체감성 향상: 직장인·퇴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창업 환경 조성

◎ 향후 발전방향

- 서울형 '1인 창조기업 허브' 설립: 분야별 멘토링·공유오피스·IR 연계 지원
-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홍보' 프로젝트 추진: 성공사례 및 인생 2막 스토리텔링 중심의 브랜딩 캠페인 운영
· "나의 브랜드, 나의 두 번째 직업" 캠페인으로 시민공감대 형성
-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정기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예산 효율화

4 향후계획

- ◎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26~28) 수립 추진
- ◎ 중장년·청년 맞춤형 창업 역량교육 프로그램 신설
- ◎ 1인 창조기업 홍보·스토리텔링 브랜드 플랫폼 구축
- ◎ 서울형 창업지원기관(창업허브 등)과의 연계사업 확대
- ◎ 우수 1인 창조기업 표창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 조례 시행 효과분석 및 정책 성과 백서 발간(27년 예정)

10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 노동상담, 체불임금·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현장 문제 해결을 공공서비스화하여 노동복지 기반 강화

2 주요내용

- ◎ 시장은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하며, 무료 노무상담, 권익구제,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
- ◎ 마을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재위촉 가능
- ◎ 상담실적 제출, 수당 지급, 제도 개선 반영 등 운영체계 명확화
- ◎ 성별 균형 고려 위촉 규정 명시

3 추진성과

- ◎ '마을단위서 무료 노무사 상담' 조례안 발의 (2025.5.20.)
- ◎ 제정 이후 광주시 전역에서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자 대상 무료 노무상담 및 권익구제 체계 구축

4 기대효과

-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 ◎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분쟁 예방과 노사관계 안정화
- ◎ 지역 기반의 생활형 노동복지 실현

5 향후계획

- ◎ 제도 성과분석 및 실적관리 체계 고도화
- ◎ 공인노무사회·자치구 등과 협력체계 강화
- ◎ 상담사례 DB구축 및 정책연계 확대 추진

1 조례개요

- ◎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
- ◎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교육감의 책무(제3조)**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함
 -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 **교육지원계획 수립(제4조)**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 **지원대상 및 사업(제5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사업은 학교시설, 교재·교구, 무상 교과서, 통학 지원, 교원 관사 제공, 교원 배치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
- ◎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제6조)**
 -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를 두며, 교육지원계획 및 예산규모 심의 등 담당
- ◎ **관계기관 협조(제7조)**
 -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성과

- ◎ **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및 본회의 통과**
 - 2024년 3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 2024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 ◎ **정책적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하여, 전남형 지역교육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

◎ 기존 사업 연계성 확보

-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차량 지원, 교육수당 지급 등 기존 전남교육청 사업을 통합·보완하여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4 기대효과

◎ 지역소멸 대응 및 교육균형발전 촉진

-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령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
- 도시-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해 도내 교육 균형 달성

◎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

-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인구감소지역 학교를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거점으로 육성
- 지역사회와 협력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강화

5 향후계획

◎ 교육지원계획의 연례화 및 실효성 점검

- 전라남도교육청은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지표 및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

◎ 관계기관 협력 확대

- 전라남도청, 시군청,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

◎ 정책영향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 학교별 교육여건 변화와 학생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조례 시행 이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12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조례

김정어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 배경

-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자(義死者)의 숭고한 뜻은 사회적 존중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제도적으로 기릴 장치가 미비
-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기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

◎ 제정 목적

- 의사자의 희생과 용기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의사자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생명존중과 상호돌봄의 가치를 도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사회적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의사자의 날 제정 및 공고

- 전라남도지사가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의 날'을 지정·공고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으로 추진

◎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 도민과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추념식, 기념식, 전시회 및 기념비 건립 등 추진하고 희생정신을 알리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예우 및 사례 발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위문·복지지원 시행
- 도내 의사상자 사례 발굴·기록을 통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3 추진성과

- ◎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자의 날' 제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구한 주민의 용기를 기본 사회가치 실현의 모범으로 공인하고, 그 공적을 기리며 사회적 연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시행 2025. 10. 16.] [전라남도조례 제6377호, 2025. 10. 16., 제정]

- ◎ 지역 언론 다수에서 “도민 사회 내 생명존중문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4 기대효과

◎ 사회적 효과

- 생명을 구한 이들의 용기를 도민 사회가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 강화

◎ 정책 파급효과

- 생명존중, 나눔, 헌신 등 도덕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및 도민 자긍심 제고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추모·기념·교육 체계 확립

5 향후계획

◎ 제도 정착 및 확대 추진

-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공식 지정일 선정 및 도보 공고
- 추념식 및 기념행사 정례화

◎ 도내 의사상자 사례 발굴·기록

- 도민 참여형 의사상자 추모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추진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적 확산 기반 마련

13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최동익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도내 5년 평균 524건 어선사고 발생(전국 2,230건의 23.5%)**
 - 최근 어선 사고,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특히 전남은 **전국의 4할 이상 어장·어항을 차지, 어선은 전국의 42%인 26,933척 보유**
 - **(인명사고)** 최근 5년간 사망 35명, 실종 20명 등 지속적 인명피해 발생
 - * (사망) `20년 3명 → `21년 4명 → `22년 8명 → `23년 11명 → `24년 9명
 - * (실종) `20년 3명 → `21년 3명 → `22년 2명 → `23년 8명 → `24년 4명
 - **(사고유형)** 기관손상 132건, 중대사고(충돌·좌초·전복·화재·침몰) 144건 발생
 - * (유형별) 충돌 55척, 좌초·전복 47척, 화재·침몰 42척, 기관손상 132척, 기타 248척
- ◎ **국가 제도 공백을 메우는 지방 정부형 안전체계 미비**
 - 중앙정부 중심의 현행 법제는 지역 실정과 어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대책 강구,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절실**
 - 단순 대응 ⇒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전남 어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전국 유일의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수산현장의 안전을 제도화

- ◎ **제4조(기본계획)**
 -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목표·사업·협력체계 등 포함)
- ◎ **제5조(추진사업)**
 -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접안시설 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예방사업 추진
- ◎ **제6조(지원사업)**
 - 어선 안전 관련 비용 지원(구명조끼 비치, 설비 개선, 안전물품 지원 등)

3 추진성과

◎ 도비 사업 추진 현황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11백만원('25년)
15개 시·군 / 전기, 소방, 구명, 항해 등 어선안전장비 약160개 품목 지원
-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2,074백만원('25년)
도내 모든어선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벨트형) 구매 보조 지원
- 소형어선 화재감지시스템, 100백만원('25년)
80대(시범사업) / 화재징후감지시스템(열화상카메라+CCTV) 지원

◎ 26년도 신규사업 조서

- 출항 전 자율 안전점검 플랫폼 구축사업, 200백만원('26년)
· 해양경찰청(출항 신고·점검 이력 공유), 수협(교육·보급), 지자체(홍보), 민간 개발사(앱 구축)
- 어선안전 클린 조업장 지원사업, 400백만원('26년)
· 우선 도비 5억원 규모 시범사업 추진후 실효성 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수부에 국비 사업 건의
- 어선사고 예방 홍보영상(sns·유튜브) 제작, 비예산('26년, 도 대변인실 협업)
· 유튜브, 블로그, SNS(수협·지자체 계정 등) 및 어민 단체 채널을 통한 집중 확산
- 어선 안전 표지판 제작 부착 지원사업, 50백만원('26년)
· 표지판 규격·디자인·부착지침 마련, 표지판 부착 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연계 어선사고 예방 점검실시, 비예산('26년)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 20백만원('26년)
· 어선사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도 정책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 통한 사고예방 동력 강화
- 전남형 어선사고 혁신(예방) 교육 시범사업, 50백만원('26년)
· 교육비 교재외에 어선안전 용품 지급하여 참여도 강화(의료상자, 안전 경관등, 야간 후레쉬 등)

4 기대효과

- ◎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 정착으로 어선 사고 획기적 감소
- ◎ 지방정부 주도의 해양안전 거버넌스 확립
- 도·시·군·어민·전문기관 함께 참여 ⇒ 전국 해양안전 행정의 선도지역 부상
- ◎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지역공동체 회복
- 안전장비 지원, 교육 강화, 항포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 영세선박, 양식장 관리선, 외국인 선원 대상 교육 사각지대 해소
- ◎ 수협, 해경 등 항포구 인근 교육장으로 어선원의 참여도 높임

5 향후계획

- ◎ 사고 통계·현장 점검 결과 반영한 계획을 지속 개선,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구조 정착
- ◎ 시·군 단위 확산 및 민·관 협력 강화
- ◎ 전국 확산 가능한 수산안전 정책모델로 고도화
- ◎ 전남발(發) 수산안전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 되도록 추진

14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김성일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이전 하루 평균 7~9만 원 수준이던 간병비는 현재 12~15만 원(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 → '간병파산', '간병지옥' 등 가족 붕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 초래

- 간병비 상승률: '20)평균 7~9만 원 → '25)평균 12~15만 원
- 간병살인 발생건수: '06)3건 → '12)10건 → '19)26건 → '20)22건
(※ 24년 6월, 전남 무안에서 오랜 간병에 따른 간병살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충격)
- 연간사적간병비: '08)3조 6천억 원 → '18)8조 원 → '25)10조 원 이상 추정

◎ 지역특성 · 제도 시급

-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기초연금 수급자 전국 최다, 매년 홀로 사는 노인 지속 증가로 사각지대 속 취약계층 간병부담 ↑ →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기초연금 수급자: '22)36만 5천 명 → '23)37만 2천 명 → '24)38만 4천 명(전국 최다, 76.8%)
- 저소득계층 노인: '22)7만 1천 명 → '23)7만 4천 명 → '24)7만 6천 명(16.2%)
- 홀로 사는 노인: '22)10만 7천 명 → '23)11만 2천 명 → '24)12만 명(25.6%)
※ 65세 이상 노인인구(전국 1위)
'22)44만 5천 명 → '23)45만 5천 명(Δ1만2천 명) → '24)47만 명(Δ1만3천 명)

◎ 공공책임과 정책 부재

- 급속한 고령화 심화 및 간병 부담 증가에 역대 정부 모두 간병 급여화 제도 필요성 공감했으나, 실질적 부담은 여전히 환자 및 가족에게 전가

2 주요내용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7.1%로 전국 1위, 홀로 사는 노인 12만 명, 기초연금 전국 최다 수급 등 초고령사회 최전선 지역 특성 반영한 전남형 체감 복지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체계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도지사에게 정책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 부여하고 **매년 지원계획 수립 · 시행으로 사업의 지속성 · 안정성 확보**
- 지원계획에 시 · 군간 재원부담을 통한 사업 이행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안정적 재원 조달
- 지원 대상 구체화
- 전남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 →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추진경과

-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24. 10. 29.)
- 전남도의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속도에 맞춰 조례 추진 입장 표명으로 조례 난항
-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초고령사회 간병 사각지대! 더 이상 외면은 안된다'5분발언(25. 2. 5.)
- 정부 정책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의 고통을 덜어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 강조하며 전남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25. 6. 13, 공동발의)
-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당위성 입증, 즉각 이행 재촉**(25. 7. 18)
- 폭등하는 간병비 '개인 · 가족 책임' 한계, 전남도 대책 부재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소관 상임위 통과 (25. 9. 9, 본 의원 대표발의)
-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본회의 의결(25. 9. 19)

3 추진성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 순천시의료원 40병상, 목포시의료원 64병상 운영 중 → 강진의료원 40병상 확대
-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866백만원, 이용인원 394명
- ◎ '의료 · 요양 · 돌봄'이 가능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확대
 - ※ (전남형)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개소당 9천만원 (복지부) 여수시10억원
- ◎ 홀로사는 어르신 스마트돌봄 안전망 구축
 - 응급안전기기 설치 · 운영(39,000대), 돌봄로봇 보급(1,230대)

4 기대효과

- ◎ (체감성)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하루평균 12~15만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부담 완화로 노인 빈곤이 높은 전남의 저소득 노인 7만 6천 명 지원으로 적절한 치료와 돌봄 가능 → **노인 복지 체감**
- ◎ (파급력) 지역 사회 복지 정책 실효성을 높여 통합적 돌봄 서비스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확장성)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확대 및 22개 시군 제도적 기반 마련의 마중물 역할로 **간병 복지 초석 실현**

5 향후계획

- ◎ 신속한 제도 시행 및 자원 협력 체계 구축
 - 예산 반영 위한 필요 자원 구체화, 조례 안정적 이행 위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간 실무협의, 정례 간담회 등 개최
- ◎ 정부 간병비 급여화 기조와 연계, 선제 발굴·확대 → 사각지대 없는 지속가능한 전남 돌봄안전망 구축

15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안장현 충청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적 의의

- 충청남도는 노동집약 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노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
- 노사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고용불안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절실
- 기존에는 '노사협력증진 사업' 수준의 대응에 그쳤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운영의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하고 상시적인 분쟁조정체계로 위상 강화
- 이는 민주당의 핵심 어젠다인 "노사상생, 공정노동시장, 포용적 전환" 기조와 부합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노사협력체계 강화 방향과도 일치

2 주요내용

◎ 제4장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신설

- (제17조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설치하여 노사분쟁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중재·조정 수행
- (제18조 구성 및 자격) 노동전문가, 경영계, 학계, 시민사회 등 3자 균형구조로 구성,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운영규정 명시
- (제19조 기능 및 역할) 노사분쟁 사전 예방·조정·중재, 갈등 당사자 간 대화 촉진 및 상생협약 지원, 도내 노사관계 통계·정책자문 기능 수행

3 추진성과

◎ 조례 개정(2024년 12월) 이후 조정중재단 성과

- 사업장 방문: 5곳 / 조정 개입: 2개 사업장 / 조정 성사: 1개 사업장
- 실제 현장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조정중재단의 제도적 실효성과 현장 체감성을 동시에 입증

◎ 제도화 성과

-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노사분쟁 조정·중재기구로, 노동위원회와 별도로 지역 차원의 상시 갈등관리 기반 마련
- "조정중재단이 노사 간 대화의 주요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 중재기능을 보완하는 지역형 협의·조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예산 확대 및 제도 정착 노력

- 조례 개정 이후 제도가 단순히 조문에 그치지 않고 운영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증액 및 정책 반영 주도
- (조례 개정 이전 예산) 2024년 노사협력증진 사업비 20,000천원
- (조례 개정 이후 정식 사업으로 안착·예산 200% 증액) 2025년 조정중재단 운영비: 40,000천원
- (제도 정착 위한 예산 확보) 2026년 본예산 편성액: 49,410천원
- 조례 제정 → 실적 창출 → 예산 확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
- 이러한 단계적 성장 과정은 충남이 제도화된 노사분쟁 조정체계의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됨

4 기대효과

- ◎ (노사상생 문화 정착) 현장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지역 내 갈등 완화, 상호 신뢰 구축
- ◎ (지역경제 안정화 기여) 분쟁 장기화를 예방함으로써 생산차질·고용불안 최소화
- ◎ (타 지자체 확산 기대) 충남형 모델을 기반으로 세종·대전·전북 등 인근 광역단체의 벤치마킹 요청 확산
- ◎ (지방노사거버넌스 고도화) 중앙정부 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한 협의체로 발전 가능

5 향후계획

- ◎ (충남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발전) 향후 조정중재단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노사정 협력플랫폼으로 단계적 도약 추진

16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유정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제정 목적
 -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 함양 및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 제정 배경
 - 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활용률은 높지만,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보다 낮은 3.8%에 그쳐 실질적 활용 역량은 부족한 상황
 - 정부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올바른 활용과 교육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으로 이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필요
- ◎ 주요 적용 범위
 - 서울시 및 소속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 및 관련 사업
- ◎ 의결 일시: 2025년 9월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주요내용

- ◎ 조례 목적 및 기본 방향
 -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 함양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 ◎ 기본계획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단계별 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역할 및 기능 규정
 - 위원 구성, 임기, 해촉 규정,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규정, 존속기한
-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조사
 -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홍보 및 대시민 인식 제고

3 추진성과

- ◎ 2025.3.10.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 생성AI 활용을 통한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 AI를 보조 도구로 보고 청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 시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제시
- ◎ 2025.9.12.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후 6개월 만에 조례 발의 및 본회의 의결
- ◎ 서울시 최초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 지원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 함양 및 디지털 사회 적응력 강화
 - 비판적·창의적 이해와 윤리적·안전한 대응 능력 제고
 - 세대·계층 간 디지털 격차 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 촉진
- ◎ 향후 발전방향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의 정책 연계성 강화
 - 서울형 AI 교육 커리큘럼 및 평가체계 구축
 - 민·관·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확산

5 향후계획

- ◎ 계획 수립 및 시행
 -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시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 ◎ 조직·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성과 평가 → 보완·확산
 - 정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협력망 강화
- ◎ 지원 기반 확충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 예산·인력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제도 정착

17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정윤경 경기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조례명 :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 정윤경 의원 외 21명 공동발의(제안일자 : 2025년 4월 2일)
 - 상정일 : 2025년 4월 15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시행일 : 공포일(2025년 5월 7일) 후 즉시 시행
- ◎ (제정 배경) 경기도는 사계절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폭설 등 재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농가·어가가 다수 존재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 ◎ (목적) 농어업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어가에 대해 복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어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경기도 내에서 직접 농어업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어가이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 기준 이상(예: 12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안 제5조)
- ◎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6조)
- ◎ 응급복구용 차량·장비 임차, 시설물 붕괴 철거·복구, 가족 출하·폐사축 처리, 경작·수확 불능 생계지원금 등이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항목으로 규정됨(안 제7조)
- ◎ 다른 법령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불법 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등은 지원 제외 가능(안 제8조)

3 추진성과

- ◎ 2024년 12월에 발생한 경기도 폭설 피해 농민 지원
 -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 등 재해복구비 25개 시군 7,035백만원(도비)
 - 농업시설(일반하우스, 과수 및 인삼 시설 등) 29개 시군 17,122백만원(도비)

4 기대효과

- ◎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가·어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 구축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 가능성 제고
- ◎ 지원대상과 제외대상·환수조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 광역지자체 최초 제정 조례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재해 대응 정책의 선도모델로서 위상 강화

- ◎ 친환경농가, 소규모 농어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능성 확대
- ◎ 농어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

5 향후계획

- ◎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친환경 농가 등 소규모 농가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 제도와 '경기도형 보호체계'라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 도내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까지 더해져, 지원 속도는 빨라지고, 지원 범위는 넓어지며, 농가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

18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이재태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 최초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급성 및 적절성)**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
- **(정책적 지속성과 지역 특화성)** 현행 제도는 사후 신고나 단속 위주로 운영되어 실질적 예방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방문판매 피해 예방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사 책무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마련 명문화**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소비자 보호 기반 조성**
- **도민 참여형 관리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명문화로 구체성 담보**

2 주요내용

◎ 책무

-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피해 예방 교육 등

-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과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중집합 시설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거주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하고 이를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

- 위법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시·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추진성과

◎ 문제인식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한 방문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기자회견 및 주민결의대회

◎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및 협의

- 전남도, 나주시 등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도내 방문판매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노인층 대상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도출**

◎ 입안 및 시행

- 노인 생활권 중심의 정기적 예방교육, 방문판매 지킴이 위촉, 시·군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4 기대효과

◎ 노인층 방문판매 피해의 실질적 예방

- 경로당·마을회관·노인복지관 등 생활권 중심 교육으로 방문판매 피해 인식 제고
- 위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 확산 방지

◎ 도민 참여형 예방시스템 구축

- 지역 노인층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현장 감시 및 홍보활동 수행
-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

◎ 지속 가능한 소비자 보호 기반 조성

- 시·군·소비자단체·도 간 협력체제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적 예방체계 확립
- 도민 신뢰도 제고 및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전국 확산 가능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예방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도 사례로 기대

5 향후계획

◎ 교육·홍보체계 고도화

- 방문판매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 담은 교육자료 제작·배포

◎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 내실화

- 지킴이 교육 및 활동비 지원 확대, 우수활동자 포상 등

◎ 피해신고 및 상담 연계 강화

- 소비자생활센터, 소비자상담실 등과 정보공유체계 구축

◎ 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

- 조례 시행 성과 점검 및 제도 보안을 통해 실효성 지속 확보

19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장민수 경기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 ◎ 한편 청년과 청소년은 생애주기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집단으로, 개별적·분절적 정책 접근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서에 분산된 청년사업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청소년 정책을 하나의 생애주기 흐름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 **재단 명칭 및 설립 근거 개편**
 - 기존 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미래세대 통합 행정 플랫폼으로 재정비
- ◎ **사업 영역 확장**
 - 청소년 수련·연수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청년·청소년 정책 연구·개발, 권익증진, 역량강화, 국제교류, 가족수련 등 11대 핵심사업으로 확대.
 - 정책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을 통해 청년·청소년 통합DB 구축 → 수요분석 → 실증사업 → 정책 환류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체계 구축**
 -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담조직 마련 및 정책 연구, 활동 지원, 수련사업 등 분야별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 ◎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체감형 서비스 강화**
 - 국제교류 및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협력 기반 강화, 가족수련 및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관계 회복 지원

3 추진성과

- ◎ 총사업비: 약 120억 원(초기 설립비 및 3개년 운영비 포함)
- ◎ 사업 중복 해소 및 예산 절감 효과(연 5억 원 규모)
 - 도 및 시·군에서 개별 수행하던 청년·청소년 관련 위탁사업을 재단 중심으로 통합 양수하여 사업 중복률 28% → 0%로 축소, 행정비용 연 5억 원 절감, 사업 간 협업률 2배 향상(2023년 대비) 등 정량적 효율성 확보
- ◎ 조례 개정 이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군 위탁사업 14건을 일원화, 청년·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운영비 비중 12% 증가, 정책 연구·개발 예산 신규 편성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집행 구조 확립
- ◎ 전국 최초로 청년·청소년 정책을 단일 법인 체계로 통합한 사례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행정모델의 선도적 기반을 마련함

4 기대효과

- ◎ 정책 사각지대 해소: 청년·청소년 간 연령 단절 구간(19~24세)을 포괄하여 연속적 지원체계 확보
- ◎ 행정 효율성 제고: 정책·사업의 중복 제거, 통합적 예산 운영 구조 마련
- ◎ 도민 체감 향상: 맞춤형 지원과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신뢰도 상승
- ◎ 발전방향: '미래세대 통합행정 모델'로 발전시켜 중앙정부 및 타 시·도 확산 추진

5 향후계획

- ◎ 중장기(2026~2028년) - 미래세대 통합행정 모델 완성 단계
 - 정책·사업·성과의 데이터 순환체계 확립, 청년·청소년 통합지수(Integrated Youth Index) 개발 및 활용
 - 경기도형 미래세대 정책모델을 확립하여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

20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추진배경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지역소멸 위기 심화)
 - 전남 인구가 '04년 약 196만 명에서 '24년 3월 기준 179만 8천 명으로 감소
 - 특히 '04~'24년까지 청년(19~34세) 약 12만 5천 명 전남을 떠남
 - 행정안전부(21)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전남 16개 군 포함(전국 최다), 한국고용정보원은(24)은 전남 20개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 ◎ 제정목적 : 지역 청년의 자립·정착을 통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 청년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특화구역 구분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생활기반 토대 마련
- ◎ 제정의의 :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을 제도화한 광역 단위 조례
 -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공간 기반형 청년정책 모델로 전국 확산 기대

* 특화구역 조성 → 청년 유입 → 자립·정착 →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2 주요내용

- ◎ 도지사 책무
 - 청년특화구역 조성·지원 시책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청년특화구역 지정
 - 청년인구 유입 촉진 및 청년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 ▶ **(절차)** 시장·군수 신청 → 위원회 심의·의결 → 도지사 지정
- ▶ **(유형)** 도시형(5천㎡이상~1만5천㎡이하), 농촌형(10만㎡이상~60만㎡이하)

- ◎ 지원 사업
 - 도시·농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청년정책 추진

- ▶ **(도시형) 청년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 ▶ **(농촌형) 시설원에 시설·장비 구입 및 관리, 주거 안정 등**
- ※임대료(사무실, 시설·장비, 주거시설 등), 운영비(관리비, 비품 구입 등) 등 지원

◎ **특구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특구 지정·재지정·해제, 운영평가 등 심의·의결

◎ **운영 평가 및 재지정·해제**

- 시장·군수 성과보고 제출 → 도지사는 매년 평가 실시하여 5년마다 재지정(해제), 필요시 조기 해제

3 추진성과

◎ 전남도,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5.4.~'25.12.)

◎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

-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마련된 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
-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창업·정착·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로서 관계 기관에 특별법 제정 건의

▶ **시도의회의장협의회('25.6.), 전라남도의회('25.9)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국회의장과 국회 행안위원장 각각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25.9)**

◎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25.10.)

- 청년(20~39세)·청년특화구역 정의 명확화, 특구 유형(도시형, 농촌형) 면적기준·특화업종지정·지원 사업 등 근거 신설

4 기대효과

◎ 시·군별 도심과 농촌 특성에 맞는 청년특화구역 조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촉진, 지역 내 소비 구조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전남도(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시·군 지역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으로 지방자치의 가치 제고 및 정책 실효성 강화

◎ 청년 유입과 정착 확대로 지역 내 네트워크·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커뮤니티 활성화, 혁신 아이디어 창출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시·군별 맞춤형 성장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일자리·교육 등의 기회가 지역 내에서도 제공되어 지역 간 불균형 완화

5 향후계획

- ◎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25년 말)
- ◎ 청년특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 추진(26년 초~)
 -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내 시·군에 2개소(도시형 1, 농촌형 1) 지정·운영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및 「청년특구 특별법」 연계 추진

21 경기도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안광률 경기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과 연수, 실천학교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이해·활용 능력 및 윤리의식 함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함(제5조)
- 실천학교 지정·운영 관련 근거를 규정함(제6조)
- 인공지능 교육 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규정함(제7조)

3 추진성과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24.3.~12.)
-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24.3.~12.)
-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24.3.~12.)
- AIEDAP 사업을 통한 교원의 AI·디지털 역량강화 지원('24.3.~12.)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 개발 보급('24.10)

4 기대효과

- 학생 : AI 이해·활용 능력과 윤리의식 제고—학습·생활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사용 문화 확산
- 교원 : 체계적 전문연수와 수업자료 지원으로 교과별 AI 융합수업 정착, 수업 품질·효율 개선
- 학교·지역사회 : 실천학교와 협력체계를 통해 우수모델의 학교 간 확산, 지역대학·기업과의 교육 생태계 강화
- 정책 연계성 : 국가 AI 기본법 취지 실현과 초·중등교육법 체계 내 적용 가능성 확보—지속가능성·법적 안정성 강화

5 향후계획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95교)
- AI·SW 꿈키움 동아리 운영(25교)
-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268교)
-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5분 + 실천 자료 보급(매월)
-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개발·보급(25.4.~)
 - 1)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생활」 초6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2) 「가칭」 인공지능 윤리, 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상반기 500학급, 하반기 500학급)

1 조례개요

- ◎ 제정목적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지속가능한 계승·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 마련

2 주요내용

- ◎ 5·18 관련 조례 통합 및 체계 정비
 -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존 13개 조례 중 11개를 통합해 기본조례(65조항)로 일원화
- ◎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추진 명문화
 - 광주시장이 헌법전문 수록 추진을 위한 정책·행정적 책무 명시
 - 5·18정신의 헌법적 가치와 시민 염원을 제도적으로 반영
-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신설
 - 5·18정신계승사업의 총괄·심의·자문기구로서 기능
 - 위원 30명 이내 구성, 시외(국외 포함) 거주자 20% 이상 포함
 - 5·18정신계승사업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체계 구축
- ◎ 사적지·규모역 관리체계 강화
 - 사적지 지정 및 해제 시 자치구 경유 절차 신설
 -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 및 보존 강화
- ◎ 진상규명 후속조치 및 역사왜곡대응 의무 명문화
 - 진상조사위 후속조치 이행 의무화
 - 5·18 역사 왜곡·편취 대응과 관련한 행정 책무 명시
 - 새로운 사회적·행정적 수요에 대한 대응 근거 마련

3 추진성과

- ◎ 5·18 관련 11개 조례를 1개로 통합
 - 조례 난립에 따른 중복·모순·충돌 해소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
 - 사업 중복 등 행정력·예산 낭비 방지
 - 수행 기관별 역할 및 기능 강화

- ◎ 5·18정신의 헌법전문화 추진 근거 마련
 - 시민 염원인 '5·18헌법수록' 정책적·법적 추진 근거 확보
- ◎ 정신계승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신설
 - 광주시·시교육청·시의회 기념재단 등 관계기관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진상규명·역사 왜곡대응 등 미래 행정수요 대비 법적 토대 마련
 - 향후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 ◎ 5·18특별위원회 '통합조례안' 발의·통과로 제도 정비 전환점 마련
 - 5·18정신계승 위한 통합제도 정립한 첫 사례

4 기대효과

- ◎ 정책적·행정적 효과
 - 5·18관련 조례·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 해소
 - 기관별 역할과 책임 강화로 정책 집행력 상승 기대
- ◎ 사회적·시민 체감 효과
 - 오월정신 계승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
 - 시민이 체감하는 '5·18의 현재진행형 역사화' 실현
- ◎ 향후 발전방향
 - 유공자 지원, 규모역 정명, 안장기준 등 세부사안 사회적 합의 숙려 및 지속 보완
 - 통합조례 완성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정 및 후속 제도 정비 추진

5 향후계획

- ◎ 사적지 관리·기념재단 운영 등 현행 제도 점검 및 통합기준 정립
-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지속 추진 → 통합조례의 완성도 및 실행력 강화
- ◎ 유공자 지원·규모역 정명 등 쟁점 과제에 대한 단계적 보완 추진

1 조례개요

- ◎ 최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물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 ◎ 현행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급수관의 위생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부족한 실정
- ◎ 전라남도 내 교육행정 기관 및 학교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기관 스스로가 예방적 관리 주체로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저수조의 소독 및 청소, 수질 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
- ◎ 저수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규정

3 추진성과

- ◎ 조례 발의 및 심사 경과
 - 학교 먹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10월 서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
 -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 ◎ 교육청·학교 현장 반응
 - 그간 급수시설 관리가 기관별로 달라 위생관리 수준이 일정치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교육지원청 단위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

4 기대효과

- ◎ 학생 건강권 및 교육환경 안전 확보
 - 정기적인 청소·소독 및 수질검사로 수돗물 위생 수준 향상
 - 집단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

-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교육감의 책무와 실태조사 공표 의무를 명시하여 관리체계의 신뢰도 제고
- ◎ 시설 안전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노후 저수조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장기적 시설 개선 추진 가능
- ◎ 지역 간 위생격차 해소 및 표준화 추진
 - 교육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 간 관리 수준 차이 감소
- ◎ 재정 효율성 확보
 - 기존 학교안전관리비와 위생관리 예산을 활용해 큰 부담 없이 시행 가능

5 향후계획

- ◎ 매년 저수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체계 구축
- ◎ 도내 학교 및 기관 대상 실태조사 전수 실시 및 결과 공표
- ◎ 노후 저수조 교체 및 시설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시·군 및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 ◎ 학교급식, 급수시설, 위생관리 등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24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차영수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배경

- 최근 배달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불공정 계약,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배달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 배달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역 배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음**

◎ 제정목적

-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관리**하여 배달노동자의 안전 확보,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지역 기반 배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물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 안심배송사업자 지정제 도입

- 도지사가 정한 기준(표준계약서 사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

◎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정된 사업자에게 **교육비,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하도록 규정

◎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확대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자율형 모델로 설계**하여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임

3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안심배송’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방정부형 생활물류 안전관리 모델 창출
- 지역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형 생활물류 문화**를 선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향상이 기대됨
-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5.10.23.)

4 기대효과

◎ 사회적 효과

- 배달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

- 여성·노인·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물류 안전 강화

◎ 정책 파급효과

- 전남형 ‘생활물류안전관리 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성 높음
- 지역 기반 배달사업자 참여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5 향후계획

◎ 제도 정착 및 확대 추진

- 조례 시행 후 시·군 단위 확산 유도 및 운영 실적 평가체계 구축
- 도 및 시·군 연계사업으로 확대 추진으로 **생활물류 선도 문화 정착**
- 민간 플랫폼업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함께 만드는 “전남형 안전사회 모델”제시

-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지역 자율 참여 유도하고 **일자리·안전·공정경제**를 통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안심배송 문화 선도

1 조례개요

-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은행, 2023년 기준 간병비용 월평균 370만원 추정(출처: 2024년 3월,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출처: 상동)
- ◎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도지사가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 ◎ 지원 대상: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3 추진성과

- ◎ '23년 12월 6일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23년 12월 21일 본회의 의결
- ◎ 24년 8월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8기 하반기 중점과제 발표'
 -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발표('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지 지원 조례' 후속 정책 추진)
- ◎ '25년도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 사업 추진(15개 시군 참여)
 - 대상: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사업량 6,000명)
 -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0만원(횟수 제한 없음)
 - 예산: 도비 35억원, 시군비 50억원, 총 85억원
- ◎ 25년 2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대표 우수 조례로 제출, 단체부문 대상 수상

4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 기회 제공
-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 보장
- 과중한 간병비로 인한 당사자·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노인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제" 달성기반 마련(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5 향후계획

- 2026년도 본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중
- 2025년도 사업 성과 및 분석(2026년 1월~)
- 참여 시군 확대 추진(2025년도 사업 기준, 31개 시군 중 15곳 참여)

1 조례개요

- ◎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20 프로 수준에 그침
- ◎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시장 및 공공기관 장의 일자리 확대와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할 책무를 명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발굴·정보제공·성과관리 등 지원사업의 시행
 - 공공일자리 발굴 및 개발,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를 설치·운영
 -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3 기대효과

-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종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임
- ◎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역할 수행

4 향후계획

- ◎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지자체 조례나 한시적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확산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
- ◎ 참여대상 및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시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분야에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공공일자리 경험이 향후 민간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 및 연계 모델을 연구하고 구축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문제 등 사회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됨에 따라 시스템 오류나 의사결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따라서, 전국 최초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하며,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을 정립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도록 함

◎ 추진경과

- 2025년 3월 31일 상임위원회 회부, 4월 11일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4월 15일 본회의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5월 7일 공포하였음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AI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목적

◎ AI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AI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등 관련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 AI 윤리 및 관련 법규, AI 관련 사고 대응 방법 등 관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 AI에 의한 사고 대응 방안 마련 및 인명·재산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3 기대효과

- ◎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AI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 ◎ 제도적 장치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 전국 최초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
 - AI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 ◎ AI와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인 도의 역할 제도화
 - 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AI와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임
- ◎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 마련
 - 미래산업은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상임위 위원들과 교차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임

1 조례개요

- ◎ 경기도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이 저조하고 이식 대기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증과 이식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이에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기증의 숭고한 정신과 생명존중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인체조직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상위법인 「장기이식법」 등과 용어를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 사무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
- ◎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증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운영,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 도지사의 책무 명시 및 시책 마련
 -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함.
-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매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예우·재원운용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 추진위원회 기능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 ◎ 기증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자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 기반을 확대함.

3 추진성과

- ◎ 경기도는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과 상담·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임
- ◎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를 통해 장기기증 홍보, 생명존중 교육, 기증 상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4 기대효과

- ◎ 도시사의 책무 강화, 지원계획의 제도화, 위원회 기능 명확화, 기증자 예우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 생명나눔 주간 운영 등 지속적인 사회적 홍보를 통해 기증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장기이식 수급의 형평성 개선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계획

- ◎ 조례 취지를 반영하여, 생명나눔 실천 확산을 위한 연중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
-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기증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함
- ◎ 도민 참여형 캠페인 및 기증자·유족 예우행사를 정례화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함
- ◎ 장기·조직 기증 관련 통계 및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향후 지원체계 및 관련 조례의 지속적 보완 근거로 활용함

1 조례개요

◎ 추진 배경

- 전남 등록장애인 비율은 인구 대비 7.6%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비중 : '14년 7.5%(143,128명) → '17년 7.5%(143,128명) → '20년 7.6%(140,942명) → '23년 7.6%(136,472명) _ <출처:보건복지부>
- 장애인 중 고령장애인의 비중이 59.8%에 달해 복합적 복지 수요 증가
 - 고령장애인 비중 : '14년 51.3%(73,397명) → '17년 54.5%(77,527명) → '20년 57.4%(80,865명) → '23년 59.8%(81,642명) _ <출처:보건복지부>
-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1,321명(70개소, '23.12.기준)으로 99% 이상이 재가 장애인으로 지역 사회 내 생활 기반 마련 절실함
- 의료·복지·주거·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장애인 친화적 환경조성의 필요하며 이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

◎ 제정 목적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의 포용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친화도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장애인친화도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개선

◎ 영향평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관점 반영. 시·군 사업 참여 유도

◎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 추진(안 제8조)

-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친화 모델 발굴 및 성공 사례 확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안 제9조, 제10조)

- 관련 기관·단체 협력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해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

3 추진성과

◎ 권리중심 최종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 2025년 기준 120명 참여, 전일제, 복지형 등 포함해 총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
→ 전년 대비 341개 증가

◎ 장애인친화형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총 122억원이 투입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목포시)가 '25.8.20 임시 개원 → 장애아동 전문 재활치료 및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
- 이와 함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4개소, 의료기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4 기대효과

◎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무장애 전남 실현
- 장애인 인권보호·차별해소·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포용복지 공동체 구축

◎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 공공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촉진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건강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가족 부담 경감 및 지역 균형발전

- 장애아동 가족 대상 상담·심리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완화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시도 전역 균형 복지 기반 마련

5 향후계획

◎ 도시 조성

- 시군과 협력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시범 지역 지정 및 성공 사례 전파

◎ 일자리 확대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 규모 확대

◎ 제도 개선

-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정례 간담회 운영

◎ 의료 접근성

-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안정화 및 동부권/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검토
- 장애인친화 의료기관(검진기관, 보건의료센터 등) 지속 확대 지정

◎ 통합 지원

- 공공의료·복지·고용·교육 연계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확대

◎ 최종 비전

- 전라남도 전역을 장애인친화 의료 복지 통합 모델로 발전

1 조례개요

- ◎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최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도권에서만 지난 10년간 500억 이상 공사장 150여 개소 공사비 증액 약 100조 원이 넘어 사전 의견 수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 이에, 본 조례안은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사업주관 부서로 하여금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도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 제2조(정의) '대형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총 공사비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의함
- ◎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제4조(기능) 협의회에서 협의 및 조정
- ◎ 제5조(협의회 구성) 협의회 설치 및 해산의 요건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임명 또는 위촉
- ◎ 제7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대효과

- ◎ 주민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확대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대상시군	전라남도 22개
사업비	20백만원
사업내용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공청회

-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 등의 불합리를 설계과정에서 미리 해소
-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공청회 등 긍정적인 효과

◎ 대형공사 현장 및 예방 활동 강화

-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 - 안전보건교육 교육비 (온라인 등)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대상시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 분기별 4회)
사업비	20백만원
사업내용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4 향후계획

◎ 주민협의회 시범 운영 추진

-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협의회 구성·운영 사례 발굴

◎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도 홈페이지 및 공사정보시스템에 주민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공개로 투명성 강화

◎ 대형공사 관리체계 강화

- 협의회 의견이 설계변경·공사 중단 등 주요 결정 단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연계 강화

1 조례개요

◎추진배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지원사업 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자 직무전환 등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지원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지원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지원 ▲노동자의 창업 촉진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등의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산업보호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산업·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노동단체·사용자단체·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추진성과

◎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 운영('23 ~ '24)

- 2023년과 2024년 대표위원으로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간담회·강연회·현지활동·토론회·연구용역 등 진행

구분	날짜/장소	내용
강연회	2023.6.22./전남학생문화회관	전남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과제와 역할
토론회	2024.3.26.(화) 순천신대도서관열린강당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위한 기후행동보상제 고찰
	2024.10.28.(월) 호남화력본부 소회의실	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실현에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응 방향
정책 연구용역	2023. 6. 14. ~ 12. 13. (6개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2025. 5. 2. ~11. 29. (7개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방안 연구

- (주)법률저널이 주최한 2024년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의원연구단체)부문 '우수상' 수상(2024.11.23.)

4 기대효과

◎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급격한 산업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

5 향후계획

- ◎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 원활한 전환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32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강문성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목적

- 도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필요성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 분야의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오픈AI의 AI데이터센터 유치라는 전략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AI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산업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 산업데이터 공유·활용·거래 활성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3 추진성과

◎ 국가 정책과의 연계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 `25.10.01.)에 따른 국가 차원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전라남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적근거 수립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조례 시행에 따라 향후 3년 단위의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지원 정책개발 기반 조성

4 기대효과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개소에 맞춘 관련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전환사업 확대
- 시·군별 산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지역 간 성장격차 해소

◎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도내 중소기업의 AI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
- AI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으로 청년 일자리 연계 등 고용효과 기대

5 향후계획

◎ 산업별 디지털 전환전략 수립

- 국가 차원의 AI 정책과 연계한 제조, 관광, 농수산, 에너지 등 도내 주력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로드맵 개발
-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 도입, 인력 수요, 투자 규모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

◎ 데이터·기술 인프라 구축

- 도내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용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기반 기술 플랫폼 구축
-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진입장벽 낮춤

3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류기준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 염소 생산지, 특히 화순군은 번식·사육·유통이 집약된 핵심 거점임

<2023년말 기준 시도별 염소사육 마릿수>

구분	전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마릿수	423,430	21,113	20,416	67,818	47,328	73,958	103,792	36,553	36,731
비율(%)	100.0	5.0	4.8	16.0	11.2	17.5	24.5	8.6	8.7

※ 전남 1,487호 103천두(전국 24%, 1위), 전국 10,263호 423천두

- ◎ 그동안 염소산업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사육농가 지원·질병관리·가공·유통·브랜드화 등 전 과정이 행정 공백 속에 놓여 있었음
- ◎ 전남도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전국 최초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 ◎ 제4조 기본계획
 - 염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제5조 추진사업
 - 연구개발,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질병예방 및 방역, 인력양성, 브랜드화 및 판로 지원 등
- ◎ 제6조 지원사업
 - 시설·장비·홍보사업 지원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3 추진성과

- 대한민국 흑염소 명품 브랜드 육성(신규) 국비 지원 건의 (25.06.12)
- 흑염소 이력제 도입 및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건의(농식품부) : '25. 8. 21.
-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도) : '25. 9. 9. ~ 11.(36개소)
- 전라남도 흑염소 광역브랜드 협의회 개최 : '25. 9. 3.

4 기대효과

- ◎ 전남형 염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축산 모델 실현
- ◎ 소규모·고령농가의 지속 가능한 사육 기반 확보로 농가 소득 안정화
- ◎ 도 농업기술원 흑염소 가공식품 연구로 6차산업 연계형 신산업 육성

5 향후계획

- ◎ (장기) 이력제 도입 및 광역브랜드 육성을 통해 산업기반 강화
 - 이력제 도입(26년 ~), 브랜드 육성(브랜드육 및 제품 개발, 유통망 확대)
- ◎ 생산·유통·가공 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
- ◎ 화순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 '전남형 염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별 특화 품종과 브랜드화를 병행해 전국 표준 모델화 추진
- ◎ 6차 산업 연계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법적 근거 및 연계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5조·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무를 구체화
-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타 광역지자체의 유사 조례 제정(2023~2024년) 추세에 부응한 후속 입법임

2 주요내용

◎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및 사업 근거(제2조·제3조)

-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
- 도지사는 예방교육·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사회적 자원 연계 등 5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제4조~제6조)

-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 의료기관·보호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비밀준수 의무(제5조)

-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추진성과

◎ 입법 성과

- 2024년 9월 박경미 의원 외 41명 발의 →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원안가결(10월 8일)
- 도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정책과 중심의 예방정책 추진 기반 확보

◎ 재정적 기반 마련

- 시행 시 향후 5년간 총 26억4천만 원(연평균 약 5억2천8백만 원) 투입 예정
-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도비 40% 매칭 지원체계 마련

◎ 언론 및 사회적 반향(요약)

- 도민 안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평가되었으며, 각종 언론과 기관에서 긍정적 보도로 확산
- 경찰·법무·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 시행에 동참

4 기대효과

◎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강화

-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공공장소·생활권 범죄위험 요인 최소화
- 피해자 심리·법률·의료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회복 중심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모델 구축

- 자치경찰위원회,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병원 등 유관기관 협업 기반의 지역맞춤형 대응체계 완성
- 사회 불안 해소 및 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전남형 안전정책 모델로 발전 가능성 높음

5 향후계획

- ◎ 조례 공포 후 시행규칙 제정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자치경찰정책과 주관)
- ◎ 도내 22개 시·군 대상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단계적 추진(24~26)
-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예방홍보 강화
- ◎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및 타 지역 확산 추진

1 조례개요

◎ 제정 배경

- 세종시는 신도심과 읍·면 지역 간 인구·경제·문화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이 사업별로 운영주체·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의회 전반기부터 수차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면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 제정목적

- 관내에 설치된 주민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적용범위

- 세종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도시재생뉴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등) 약 24개소에 적용

2 주요내용

◎ 운영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위·수탁 운영제도 정비

- 법인·단체 등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입찰·성과평가 등 절차를 규정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조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공공요금, 시설수선비, 활성화비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 수익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

◎ 점검·진단 및 사후지원 체계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컨설팅 등 사후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거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 주민·청년·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점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및 협치형 거버넌스 구조 마련

3 추진성과

- 읍·면지역 거점시설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틀 마련
- 현재 약 24개 거점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 준비 중이며, 주민주체 및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모델 확산

4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 실현

- 거점시설의 운영격차 완화 및 생활권 단위 자립형 구조 마련
- 개별사업단위로 분산된 운영체계를 생활권 통합형으로 전환해 행정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

◎ 주민참여형 공공운영 정착

- 주민·청년이 거점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및 정책 체감성이 향상되며, 수탁자 제도 도입으로 지역 기반 조직의 자율적 운영이 제도화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중심의 운영모델이 확산되면서 지역 자원순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 전국 확산 가능성 확보

- 전국 최초 조례로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농촌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복합형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 가능

5 향후계획

◎ 시행규칙 제정 및 운영평가체계 마련

- 시설별 운영성과, 참여도, 재정자립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시행 예정

◎ 민관협치형 거점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 생활권 단위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 운영

◎ 정책 연계 및 제도 고도화

- 도시재생,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농촌활성화 등과 연계된 생활SOC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및 후속 조례 (예: 「타운매니지먼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검토

1 조례개요

◎ 제안배경

- 2022. ~ 2024. 9. 전라남도 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피해아동 2,938명 중 7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은 2,306명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생) 아동학대 통계는 604건으로 전라남도 통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7세~17세 아동은 대부분 학생으로 추정됨에도 이처럼 통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국 최초,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강화 기반 마련

- 이에 전라남도교육감과 학교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 전라남도교육감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함(제4조)
- ◎ 교육감이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과 학대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제6조)
- ◎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피해학생에 대한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정함(제7조)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및 제9조)

3 추진성과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개정 공감대 견인

- 기존 조례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만을 규정
- 전라남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상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부정적
-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안 대표발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에 이르게 됨

4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체계 구축

-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 학부모 교육, 피해학생 지원,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전라남도교육청과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강화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의무관리기구를 두고 학생의 출결 관리 등 아동학대 신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최소화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지원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개정 조례 시행 점검

-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과 학교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점검

◎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의 유효성·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점이 있는 경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자립 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임

1 조례개요

- ◎ 제정 배경(문제 인식 시각)
 -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2019년 239명 → 2023년 1,477명, 약 6배 증가)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을 연상시키는 상품명·광고·브랜드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청소년의 호기심과 인식 왜곡 초래
 - 학생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유해 용어와 표현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정책적 배경(정책 대응 시각)
 - 기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언어·광고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식 왜곡을 방지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제고
 -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체계를 통해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구축, 예방 중심 교육행정 기반 확보
- ◎ 정책적 방향(미래 비전 시각)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교육환경보호 정책 체계 확립
 - 청소년의 마약 인식 왜곡을 방지하고, 접근성 사전 차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주요내용

- ◎ 마약류 관련 상품명·광고 사용 제한 근거 마련 (제3조)
 - 학생을 마약류 연상 상품명 및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홍보·예방교육 등의 책무를 교육감에 부여
- ◎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 중심 관리 기반 구축 (제4조)
 - 학교 주변, 온라인 등 청소년 접근 빈도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예방 중심 행정체계 확립
- ◎ 개선사업 및 홍보 추진 (제5조)
 - 캠페인, 홍보, 정보제공 등 마약류 용어 오남용 개선사업 추진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형 홍보 강화
- ◎ 전문기관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제7조)
 - 전문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효율적 추진 도모 및 전남도·시군·경찰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력 및 지역 연대형 거버넌스 구축

3 추진성과

◎ 추진 경과

- (25. 3.~4월)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관련 실태분석 및 대응 논의
 - (25. 4.~5월) 모정환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심사·의결
 - (25. 5. 15.) 조례 제정·공포(전라남도조례 제6270호)
 - (25. 하반기~) 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중
- ◎ 각종 언론에서 “청소년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기반”으로 의미를 높게 평가
- “학교 주변 유해표현 규제 강화로 학생보호 강화한 선제적 입법” 평가
 - 지역 언론에서 학생 안전 중심 조례로 긍정적 보도

4 기대효과

◎ 지역적 기대효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표현 차단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접근성 억제
-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학부모 신뢰 제고
- 학교 주변 상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문화 확산

◎ 전국적 파급효과

- 중앙정부의 마약 예방 종합대책과 연계한 정책 실현 기반 마련
- 언어·광고 환경 개선 중심의 예방정책 패러다임 제시

◎ 향후 발전방향

- 실태조사 기반 유해표현 개선사업 강화, 민관 협력 홍보 확대
- 교육청·경찰청·지자체 협약 통한 마약 연상 표현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5 향후계획

◎ 실행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광고·상품명 모니터링 정례화 및 자율개선 유도
- 실태조사·교육·홍보를 연계한 순환형 관리체계 마련
- 청소년·교직원·학부모·상인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캠페인 전개
- 교육부와 연계해 전국 단위 유해표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1 조례개요

- ◎ 제정 배경(문제 인식 시각)
 - 1995년 지방자치 도입 이후 도농 통합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동일 행정구역에 공존하면서 **행정·재정적 격차가 고착화**됨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중심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 정책적 배경(정책 대응 시각)
 -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단순 재정 조정이 아닌, **지역 관계 재설정** 과제로 인식
 - 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
- ◎ 정책적 방향(미래 비전 시각)
 - 도시와 농어촌을 **상호보완적 공동체로 인식**, 인구감소·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
 - 행정 효율 중심 통합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 균형 발전형 지역사회 모델**(기본사회 실현)로 전환

2 주요내용

- ◎ **도지사 직속 상생협의회** 설치를 통해 실행력 강화(제3조)
 - 도·시·읍·면 간 정책 조정 및 협의 기능 수행을 위해 행정·재정 격차 해소, 정책발굴, 예산·사업계획 수립 시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 **참여형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층 참여(제4조)
 - 공무원, 도·시의회, 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층 참여 구조로 정책 균형성 확보
 - 정책 수립 초기부터 도시와 농어촌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정책 추진

3 추진성과

- ◎ 추진 경과
 - 도농복합시 내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등 **도정질문**(25. 7.23.)
 - 농촌기반소득, 민생회복 쿠폰 차별 등 현실적 불균형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순천대) 및 현장 의견 수렴(25. 8.25.)
 -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건의’** 대표발의 및 본회의 채택(25. 9. 9.)
 - 도농복합시 지역구 도의원(14명)이 참여하는 **‘농어촌 차별 해소 및 법령 개선 촉구 공동성명’**발표(25. 9.18.)

-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제도화(25. 10.23.)

☞ 불균형 해소를 넘어 ‘공존형 지역사회’로 전환, 인구감소 대응형 균형발전 정책 모델 구축, 협치 기반의 지방자치 혁신 실현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기반 사회 구축과 ‘기본사회’ 실현의 첫걸음

4 기대효과

◎ 지역적 기대효과

- 도시와 농어촌 간 행정·재정 격차 완화로 주민 체감형 정책 구현 가능
- 정책 수립 초기부터 농어촌 의견 반영으로 지원 누락 및 불균형 문제 해소
- 도-시-읍-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시적 소통·협력 기반 마련

◎ 전국적 파급효과

- 전국 최초 도농상생 협의체 제도화로 타 시도 정책 모델로 확산 가능
- 인구감소 대응, 균형발전, 기본사회 실현 등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

◎ 향후 발전방향

- 협의회 결과를 정책·예산편성 과정에 단계별 반영, 정책 실행의 지속성 확보
-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 주민 참여 확대

5 향후계획

◎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구축

- 협의회 운영 결과를 정책·예산 과정에 단계별로 반영해 실행력 강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도농 간 공동체 의제 도출, 우선과제 선정 후 추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순환형 관리체계 마련
- 단발성 정책이 아닌, 정책 실행 - 평가 - 환류로 구조화된 거버넌스 모델로 정착,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39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주용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 취지와 배경

- 전라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의 장기화와 소상공인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상권의 활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청년소상공인의 자립과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 정의의 원칙(차별점)

- '청년소상공인'을 「청년기본법」 제3조의 '청년'(19-34세)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 특정
- 이는 최근 다수 사업·조례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과도하게 확장해 대상이 희석되는 경향을 교정하고, 정책 타깃의 명료성·형평성·평가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임

◎ 정책 집행 구조의 특징

-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며(필요 시 기존 소상공인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계획-사업-협력-위탁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집행 체계를 구축

2 주요내용

◎ 정의와 책무

- 정의 : 청년소상공인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책무 : 도지사는 체계적 육성 및 경영안정 시책을 추진해야 함(의무 규정으로 정책 책임성 강화)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매년)

- 연례 계획 :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계획의 통합성 : 필요 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조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중복·단절 최소화)
- 계획 필수 내용 : ① 정책 기본방향, ② 현황·여건·전망, ③ 육성·경영안정 시책, ④ 협력 활성화 시책, ⑤ 기타 필요사항

◎ 지원사업

- 핵심수단 : ① 상품개발/유통·홍보, ② 경영 교육·상담, ③ 시설(환경) 개선, ④ 네트워킹·공동사업 등 협력 활성화, ⑤ 우수사례 발굴·확산, ⑥ 기타 필요사항

◎ 협력·위탁 체계

- 협력 : 시·군, 유관기관, 당사자(청년소상공인)와의 협력체계 구축
- 위탁 :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사무 위탁 가능(전문성·집행속도 제고)

3 추진성과

- ◎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예산 반영 중)
- ◎ 2026년 전남 대학창업 지원사업(계획, 예산 반영 중)
- ◎ 「전라남도의회 농촌 창업 연구회」 회의 안건 활용
- ◎ 「전남도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및 안건 활용

4 기대효과

- ◎ 타깃 명료화에 따른 정책 효율성 제고
 - 19-34세로 대상이 선명해져 정책 누수·중복을 축소하고, 예산 단위당 정책효과(성과/비용)가 상승
- ◎ 청년 주도의 로컬 상권 재생
 - 브랜딩·디지털유통·공동마케팅 등 협력형 사업모델이 확산되어 상권 흡인력이 강화되고, 빈점포 감소·야간경제 활성화 등 공간 효과 기대
- ◎ 지방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기여)
 - 청년소상공인이 초기 고용의 중요한 공급자이자 지역소득의 지역내 환류(소득의 지역내 소비·투자)를 확대하는 주체로 기능

5 향후계획

- ◎ 청년소상공인 유관 예산 편성(2025.12.)
- ◎ 청년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점검(2026.01.)
- ◎ 청년소상공인 지원 사업 운영 점검(2026.01.~12.)
- ◎ 우수 청년소상공인 지원 사례 발굴(2026.12.)
- ◎ 청년소상공인 지원 정책 성과 환류회 및 개선 계획 도출(2026.12.)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 세계 개화식물의 87%가 곤충에 의한 수분,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
- [농림부 통계]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함**
- 그린피스(Greenpeace), 벌의 위기와 보호 정책 제안 보고서]
- 벌이 다양한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국내 기준 5.8조 원 이상**으로 추정

◎ 조례 제안 이유

-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최초의 선제적 대응**으로,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정원·녹지 등에 밀원 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을 규정함
- 양봉농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꿀벌 및 화분 매개자 서식처를 조성·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 제5조(꿀벌 보호)

-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꿀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7조(지원사업)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추진성과

- ◎ ('24.8.20) 꿀벌 ESG 포럼 개최로 민관협력 제도화 기반 마련
- ◎ ('25.5.20)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 맞아 꿀벌 보호 조례의 적극적 시행 및 정책 확대 강조

4 기대효과

- ◎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에서 △양봉 기술지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시공원 내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 중
- ◎ 서울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해 북서울꿈의숲에 꿀벌 정원 조성

41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조옥현 전라남도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및 전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전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table border="1"> <caption>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단위:건, 명)</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사고건수</th> <th>사망자수</th> <th>부상자수</th> </tr> </thead> <tbody> <tr> <td>2020</td> <td>8,400</td> <td>24</td> <td>10,500</td> </tr> <tr> <td>2021</td> <td>8,889</td> <td>23</td> <td>10,978</td> </tr> <tr> <td>2022</td> <td>9,163</td> <td>18</td> <td>11,389</td> </tr> <tr> <td>2023</td> <td>8,753</td> <td>14</td> <td>10,910</td> </tr> <tr> <td>2024</td> <td>9,149</td> <td>12</td> <td>11,319</td> </tr> </tbody> </table>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20	8,400	24	10,500	2021	8,889	23	10,978	2022	9,163	18	11,389	2023	8,753	14	10,910	2024	9,149	12	1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사고 18건 / 부상 19명 - 2021년: 사고 9건 / 부상 9명 - 2022년: 사고 13건 / 부상 13명 - 2023년: 사고 14건 / 부상 20명 - 2024년: 사고 9건 / 부상 9명 <p>*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p>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20	8,400	24	10,500																						
2021	8,889	23	10,978																						
2022	9,163	18	11,389																						
2023	8,753	14	10,910																						
2024	9,149	12	11,319																						

- 전남의 차량방호울타리 미설치를 94%

2 주요내용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인도 돌진으로 인한 중상·사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행자 이탈 방지용 중심의 기존 펜스 수준을 넘어 차량 충격을 견디는 차량방호 안전시설(SB1 등급 이상)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 조례 시행력을 높이고자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기대효과

- ◎ 직접 안전효과: 차량의 인도 침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
 - 어린이 중상·사망 위험 실질 감소, 학부모·교사 체감 안전성 향상
- ◎ 형평성 제고: 도 재정지원 근거로 재정 취약 시·군의 설치 격차 완화, 광역 차원의 표준적 안전수준 확보
- ◎ 정책 확산 가능성: 전수 실태분석-우선순위 설치-성과평가의 선순환 체계 구축 시, 전국 확산 모델로 파급

4 향후계획

- ◎ 2026년 목포시 SB등급 난간 설치 예산(2억원) 확보 완료 및 설치 예정
- ◎ 재난안전 특교세(안전통학로 조성) 확보 후 사업 추진
 - 구례군: 720백만원(특 360, 군 360) 차량용 방호울타리 1,700m
 - 영암군: 350백만원(특 310, 군 40) 차량용 방호울타리 180m,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640m
- ◎ “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검토 후 사업 추진 요청 (도→시군), 보행어린이 사고지점 우선
 - 시·군별 스크론헤험도·교통량·사고·접근성 지표 수집, SB 등급 충족 여부 진단
- ◎ 재정지원 체계화: 도·시·군 매칭 비율 가이드, 설계·시공 표준 배포

1 조례개요

◎ 입법취지 및 조례목적

-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쓰레기집은 악취와 화재 위험 등을 유발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에 큰 위협. 과거 취약계층 중심에서, 무한 경쟁 속 사회적 고립, 정신적 불안,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 최근 경기도 오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사망사고 발생. 해당 여성은 저장 강박으로 보이는 정황 포착. 저장 강박 가구의 위험성을 시사
- 건강보험공단 통계(2019년)에 따르면 강박장애 환자의 절반 이상(20 대 28.3%, 30 대 20.6%)이 청년층.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되어 청년층은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례」에 청년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청년층이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기적 동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 최초 청년층을 명문화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층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여, 우울증·번아웃·고립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

◎ 통합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환경 개선, 심리 상담, 재기지원까지 체계적 지원 가능

-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 위기에서 구출 가능토록 함

3 추진성과

◎ 청년 지원 공백 해소

- 전국 94개 지자체가 저장 강박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문화하여 포함한 곳은 용산구가 유일. 보수 텃밭인 용산구에서 여성·청년 비례대표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청년정책에 기여
-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용산구가 청년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강조하는 성과를 달성함
- 용산의 다수당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청년 복지’를 위한 정책을 선점하고, 용산구의 ‘복지 도시, 청년 미래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했다고 자평함

4 기대효과

- ◎ 용산구에서 최초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이는 추후 전국 어디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정책의 본류는 용산구 민주당의 정책이었음을 보여주는 히스토리를 남김
- ◎ 용산구가 청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청년 복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용산구'란 정책 목표를 갖고자 노력하여 정책적 성과를 달성함
- ◎ 청년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청년 쓰레기집은 미래 포기과 고독사 연관성이 높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조례를 통한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는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안전망 역할을 함
- ◎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 기대
 - 현재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다양하나, 번아웃, 우울증 등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정책 마련에 기여

5 향후계획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26년도 용산구 청년 쓰레기집 관련 예산 편성
 - 조례 제정 후 곧바로 행정절차에 착수. 용산구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체계적 준비 중
- ◎ 현대차그룹 사회공헌사업으로 '청년 쓰레기집 청소 관련 봉사' 관련 신사업으로 제안받고 논의 중
 -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과 용산 지역 사회와의 협업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

1 조례개요

- ◎ 부천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있음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어 장벽, 문화 적응 문제, 학업 격차, 심리적 불안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 ◎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 **안 제1조(목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를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
- ◎ **안 제2조(목적)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함.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정주 이주아동 등 다양한 이주 유형을 포괄하고 있음
 - 단순히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닌, 국내 이주 과정에서 교육·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함으로써 포용적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함
-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시장이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시책 마련에 책임을 지도록 함
 - 이주 아동 관련 정책이 단순 민간 위탁이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행정적 지속성과 책무성을 제도화함
- ◎ **안 제5조(지원계획)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 또는 기존 계획 내 편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단년도 단위의 임시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제공
 -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와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였음

◎ 안 제6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정착 지원, 언어교육, 정서 안정, 진로설계, 인식 개선 등 다분야 통합적 접근을 반영하였음.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공공 책임 하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제3항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와 이중언어 교육뿐 아니라 모국어 자격증 취득 지원을 포함함 이는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과 사회적응을 돕고,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음. 모국어 능력은 심리적 안정과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며, 다문화 가정 내 세대 간 소통과 유대 강화에도 기여함. 또한, 모국어 자격증은 진로와 취업 시 다국어 역량을 강화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진로 역량 강화 사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인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1 조례개요

- ◎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함
- ◎ **쪽방촌 지원을 위한 관련 지방의회 조례, 광주·전남 및 자치구 최초 제정**

2 주요내용

- ◎ 쪽방주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쪽방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근거 명시 (제1조~제5조)
- ◎ 쪽방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쪽방 주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규정 명시(제6조)
- ◎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대상 위탁 시행
- ◎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신설(제8조)
 - 추후에 건립된 쪽방 주민 거점센터인 **‘광주 동구 들랄날랑 커뮤니티 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 ◎ 비용의 지원(제9조)
 - 쪽방 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명시

3 추진성과

- ◎ **쪽방 거주민 지원 정책적 개입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쪽방 거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개입에 한계 노정
 - **광주·전남 최초 및 자치구 최초로 쪽방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 ◎ 쪽방 거주민 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
 - 거점공간인 **쪽빛상담소** 개소(2024. 2. 13.)하여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 생계지원 및 기타 행정지원을 전담하여 추진
 - **들랄날랑커뮤니티센터** 개소(2024. 3. 28.)하여 평일 식사(점심) 지원, 샤워실 및 빨래방 지원, 건강증진실 운영, 문화·여가프로그램 진행

◎ 쪽방 거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5대 전략체계/25개 세부사업/12개 부서로 구성하여 쪽방주민들의 욕구 및 니즈 파악 후 시책 시행

◎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규모 확대 및 운영체계 활성화

4 기대효과

◎ 쪽방촌 거주민을 격리나 혐오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재활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및 거주민 스스로 사회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 수행에 기여

◎ 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추진)체계 구축

5 향후계획

◎ 쪽빛상담소 및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지원 및 2025년 쪽방 거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시 쪽방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임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행동장애(저장강박장애의 일종)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화재·위생·악취·전염병 등 이웃과의 갈등 요인 발생 가능과 **공공 위생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단순 청소로 해결되지 않고 ‘**치우면 또 쌓이는**’ **반복적 양상**을 보이므로, 심리치료·정신건강 상담·환경 개선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함

◎ 조례 제정의 목적

-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환경 개선,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책무(제1조~제3조)

- 저장강박·저장강박 의심가구·보호의무자 개념 정의
-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및 정신건강 상담체계 구축 의무 명시
-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소외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규정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4조~제5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심
- 지원내용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및 민간협력체계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제6조~제8조)

- 구청장은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 내 복지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근거 마련

3 추진성과

◎ 사업 실행 실적

- 2024년11월15일 조례제정 이후 13가구 지원함
(대청소 및 물품지원, 심리치료, 정신건강 상담 등)

4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복지 실현

- 저장강박으로 인한 위생·화재·악취 문제 해소 → 이웃갈등 감소 및 생활안전 향상
- 심리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회복 및 사회 재적응 촉진

◎ 지역 통합돌봄 모델 강화

- 복지·보건·환경 통합 접근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5 향후계획

◎ 운영 및 예산계획

- 연평균 예산 약 5천만 원 미만(1세대당 200만 원, 약 10세대 기준)
- 청소·방역·심리상담 등 실질 지원 중심으로 운영

◎ 중장기 발전방향

-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심리치료·주거환경 개선 통합모델 고도화를 통한 재발 방지

1 조례개요

- ◎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음
- ◎ 목포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행사 개최·운영시 ESG 실천의 기본원칙 설정
 -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 ◎ ◎ ESG 실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지원내용
 -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

3 추진성과

- ◎ 일회용품 근절 다회용기 사용
 - 목포항구축제 먹거리존 다회용기 사용('25. 9. 26. ~ 28.)
 -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미식로드 다회용기 사용('25. 10. 1. ~ 26.)

4 기대효과

- ◎ '25. 4. 제정 이후 2번의 큰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 ◎ 행사·축제시 일회용품 근절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화

5 향후계획

- ◎ 매 축제 시마다 다회용기 지원·관리하여 꾸준히 사용하도록 추진
- ◎ ESG 실천·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1 조례개요

- 이 조례는 단순히 법률 용어를 나열한 문서가 아닌 아동·청소년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고, 절망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희망의 등불
-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빚의 굴레에 갇히는 비극을 막고자, 인천 중구의회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내놓은 따뜻한 약속
- 이 조례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빚이 아닌 꿈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2 주요내용

◎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굳건한 울타리

- (지원 대상) 부모의 채무로 인해 빚을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인천 중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빚의 무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 함
-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서류 준비, 소송 지원 등 모든 과정 지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 상속 포기과 한정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

3 추진성과

◎ 빚 대물림을 끊어내는 희망의 시작

- 이 조례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2024년 9월 30일 시행)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
- 추후 발생할 사례를 통해,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구원이었음을 증명할 것

4 기대효과

◎ 빚의 대물림을 끊고, 아동·청소년들의 희망을 잇는 사회적 구원

- 이 조례는 단순히 법률 지원을 넘어, 가난과 빚의 악순환을 끊는 '사회적 단절'을 목표로 함.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들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어, 그들이 학업과 진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 조례가 가져올 변화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확산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희망을 밝히는 빛이 될 것

◎ 전국으로 퍼져나갈 모범 사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

-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빗 대물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도적인 사례. 이 조례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감을 주어 유사 조례 제정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 조례는 단순히 중구의 아동·청소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5 향후계획

-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복지 기관, 법률 전문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속적인 사례 분석 및 조례 보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빗의 무게에 짓눌리는 아동·청소년들이 없도록 최선

1 조례개요

- ◎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알이 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및 지원
- ◎ 지능형 전력망 및 전기신사업 추진
- ◎ RE100 산업 지원기관, 시설의 건립 및 운영
-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 ◎ 국내외 전시회와 교육·홍보 사업
- ◎ 국내외 기술 정보교류와 우선구매·보조금 등의 행정지원

3 추진성과

- ◎ 인천 계양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차 분양 개시
 - 지방 태양광 의무화를 반영해 저탄소 산업단지 모델 실현
-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계양형 비전, '탄소중립을 꿈과 비상의 기회로, 기후환경 그린도시 계양'

4 기대효과

- ◎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RE100 기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설비, 연구,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
- ◎ 친환경 산업 거버넌스 구축
 - 행정기관,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청 주도의 지속 가능한 RE100 추진체계를 제도화

- ◎ 계양 테크노밸리 발전에 기여
 - 현재 조성 중인 계양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 적용 가능
- ◎ 구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
 - 교육·홍보 사업을 통해 구민의 에너지 전환 인식 제고,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강화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또한, 지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향상

5 향후계획

- ◎ 관내 기업 RE100 캠페인 참여 독려 및 홍보
- ◎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 ◎ 스마트 시티 및 공공 서비스 연계

49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위영란 경기도화성특례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조례개요

- 조례명 :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발의 :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대표 발의) 외 5인
- 제정일자 : 2025. 9. 30. 조례 제2464호(시행일자 : 2026. 3. 27.)
- 지원내용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운영 기반 마련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 동력 확보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 운영	연계·협력 강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

◎ 추진배경

- 화성특례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의료·요양·돌봄 등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함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화성특례시는 시민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함

◎ 추진방향

-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보건·의료·요양·일상 생활돌봄 등을 연계하여 분절적 서비스 지원을 개선하고 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 및 회의를 추진하여 신속한 지원 기반을 마련함
-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적 구조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함
-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조례 제정 및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면밀하고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 관련사업: 돌봄통합지원 연계사업
- ◎ 사업기간: 2025. 3.부터 ~ 계속 운영
- ◎ 사업비
 - (시범)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 692,612천원
 - 돌봄통합지원 연계사업 : 89,705,232천원(6개 분야 37개 사업)
- ◎ 사업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화성시민 누구나
- ◎ 사업내용
 - 돌봄통합추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화성형 돌봄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3 추진성과

- ◎ **(시범)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692,612천원)**
 - 예방체계 구축 1,029건, 사각지대채움서비스 535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781건, 계속거주 마을공동체 조성 11건 지원
- ◎ **돌봄통합 전담조직 구성(TF팀: 팀장, 팀원 각 1명, 전담인력: 사회복지직, 간호직 각 1명)**
- ◎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사업(기술지원형(비예산)) 선정 및 실시**
 - 돌봄 통합지원 회의 2회 실시(4개 분야, 18가지 서비스 제공 중)
- ◎ **돌봄통합지원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등**
 -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포럼 & 중간발표회(1회)
 - 읍면동 돌봄업무 담당자 및 복지팀장 역량강화 교육 추진(3회)
 - 돌봄소관부서 및 복지관 종사자 교육(1회), 협력방안 논의(1회)
 -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자문단 회의 시행(1회)
 - 화성시 복지정책 포럼(1회) 및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 실시(1회)

4 기대효과

- ◎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업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 돌봄사업 통합체계 조성을 통한 분절·중복 서비스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5 향후계획

- ◎ (2025. 11.)화성형 돌봄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 2026년 화성시 돌봄통합 지역계획 수립

- 화성형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정신질환자 포함
 - 7대분야 16개 영역 서비스 제공
- ◎ (2025. 11.)가칭)주거안심회복주택 협약 체결(LH경기남부지역본부↔화성시)
 - 퇴원환자·위기가구 등 돌봄 공백 대상자에게 회복지원 및 단기·계속 주거지원 →사업량 5개소
(봉담2지구 3개소, 향남2지구 2개소)
- ◎ (2025. 11.)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 화성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및 실무단 구성

1 조례개요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이란?

-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 71~84)으로 인식되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는 부재
-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습·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

◎ 사회적 약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기본가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본 조례

-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례 제정

◎ 지원 근거 마련

-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단계에 걸칠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기본가치 규정 : 경계선지능인의 존엄 보장과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이념 정립

◎ 생애 전 주기 지원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사업계획
-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운영, 맞춤형 고용·직업훈련 등 생애 주기별 지원
-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

◎ 전담 기관 및 거버넌스

-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 설치·운영
- 위원회 설치를 통한 관련 부작용 해소
- 유관기관,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활 방향 확장

3 추진성과

◎ 전국최초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

- 경계선지능인 관련 '평생교육 지원' 또는 '지원'조례와 다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기본가치)의 법적 근거를

- 마련한 기본조례 최초 제정·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타 지자체 또한 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 중· 입법예고 (2026년 4월 2일 시행) - 제도적 근거와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예

4 기대효과

-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대
- ◎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직업 등) 문제의 해결책 제시
- ◎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경계선지능인 조기 진단으로 더 큰 피해 사전 예방
- ◎ 일반인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5 향후계획

- ◎ 경계선지능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사회활동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 조례개요

- ◎ 추진배경(목적) : 인공지능(AI) 조례 인천지역 자치단체 최초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제도 기반 마련 및 신뢰 기반 조성
 - AI 활용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기본 사항 규정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윤리 기반의 공공적 활용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기본계획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인식개선·교육 추진
 - 타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본 조례를 우선 적용
 -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가능
-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조례 공포일 이후 지속 추진, 3년 주기로 수립·시행
 - 인천시 서구 전 지역 주민, 기업, 기관 및 단체 AI 활용 주체 전반
- ◎ 추진방향 & 전략
 -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확산 및 산업혁신 동력 창출
 - 공공·윤리 중심의 신뢰 기반 강화 및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공지능 기본계획 제도 정비로 공공서비스 혁신과 체감성 제고
 -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 확대 및 성과관리
 - 시민 교육 및 윤리 인식 확산

3 추진성과

- 관계부서(정보통신과) 협의 완료 및 추진: 2026년 사업계획 반영

4 기대효과

◎ 파급효과

- AI 기술 활용 산업활성화 촉진: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에 AI 적용 행정 혁신 가속화로 효율적 예산 절감 기대
- 윤리성·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AI 활용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
- 지역 문제의 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 경쟁력 확보

◎ 주민 체감성 향상 요소

- 교통, 복지, 환경 등 생활형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디지털 접근성 확대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 AI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강화

5 향후계획

◎ 지역 특화 AI 생태계 조성

-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혁신 구조 마련
- 윤리·거버넌스 정착: 기술 남용과 부작용 최소화
- 스마트 도시 구현 기반 마련: 서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변화 대응

◎ AI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확립

- 3개년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 및 로드맵 마련
- 부서 간 협력 및 민관 연계체계 정비 및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운영
- 전문가 및 산업계 참여 기반의 정책 검증 및 자문체계 구축

◎ 생활 밀착형 AI 행정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

- 민원·복지·교통·환경 분야 우선 적용
- 취약계층 대상 AI 돌봄·안전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 주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및 서구형 AI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특히 청년 세대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재무,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의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생애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 부담을 완화함

◎ 법적근거 및 주요 구조

-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노후’를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청년기의 예방적 복지 과제로 확장
-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상담·교육·연계사업을 포함한 전국 최초의 전 세대 통합형 노후준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 주요 조항 구성

- 제1조(목적)
: 시민의 안정적 노후와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제3조(시장의 책무)
: 노후준비 및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적극 추진 의무화
-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 인식 제고, 실태조사, 교육·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
-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센터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로 지역 중심 전달체계 구축

3 추진성과

◎ 정책협의 및 추진 경과

- (25.1~2)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간담회, 지자체-공단 협업모델 논의
- (25.2.6) 시정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 연계형 노후준비 정책 제안
- (25.3.31) 국민연금공단·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노후준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청년층 미래설계 지원 논의

- (25.5) 오산시 평생학습관과 국민연금공단 공동주관 「노후준비 클래스」 2회차 운영(재무, 건강, 여가, 상속 등 8개 프로그램 구성 / 시민 만족도 매우 높음)
- (25.6.13) 오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 7월 1일 조례 공포 · 시행
- (하반기) 2026년 사업화를 위한 예산 반영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협의 진행 중

4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체감성

- 시민이 스스로 노후를 설계·대비할 수 있는 평생주기형 복지서비스 모델 구축
- 청년층부터 재무·건강·관계 등 전방위적 교육·상담 참여를 통해 ‘노후=지금부터 준비’라는 인식 확산
- 기존 중장년·노인복지 중심 정책을 생애 전환기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전환

◎ 정책적 확장성

- 청년의 생애설계 지원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청년 중심 노후준비 조례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확산 중
-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한 중앙-지방 연계형 청년복지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5 향후계획

◎ 2025년 하반기

-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추진 및 예산 확보

◎ 2026년 이후

- 청년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재무컨설팅 상시화, 오산형 노후준비 종합플랫폼 구축,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미래설계 커뮤니티 및 캠페인 전개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정책적·제도적 대응 필요성

-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제정 조례

단순한 쓰레기 저감 뿐만이 아니라 생산부터 자원 재활용, 폐기물 감축과 순환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자원순환경제의 개념을 조례로 규범화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기반 구축과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로 처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배출량 감축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사업의 추진

- 폐기물 발생 억제와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필요

■ 개요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민 참여 확대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교육·홍보,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저감 등 관련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추진성과

◎ 폐기물 순환이용 사업

1.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 (현재 용역 진행 중)

·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거점형 재활용 정거장 설치·운영(2026년)

2. 무인자원회수기 추가 설치

- 2024년 5개소, 2025년 3개소 설치
- 2026년 3개소 추가 설치 예정(구로구 16개 동 중 11개소로 확대)

3.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사업

- 2025년 커피전문점 95개소, 2026년 200개소로 확대 추진

◎ 폐기물 발생 억제 사업

1.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 2024년 100가구 지원, 2025년 288가구(3배 확대) 지원
- 2026년 300가구 이상 지원 예정

2.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지원

- 2025년 4대, 2026년 5대 지원 예정

4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 구로구자원순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감소
- 2025년 9월 기준 15,133톤
- 2024년 9월 기준 15,60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2톤 감량

◎ 생활폐기물 저감

-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 처리량 감소
- 2025년 9월 기준 36,739.82톤
- 2024년 9월 기준 37,994.24톤으로 지난해보다 1,254.42톤 감량

5 향후계획

- ◎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목적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관리·감독 강화함.
- ◎ 정책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현재 진행되는 '저층 밀집 주거지의 쓰레기 정거장 용역' 결과에 따라 쓰레기 수집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더 높이고자 함

1 조례개요

- ◎ 전국 지자체 최초 조례(2025.1.1. 시행)로서 노인의 노화를 지연하고 노쇠를 예방함으로써 간병 시작 시점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부산진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1%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3.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치료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함(부산진구 의회 의원 18명 전원 동의)

2 주요내용

- ◎ 전국 최초로 '간병예방' 개념을 정의에 도입 (제2조)
- ◎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규정 (제4조)
- ◎ 간병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6조)

3 추진성과

- ◎ 일본 사회복지법인(스마일링파크)과의 간담회 참석(2024.7.18.)
- ◎ 간병예방 지원을 통한 노인의 건강수명 증진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2024.7.22.)
- ◎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와의 정책 추진 협의(2024.9.9.)
- ◎ 노인간병예방 정책연구를 위한 활동 추진
 - 선진지 현장 방문 : 국민체력100나주체력인증센터, 나주시노인복지관 (2025.6.9.), 서울시복지재단 및 은평구청 보건소 (2025.10.27.~28.)
 - 자문회의 개최 : 정희원 서울시건강총괄관·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장 (2025.10.14.)
- ◎ 조례를 근거로 노인 간병예방 지원 시범사업 추진중(2025.1~12월)
 - 담당부서 :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 예산 : 35,120천원(전액구비)
 - 추진실적(2025.10. 기준) : 노쇠진단 실시 및 단계별 집중관리 대상자 약 160명 관리

4 기대효과

- ◎ 노쇠 예방 및 간병 단계 진입 지연을 통한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 ◎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내재 역량 강화 및 건강 인식 제고
- ◎ 민관 연계, 지역 자원 발굴과 협력으로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확대
- ◎ 효과 검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간병단계에 들어가는 시점과 사망시점의 간극을 줄여 간병비 절감 및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킴
- ◎ 노인 부양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간병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

5 향후계획

- ◎ 노인 근력 강화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5.11. 심사예정)
- ◎ 간병예방 지원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체계 강화
 - 권역 확대 : 건강생활지원센터 외 마을건강센터 4개소 포함
 - 2026년 예산안 증액 : 44,720천원(2026 본예산 심사 예정)
- ◎ 의원연구단체 ‘노인 간병예방정책 연구회’ 발주 연구용역(노인 간병예방정책 활성화 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진구형 간병예방 모델 개발

1 조례개요

- ◎ 발달장애는 다른 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중 의도치 않은 도전적 행동으로 본인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금천구 모든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조례 제3조)
- ◎ 구청장이 보험료 납부, 본인 및 제3자 신체·재산상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함(조례 제4조~제7조)
- ◎ 부정 청구 등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하여 규정함(조례 제8조)

3 추진성과

- ◎ 전국 최초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정 (*2025. 1. 3. 제정 / *2025. 7. 24. 일부개정)
- ◎ 금천구 전체 발달장애인 1,029명(2025. 9. 30.기준)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 가능, 70세 이상도 가능)
- ◎ 2025년도 추경예산편성 : 보험가입비 20,000천원, 홍보비 1,000천원
 - 상해후유장애 1,000천원 이상, 배상책임 한도 10,000천원 이상, 자기부담금 100천원 이하
- ◎ ‘정재동 금천구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보험 보장 확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열린뉴스통신(2025.7.4.) 등 지역지 다수 게재
 - 구청 디지털 사이니지, 장애인복지시설 홍보, 홍보 리플릿 배치 등 사업홍보계획

4 기대효과

- ◎ 상해사고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 ◎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 및 경제적부담 완화

5 향후계획

◎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및 승인 예정(보험가입비 20,000천원)

-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보험 가입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통한 계속 지원, 장애인 관련 편의증진사업 추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민원 지속적 해결

1 조례개요

- ◎ 목포시는 항만·어항 기능이 밀집되어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 공간이 중요한 지역임
- ◎ 장기간 계류·방치된 선박이 항만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하고, 침몰·부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과 항해 안전 위험 요인이 되어 왔음
- ◎ 기존에는 국가 차원의 법령이 있었으나,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했음
- ◎ 이에 목포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목포시장 관할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적용됨
- ◎ 방치선박 외에도 폐자재,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임

2 주요내용

- ◎ 목적 및 정의
 -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구역 내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함
 - ‘방치선박’ 등의 용어 정의, 관리대상 선박 및 물체(폐선, 침몰물 등) 범위 명확화
- ◎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시장이 방치선박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일정 주기로 관할 공유수면 및 항만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 철거·이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 방치선박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이 철거·이전·폐선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필요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 시장이 방치선박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
 - 유관기관(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활동 등의 공조 규정도 포함

3 추진성과

- ◎ 방치선박 제고 공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대상으로 제거공고 시행 (2025.3.14.공고 제2025-46)

- ◎ 장기계류 및 방치선박 실태조사
 - 목포해양경찰서가 연안 및 항만구역 내 장기계류, 방치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2025.5.19.~ 6주간 실시 현재까지 파악된 관내 취역선박 32척)
- ◎ 어항 내·항만구역 내 폐선제거
 - 지자체 차원에서 방치선박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진행됨
- ◎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 도출
 - 장기계류 선박 조사 결과 '타·시군구 등록 선박이 절반 이상'이라는 문제점 도출 어선번호 확인 곤란 및 예산부족으로 계류선박보다 해안가 폐선 위주로 처리되고 있음
 - 선박이 사유재산인 점이 처리에 제약으로 작용됨

4 기대효과

- ◎ 항만 및 공유수면 공간의 효율적 이용
 - 방치선박이 항만·어항구역 및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던 비효율적 공간 점유 문제가 해소
 - 이에 따라 어업·레저·항만물류 등 해양 관련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 해양환경의 보전 및 오염 예방
 - 부식된 선박, 침몰선박, 폐자재 등이 방치되면 기름유출, 중금속 유실, 수중생태계 교란 등의 위험이 존재함
본 조례를 통해 실태조사·철거 등이 제도화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효과가 기대됨
- ◎ 항해안전 확보
 - 항만구역 내 선박의 무단 점유, 침몰·전복 위험 등은 항해·접안·어업활동에 직접적 위험 요소임.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안전성이 강화됨
- ◎ 어업인·지역 주민·관광객 등의 공공이익 증대
 -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던 폐선·방치선박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어업인의 활동 여건이 개선됨. 언론에 “폐어선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산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언급이 있음
- ◎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선도
 - 국가차원의 규제만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맞춘 세밀한 대응이 제한되어, 본 조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방치선박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임
 -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이 부각되어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 가능성 있음
- ◎ 향후 행정·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실태조사 및 보고, 공개 제도를 통하여 관리현황의 투명성이 높아 지고, 철거 등 조치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 해짐에 따라 행정책임이 강화됨
 - 시민참여 및 홍보 등을 통한 제도 설계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관리 체계로 발전가능

1 조례개요

- ◎ 「약사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규정
- ◎ 심야·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 보장·구매 편의 제공
- ◎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 기여

2 주요내용

-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사항 포함
- ◎ 홍보 및 준용에 관한 사항

3 추진성과

- ◎ 2024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 공공약국 운영 지원 사업(보건과) : 2,920만원

4 기대효과

- ◎ 국민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복약 안전 강화
 -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응급상황 시 국민의 불안감 완화
 -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안전사용 문화 확산
- ◎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체계 기반 마련
 - 공공심야약국 운영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된 지원 체계 확립
 - 지역 내 의료취약시간대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체감도 향상
- ◎ 정책적 파급효과
 - 타 자치단체로의 제도 확산 및 지역형 공공보건 서비스 모델 제시
 - 민·관 협력체계(약사회·보건소 등) 구축으로 효율적 운영 기대
- ◎ 의회 차원의 향후 발전방향
 - 공공심야약국 운영성과 지속 점검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 보완 추진

- 예산 심의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유도
- 주민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에 따른 정책 홍보·의정활동 강화

5 향후계획

- ◎ 제도 운영 점검 및 보완 추진
- ◎ 조례 시행 이후 공공심야약국 운영성과 정기 점검
 -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조례 보완 및 개선 입법 검토
- ◎ 예산 및 행정지원 촉구
 -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청
 -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 행정 협력 촉구
- ◎ 지역 보건정책과의 연계 강화
 - 응급의료·보건소 야간진료 등 지역 보건정책과의 연계정책 제안
 - 약사회,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제안,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지원

1 조례개요

◎제정 목적

- 지방자치단체 차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 제도화의 선도적 사례로 시민·기업·기관의 ESG경영 촉진 협력체계 마련
- 공공부문 포함 기업·행정 등에서 ESG 도입 및 활성화 강조, 지방자치단체의 ESG원칙 적극 도입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

2 주요내용

◎ 목적 조문

- ESG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지역 내 ESG 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목적

◎ 지원 대상 및 범위

- 기업 외 공공부문, 행정기관 등 ESG 경영 및 실행활동 지원 방향 제시

◎ 시행 주체 및 역할

- 시(市) 및 산하 기관, 지자체 내 관련 조직의 ESG활성화 책무 조항 및 위원회 구성 명시

◎ 사회적 가치 실현

- 기업 경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가치를 접목하여 '지속가능발전 시범도시'로 육성하는 제도적 토대 마련

3 추진성과

◎ 2023년

- 8월 의정부시 선도적 ESG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단체 구성 연구 보고서 완성, 11월 의정부시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실천 “흥선ECO-利-知탄소중립 포럼 토론회” 토론회 참여

◎ 2024년

- 1월 의정부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의정부 지역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 발간)를 통해 의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모형과 지속가능 발전과제 등 근거 제시, 10월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실천적 조례 일부개정, '1회용품 없는 날'지정 운영,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총 32개소 설치·운영 (13억), 청사 내 화장실별 텀블러 세척기 설치(13개소), 청사카페 세척기 1대 설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사업, 1회용품 없는 의정부 특화거리 조성 추진(동오마을 먹거리타운)

◎ 2025년

- 11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토론회' 실시

4 기대효과

- ◎ ESG 경영은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확산될 수 있어 의정부시와 같은 중소 도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해 행정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기업·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친환경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행정 및 경영 전환의 기반이 되며, 현재 실천과제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5 향후계획

- ◎ 구체적 시행계획, 책임 주체 명시, 성과 평가 및 공시 체계 마련
- ◎ 기업, 지역 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병행
→ 지자체 차원의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 특화형 실천과제 발굴
- ◎ 의회 중심의 ESG 평가제도 확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을 개발·집행하는 집행기관이 ESG 정책과 행정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유인하도록 유도하는 기반 마련.

1 조례개요

◎ 추진 배경

- 도시환경 민원 증가: 최근 사상구 내 재개발·재건축, 도로·공공시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 현장 증가로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피해 민원 급증
- 현행법 제도의 한계: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이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관리·지도 기준 및 행정절차가 미비하여 실효적인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

◎ 제정목적

-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적정 관리로 사상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생활 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제6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제7조)

◎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제8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 (제11조)

3 추진성과

- ◎ 조례 시행일이 2025. 9. 25.로(제1266호) 실제 관리·감독 및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기까지 다소 시간 필요하나 제도적 기반 확보,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자율참여 유도, 주민 민원 감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음

4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환경개선 효과

- 공사장 소음·먼지 민원 감소 : 조례 제정 후 지도·점검 강화, 예방적 행정으로 생활불편 민원 20~30% 감소 기대
- 생활환경 만족도 향상 및 공사장 인식 개선

◎ 행정적 파급효과

- 자율·협력형 행정 전환 및 현장 중심의 실효성 강화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지역 환경거버넌스 형성 : 구청·사업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관리 구조 정착
- 모범사례 확산 : 시행성과가 검증되면 부산시 타 구·군으로 정책 확산 및 벤치마킹 기대
- 주민 체감형 환경행정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제고

5 향후계획

◎ 조례 시행(25.9.) 이후 공사장·사업장 대상 실태 조사 및 이행 점검 실시

- 관리체계 구축,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제 시범운영,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지정
- 민관 협력 강화, 주민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환경캠페인(조용한 사상 만들기) 전개
- 자율관리 확산, 환경 우수사업장 인증제 도입, 저소음·저먼지 장비 보급 지원 추진
- 성과관리·평가, 민원건수, 소음측정데이터, 주민 만족도 등 성과 지표화 및 매년 평가공표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여수시는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기관과 현장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행정 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특히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자의 의견은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배제되기 쉬움
-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 한결같이 “우리의 목소리가 행정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 이에 여수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관 내부 소통을 강화, 경영 의사결정 민주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본 조례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에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가 단순한 근로 주체를 넘어 경영의 한 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노동 참여 제도 확대정책(행정안전부, 2025)’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공공 거버넌스 강화 및 노동존중도시 구현이라는 여수시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

2 주요내용

◎ 노동이사제 도입 및 범위 (제3조, 제4조)

- 정원이 100명 이상인 여수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 정원 미달인 기관도 기관 운영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가능

◎ 노동이사의 선임 및 권한 (제5조, 제6조)

- 해당 기관 소속된 노동자 중 공개모집 또는 추천 등
- 정보열람권, 안건제출권 등 실질적인 경영참여 권한 법제화 및 기관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 반영 제도적 보장

◎ 기관장의 책무 및 지원체계 (제7조, 제8조)

- 교육 제공, 정보제공, 근로시간 인정, 차별금지 등의 지원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행 및 경과조치 (제9조)

- 노동이사제 적용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3 추진성과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 (2025.7.)

- 주간 근무제, 수거용 삼륜 오토바이, 전 지역 클린하우스 설치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책 연계 방안 논의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환영 입장 표명

- 여수시 산하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해 “노동자가 조직의 경영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힘

4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노사 상생과 갈등 예방 효과

- 노동이사 경영 의사결정 참여에 따른 내부 견제·균형 기능 강화

◎ 실질적 현장민주행정 구현

-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복지·휴식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가능

◎ 지역 거버넌스 및 정책 확산 효과

- 전남권 특히 광양·순천 등 인근 도시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수립에 영향

5 향후계획

◎ 2025년

- 여수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제 시행 안내, 공단은 사규 개정 후 연내 추진 예정

◎ 2026년

- 노동이사제 적용기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7년 이후

- 노동이사제 운영평가 보고서 발간 및 조례 개선안 반영

◎ 장기목표

- 여수형 “노사협치행정 모델” 완성 및 전남권 확산 추진

61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선경 충청남도홍성군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안이유

- 홍성군은 '충남혁신도시(내포)'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변화의 중심이자 서해선(KTX) 개통으로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인구 유입 절호의 기회를 맞이함
- 홍성군으로의 귀향을 희망하는 출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 공동체 재생**을 도모하기 위함

◎ 타 조례와의 차별화

-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농업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과 농촌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본 조례는 '출향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과 연대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차별화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

2 주요내용

◎ 목적

- 귀향 희망자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의 규정

- 귀향인, 귀향 희망자, 지원사업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

◎ 군수의 책무

- 귀향 촉진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 지원사업 내용

- 정착 초기 주거·일자리·창업 지원, 귀향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귀향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협력체계 구축

- 민간 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귀향 활성화 추진

3 추진성과

-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향에서 인생 제2막을 열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 스마트팜 창업 등의 기회제공 강조 및 여론 선도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을 완료하고 본 의원이 위원 위촉됨
- 인구 증가 시책 추진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 문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임무로 현재 활동 중

◎ 사업비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소요예산 99억원. 도91, 군8)

- 은하면 대천리 일원에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4 기대효과

◎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회복

-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귀향을 촉진하여 인구감소 문제 완화, 지역공동체 활력 부여

◎ 지역경제 활성화

- 귀향인의 창업과 농촌생활 기반 조성으로 지역 내 소비·고용·생산 순환 확대

◎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통합

- 출향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세대 간 통합 유도

◎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확립

- 귀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귀향 정책 추진의 가능화

5 향후계획

◎ 귀향 촉진 정책은 일자리, 정주 여건 조성, 복지 등 많은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음

(현재 홍성군 인구정책사업 16개 부서, 108개 사업 추진중)

◎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 교류 행사 개최

- 전국 주요 도시별 ‘홍성출향인회’와 협력하여 정기 교류 행사 개최
-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SNS 등)으로 고향 소식, 지원 정책 홍보

◎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귀향 프로젝트 추진

- 기부금 일부를 귀향인 정착 기금으로 적립, 순환형 지역투자 구조 마련
- 출향인 대상 ‘홍성으로 돌아오기 챌린지’ 캠페인 전개

1 조례개요

◎ 기본 현황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I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 기근 국가 직전 단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 실제 지자체별 물 부족 사례를 보면, 2022년 전라남도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 2024년 7월 강릉시는 용수 저장 속도가 수돗물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물 부족 사태 발생

◎ 서구 현황

- `25.9월 기준 인천 서구 약 64만 6,700여명 거주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 1위로 향후 추가적인 인구 유입에 더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물 사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배수지 확충 사업 등 안정적인 수도 공급 체계가 구축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
※참고 : 인천시,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2028년까지 사업비 653억원(청라 배수지 증설 433억원, 검암 배수지 건설 220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확충 계획 발표

◎ 발의 배경

- 2024년 실제 물 부족 국가의 수자원 및 수질 관리 전략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 공무 국외연수 수행 목적으로 싱가포르 방문
- 싱가포르를 비롯한 문화·산업·숙박 시설에 자동잠금 기능이 있는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샤워기처럼 물이 나오는 절수형 구성임을 확인

2 주요내용

◎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 및 장기적인 물 사용 체계 구축 등 서구 내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을 인천 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서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로 지정
- ② 공공시설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
- ③ 절수형 부속 및 기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인천 서구에 대규모 인구 유입 및 도시개발에 따른 물 부족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

3 추진성과

◎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관련 용역 실시 예정

-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여부 전수조사
- (추진 기간) 2026.1. ~ 6.
- (사업 예산) 4,500천원 (전액 구비)

4 기대효과

◎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확대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 → 물 절약 및 효율적 물 이용
도모 기대

- 절수설비 미설치 시설 체계적 파악, 추가 설치 확대로 물 절약 문화 확산
-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 지역 내 수자원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기반 확보

5 향후계획

◎ 절수설비 등 설치·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지속 마련

- (공공부문)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절수설비 설치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지원 체계 구축
- (민간부문)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발적 절수 참여를 적극 유도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형식에 그쳤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장례비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고령화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노인의 정서적 동반자 역할 강화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정서적 고립, 돌봄 사각지대 문제 심화
 - 취약계층 노인 1인가구는 반려동물에게 의지하며 사회적 고독과 상실감을 극복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지를 지속
 - 반려동물 사망 시 경제적 부담과 정보부족, 장례절차 부재 등으로 취약계층 노인 1인가구는 큰 어려움을 겪는 중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해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폐기하거나, 불법매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법적·환경적 문제 외에 반려인에게 큰 죄책감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김
 -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부재는 취약계층 반려인의 정서·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 이에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1인가구 및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관련 5분 자유발언

- “반려동물의 복지가 반려인의 복지입니다.” (2024.5.10. 제278회 임시회)

2 주요내용

◎ 제4조(진료비 등의 지원 범위)

-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상자 : 중증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연 20만원 이내)
-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에 한하여 진료비 지원

3 추진성과

- ◎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 : 45명 (2025년 9월 기준)

4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반려인의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및 이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 및 장례절차를 포기하는 상황 방지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있는 반려문화 확립

- 취약계층도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
- 불법매장 등 부적절한 반려동물 장례관행 감소와 더불어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차원의 반려동물 복지환경 개선

◎ 향후 발전방향 : 반려동물 생애주기 통합지원

- 기초진료 · 장례지원에서 나아가 예방접종 · 중성화 · 유기동물 입양 등 단계별 서비스 확대 등 반려동물 통합지원 발전 가능성

5 향후계획

◎ 지역기반 홍보체계 강화

- 반려동물 장례식장, 동물병원, 입양센터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 및 홍보 확대 예정

◎ 지역현장에서 만나는 안내체계 마련

- 취약계층 방문빈도가 높은 복지관, 행복센터 등과 협력하여 홍보자료, 상담연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생활권 밀착형 홍보방식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신청 접근성을 높이는 안내체계 마련 예정

1 조례개요

- ◎ 공적 돌봄의 한계를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으로 보완 필요
 - 공공기관 중심의 아동돌봄은 대상과 시간, 공간 등의 제약이 있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틈새 돌봄 욕구 충족이 어려움
- ◎ 이에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를 지정 운영하여 마을공동체가 수행하는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돌봄은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며, 광산시민수당이나 일 자리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여친사업 등 공모사업에 의존함
 - 이에 겨울방학시기(12~3월) 아동들의 간식비 및 돌봄활동가 인건비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과 봉사로 운영
 -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를 지정하여 광산구 시민수당에 근거하여 활동가 인건비 및 아동에 대한 간식비 등 운영비를 공백기간 없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제1~2조 : 목적, 용어 정의
- ◎ 제3~4조 : 대상(18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수당, 교육, 간식 등)
- ◎ 제5조 : 마을아동돌봄터 지정 요건 및 방식 규정
- ◎ 제6조 : 돌봄터 운영 - 공동육아, 장난감·도서 대여, 간식 제공 등
- ◎ 제7~10조 : 연간 운영계획 수립, 감독, 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 ◎ 제11조 :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가능
- ◎ 제12~13조 : 포상, 타조례와의 관계 등

3 추진성과

- ◎ 현장 애로사항 청취
 - 2024년 광산구 시민수당이 당근일자리(온라인 선착순지원방식)로 전환되면서 마을아동돌봄활동가들의 탈락 사태 발생
 - 당근일자리 선정자를 투입해도 마을아동돌봄활동가들이 여전히 업무수행을 하여 당근일자리 참여자는 청소 업무 등 보조에 그쳐

◎ **광산구의회 발언**

- 현장 의견 반영하여 틈새 돌봄으로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확대, 시민수당 개선 제안(24.10.24. 5분자유발언), 행정 사무감사(24.12.5.), 상임위 정책제안(25.2.19.)

◎ **마을아동돌봄 거버넌스 구축 추진**

- 광산구의회 공동체 아이돌봄 정책간담회 개최(24.11.7.) 및 TF 구성으로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담당부서와 마을아동돌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질적 방안 마련
- 광산구마을활동가네트워크, 마을돌봄네트워크, 여성아동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산구의회 조영임·김영선 의원 등 20여명 참여
- ※ TF회의 : 1차(25.1.21.), 2차(25.4.3.), 3차(25.07.24.)

- **1차 성과 (24. 12.)** : 25년 사업에 당근 일자리가 아닌 구 광산형 생활형일자리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지원 확정(마을아동돌봄활동가 13명), 3-4개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과제 남김

◎ **광주광역시 마을돌봄공동체네트워크 간담회(25.4.21.)**

- 참석자 : 5개구 활동가, 광산구의원 조영임, 광주시의원 최지현

◎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25.8.27.)**

◎ **조례 제정 간담회(25.9.17.) 조례제정안 본회의 의결(25.10.30.)**

4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 근거 마련**

- 광산구에 거주하는 아동(국적 불문)들이 보릿고개 없이 마을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을 공동체 틈새돌봄공간 확대 기대

◎ **공적돌봄체계와 다른 새로운 틈새돌봄 모형**

- 현재 마을아동돌봄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례로 광주광역시와 4개구, 전국 확산 기대

5 향후계획

◎ **광산구에서 마을아동돌봄터를 지정하여 활동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연 간 2억원 규모로(개소당 5~6천만원, 3-5개소 지정) 지원 예정**

- 개소당 아동 20-30명 규모로 돌봄활동가는 광산구 시민수당 기준 일 2명(4-5시간 근무)과 조리사, 아동의 간식비 등 지원 예정

65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홍표 경상남도창원특례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경제 발전과 생활 편의성의 추구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 ◎ 환경오염 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창원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 시장과 사업자 및 창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 ◎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추진성과

◎ 추진현황

구분	토론회	캠페인	언론보도	집행기관 간담회 및 협의
건수	4	2	30	4

◎ 추진 개요

- 1) 문제의식과 준비 단계 (2019 ~ 2021년)
 - 2019년 8월 창원시-의회 공동으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시작
- 2) 캠페인·시민참여 확산 단계 (2021 ~ 2023년)
 - 2021년 6월부터 창원시 공무원 대상 공유 텀블러 사용 캠페인 본격화, 창원시의회 기후위기연구회, 그린뉴딜정책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돌돌컵·텀블러 캠페인’을 통해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임
- 3) 집행기관 설득 및 제도화 과정 (2022 ~ 2025년)
 - 집행기관은 초기, 다회용컵 세척·회수 비용, 관리체계 부재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 조치 시행(2024년 2~4월) 이후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량 증가 효과가 확인되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됨

- 2024~2025년에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기관과 수 차례 협의하고 비용부담 완화 방안, 행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집행기관 동의 확보에 주력함
- 4) 입법 성과 (2025년 5월)
-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원안가결(2025. 5. 21.)
 - 6년 이상 이어진 캠페인, 지속적인 언론 홍보, 의회 내부 연구회 활동, 의원과 집행부 간 협력의 결실로 창원시가 다회용기 사용 선도 도시로 자리 잡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4 기대효과

◎ 규제 개혁 및 개선 효과

- 청사 및 공공기관 중심의 1회용컵 반입금지 규제가 시행된 후 1회용컵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불편함, 대체제 부족 등)이 감소하였고, 1회용컵 규제 단속·감독 비용도 절감됨

◎ 비용절감 효과

- 사업비용 대비 다회용컵 회수율이 22년 78% → 23년 87% → 24년 90%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컵 분실 및 훼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 1회용컵 기준 연간 천톤의 CO₂ 배출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회용컵으로 전환 시 99%까지 감축 가능하므로,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다회용컵이 1회 이상 재사용되면 다회용컵 생산·폐기 비용보다 환경적·경제적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다회용컵 사용 평가 결과 확인됨

◎ 정책효과

- 다회용컵 사용량이 2022년 63,279회 → 2024년 348,269회로 약 5.5배 증가했으며, 이는 13,931kg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2024년 기준)로 연간 4,255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한 것과 동일한 탄소흡수 효과임
- 2025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공유 다회용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 강화에도 기여함
-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카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도 나타남

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선용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구청장은 충전시설 현황 조사, 화재예방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함

◎ 관계인(설치의무자)에 대한 권고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지하보다는 옥외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함
-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열화상 CCTV,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 가능하게 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 소방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화재 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능

3 추진성과

◎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추진성과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소방청 주관 「소방대상물 화재 재난 현장조치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에 맞춰 구 차원의 협력체계 마련
- 미추홀소방서 주관 행동매뉴얼 개정 시 구 협조 예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추진성과 (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추진)

- 화재위험이 높은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시비 75,296천 원 예산 수립, 5개 공동주택 내 29기 사업 진행 중
- 11~12월 시설 준공 예정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추진성과(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신청 시 보조금 지원(현재 0건)
- 사업예산 161,000천 원 마련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 향후 사업 신청 시 현장점검 및 심의 후 보조금 지급 예정

4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안전기반 확충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 저감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자체-소방-주민 간 협력체계 강화

- 구청과 소방서,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제고

5 향후계획

◎ 행정·기술적 연계 강화

- 미추홀소방서와 협업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행동 매뉴얼 개정 추진
- 경제지원과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전사업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속 추진
-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통한 화재예방시설 포함 유도 및 보급 대중화

1 조례개요

- ◎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기회 제공과 이중언어 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 이중언어 교육 목표와 방향, 교육과정 등 교육 실시와 활성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 시행계획
- ◎ 이중언어 교육 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이중언어 교육의 연구 개발 추진을 위한 사항 규정

3 기대효과

- ◎ 다문화 가정 부모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가족 유대 강화
- ◎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이중언어 자격 취득으로 사회 진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발달을 지원하여 언어 문제 해소
-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신감 증진

4 향후계획

- ◎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등 단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검토
- ◎ 다문화 정책 연구 지속으로 다문화 지원 정책 확대

4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안전기반 확충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 저감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자체-소방-주민 간 협력체계 강화

- 구청과 소방서,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제고

5 향후계획

◎ 행정·기술적 연계 강화

- 미추홀소방서와 협업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행동 매뉴얼 개정 추진

- 경제지원과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전사업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속 추진

-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통한 화재예방시설 포함 유도 및 보급 대중화

1 조례개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구청장은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 ◎ 관리·지원계획 수립(제5조)
 -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함
- ◎ 놀이활동가(제6조)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채용함
- ◎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제7조)
 -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 행위의 제한(제9조)
 - 통합놀이터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함
- ◎ 예산확보와 지원(제10조)
 -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추진성과

- ◎ 2023년 3월, 노원구의회, 노원구청, 세이브더칠드런 3자 협약
 -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1000일-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
- ◎ 추진내용
 - 우리동네 무장애 놀이환경 진단 및 발달장애 아동 참여워크숍 (세이브더칠드런 20,000천원)
 - 모두 맘껏 놀이터만들기 비전선포식 (구비 5,000천원)
 - 통합놀이터 신규 조성 (특교세 300,000원, 구비 500,000원)

- 놀이활동가 육성 (구비 15,000천원)
- 놀이활동가 활동 지원 (구비 23,747천원)
- ◎ **장애·비장애 아동 당사자 의견 반영**
 -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통합놀이환경진단 조사단'과 아동 참여 프로그램 '나도건축가'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 및 반영
 - 바퀴가 다닐 수 있는 우레탄 바닥, 턱이 없는 트램펄린, 휠체어 높이에 맞는 모래 놀이장, 마주보고 탈 수 있는 그네, 누워서 타는 시소 등 혁신적 놀이환경 조성
- ◎ **노원구 내 통합놀이터 신규조성**
 - 노해체육공원 통합놀이터
- ◎ **놀권리페스타 1000일 잔치 예정 (2025.11.14.)**
 - 세이브더칠드런과의 1000일 협약의 여정을 정리하는 자리

4 기대효과

- ◎ **장애인 인권 개선**
 - 함께 친구로 성장하여 공동체 화합에 이바지하며, 장애인부모도 비장애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놀이환경 마련
- ◎ **실내위주의 아동 돌봄을 실외까지 확대**
 - 인력배치를 통해 맞벌이 부모도 안심할 수 있음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 놀이활동가 육성 및 배치로 대학생, 시니어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 **세대 통합 놀이터로서의 발전 및 지역 내 작은 광장 역할**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놀이터로 발전하여 마을의 광장과 같은 역할 기대
- ◎ **아동폭력에 대한 조기 방지 및 신고 역할 가능**

69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장경원 전라남도순천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보호자 없이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관내 1인가구를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 1인가구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이상 64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출발 부터 귀가까지 병원동행 매니저가 동행하여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3 추진성과

- ◎ 2024년 전남최초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발의
- ◎ 2025년 본예산 최초 반영(7,000천원) 및 사업시행
- ◎ 2026년 본예산 증액(20,000천원) 수혜대상 확대

	2025	2026	확대내용
예산	7,000천원	20,000천원	13,000천원 증
수혜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1인가구	· 65세 이상 거동불편 1인가구 ·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부부세대	수혜대상 확대

4 기대효과

- ◎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힘든 관내 1인 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

5 향후계획

- ◎ 2025년 본예산에 최초 반영(700만원)하여 혼자 병원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서비스” 개시
- ◎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으로 증액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세대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
- ◎ 향후 당초 조례의 목적대로 거동이 어려운 1인가구 순천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농작물 품질하락, 작황 부진 등 농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식량안보가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 제1~2조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 제3조 :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 규정
- ◎ 제4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성시 지원계획의 수립 등 규정
- ◎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시책 추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규정
- ◎ 제6조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
- ◎ 제7조 : 농업인 등 대상으로 기술 보급 교육 및 훈련 등 규정
- ◎ 제8조 : 기후변화대응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 규정

3 추진성과

◎ 경기도내 최초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새로운 농작물 육성·재배지원 및 실질적인 대응 계획 수립 등 농업 부문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최초 조례

◎ 안성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구체화 및 실행력 강화 체계 구축

-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기후변화 대응 사업 및 향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구체화 및 총괄실행계획 수립 의무로 추진의 가속력 확보

◎ 2025년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성과

- (농업정책분야) 시설지원사업 2개 사업* 880백만원 지원
*농업시설 지원사업(자동개폐기, 포그시설등) /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 (농업기술보급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 5개 사업* 340백만원 지원

*이상고온대응 멜론재배 시범사업, 고온기 채소 재배 환경 개선 기술 시범,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작물수분스트레스기반 포도 재배 자동간수시스템 구축 시범,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 (농업지도분야) 기후변화대응교육지원 8개분야* 81회, 595명 참석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안전설치 및 관리특강,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및 보험 특강,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벼(수찬미)재배기술 교육,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역 농업인학습단체 과제교육, 농업 분야 기후변화 특강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 동부권 친환경감자작목반 기후변화 대응 현지연찬 교육,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마늘·양파) 재배기술 교육, 농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4 기대효과

- ◎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농가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성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로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구심점 확보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 ◎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지 적합성 분석 및 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도권 농촌의 새로운 중심, 안성시 미래 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5 향후계획

- ◎ 향후 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등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감사·견제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상실 되지 않도록 관리
-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으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책 추진 여부 감시
- ◎ 사업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사무감사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조례 반영 등 꾸준한 관심으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일상화 정착 추진

1 조례개요

-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8%에 달하며, 달서구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가 15,234마리(2024년 기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2.5% 증가하는 추세
- ◎ 그러나 돌봄 부담, 외출·입원 시 위탁공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유기·방치 문제가 심각하며, 달서구 내 공공돌봄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민간 위탁시설은 비용이 높아(1일 평균 3~5만원) 서민층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
- ◎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로 돌봄 신청 시 달서구 구민이라면 합리적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유기동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제1~2조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 제3조 : 구청장 책무 명시 (반려동물 돌봄 지원정책 수립·시행, 공공돌봄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추진 의무 부여)
-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 ◎ 제5조 :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범위 구체적 명시
 - ①임시 위탁 돌봄(외출, 여행, 입원 등), ②돌봄 교육프로그램(행동교정, 건강관리 등), ③응급 돌봄서비스(재난, 질병 등 긴급상황), ④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 등
- ◎ 제6조 : 돌봄서비스 지원의 구체적 절차 및 대상 규정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
- ◎ 제7조 : 위탁·운영 근거 명시 (전문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추진성과

- ◎ 5분 발언 - 「공공펫시터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 제안함
- ◎ '펫시터 활성화 및 반려동물 돌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달서구 경제지원과, 반려동물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공공돌봄 서비스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함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4 기대효과

- ◎ 반려동물 복지체계 구축 및 유기동물 감소
 - 연간 1000건 이상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목표 (월 80건 기준)
 - 돌봄 부담 완화로 유기·방치 예방 효과(달서구 유기동물 20% 감소 목표),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학대 예방
- ◎ 공공펫시터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계명문화대학교 협력하여 전문 펫시터 교육 및 현장실습운영,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5개 이상)
- ◎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달서구청-계명문화대학-지역 동물병원-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확립
 - 반려견 놀이터,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5 향후계획

- ◎ 「공공펫시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향후 전 구민 대상 확대를 추진
- ◎ 반려동물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마련
- ◎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 ◎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및 책임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강화
- ◎ 향후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정책영역 확대 및 '동물복지 선도도시 달서구' 조성

1 조례개요

- ◎ 2024년 1월, 충남 태안군에서 9살 아이가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낮아진 가운데, 평생 3~5년 주기로 수백만원의 치료비, 의료물품 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각종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됨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증 난치성질환 중 '제1형 당뇨병'이 제외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함
- ◎ 제정 연월일 : 24. 4. 02.
- ◎ 개정 연월일 : 24. 7. 12.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지원 대상자를 타 지자체보다 확대한 내용으로 확정 및 개정함

2 주요내용

- ◎ **고가의 소모성 의료물품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하여,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모성 의료물품인 '인슐린 자동 주입기,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구입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의 확대 : 모든 연령의 환자로 지원 확대**
- 19세 미만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 19세 이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 **지원 내용**
- 19세 미만 : (이후 수립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1인 1회, 의료물품 구입비의 총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90%(약 99만원) 지원
- 19세 이상 : 1인 1회, 의료물품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30%의 80%(약 124만원) 지원
- ◎ **지원 대상자 : 남원시 관내 54명 (19세 미만 : 4명 / 19세 이상 : 50명)**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3 추진성과

- ◎ 2025년 본예산 편성(2024. 9.)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 시행(2025. 1.)

4 기대효과

- ◎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돌봄에 평생 치료비용의 재정적 부담으로 힘겨워 하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5 향후계획

- ◎ 사업 추진 및 개선 방향 점검
 - 남원시 및 의회가 협업하여 사업 추진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 방향 강구

1 조례개요

◎ 제정 배경

- 유성은 대덕특구와 연구기관·대학 등 과학기술 인프라 집중지역으로 AI·XR·미디어아트 등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는 '테크아트'가 새 산업 흐름으로 부상하며, 연구 기반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구축'의 작동을 위해 현장에서 생태계를 움직일 지역 거점의 선제적 제도 마련 요구

◎ 필요성

- 연구·기술·예술·지역산업을 연결할 제도적 장치 필요
- 민·관·학·연 협력 기반을 법으로 마련해 지속 가능한 추진구조 확보
- 국가공약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지역기반 체계 구축
- 과학도시 정체성에 창의·문화 가치를 더해 미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조례 의의

- 정책 선도성

- 전국 최초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제도화 조례
- 국가 공약(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 지방 실행 모델 창출
-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형 선도 입법 사례

- 선행정책 연계

-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갑천 일대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지정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 중앙부처(과기정통부·문체부)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성 확대

◎ 조례 내용

- 목적(제1조) : 테크아트 산업·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 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정의(제2조) : AI·XR·미디어아트 등 기술+예술 융합 창의활동 명확화
- 구청장 책무(제3조) : 테크아트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마련
- 진흥사업(제4조) : 연구·창작·전시·교육·공모·민관협력 등 종합 지원
- 협의체 구성(제5조) : 지역 내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 설치

3 추진성과

◎ 조례 제정 관련 공론화 추진

- 5분 발언(2025.6.9) : 유성구 '테크아트 중심도시' 도약 및 국가공약 지역 실행 필요성 제기

◎ 정책토론회(2025.7.23.) 개최

- 주제 : 「유성, 테크아트 혁신도시를 꿈꾸다」

- 전문가·기관·대학·창작자 참여, 정책 방향·시행 전략 논의

◎ 성과

- 제3회 추경 : '테크아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반영 및 용역 추진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유성구 전략 사업에 테크아트 사업 추진 예정

- 유성 혁신릴레이 포럼(문화혁신)에서 테크아트 전략 발표 (2025.10.30.)

· 구정 공약 반영편에서 포럼을 통해 향후 구청장 공약으로 구체화

- 테크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지정' 촉구안 발의 (제 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4 기대효과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정책적 효과	지방정부 단위에서 테크아트 정책 제도화	전국 지자체 확산 모델
정책적 효과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투자유치 촉진
사회문화적 효과	주민 참여형 창작·체험 기회 확대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도시브랜딩 효과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 제고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5 향후계획

◎ 협의체를 중심으로 테크아트 비전 2030 로드맵 수립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AI·AR·3D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 공공·민간 공동 R&D형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진화 가능

◎ 향후 「대전시 테크아트 진흥조례」 및 「광역권 협의체」로 확대 가능성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과 동시에 지역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 윤석열정부의 무차별적 늘봄 확대

- 부산의 지역에서 전 교육감의 정부맞춤형 늘봄을 확대로 문제발생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
- 지역사회 공동체의 강화로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히,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함
-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냉난방비 절약과 아파트단지 혹은 개인도서관의 활용으로 장소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 청년, 장년, 노년의 일자리 제공
- 마을의 공동체 강화

2 주요내용

◎ 정의(제2조)

- 아동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역연계돌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
- 지역연계돌봄시설 : 이러한 돌봄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연계 돌봄체계 구축
- 주요 추진사업, 돌봄시설 발굴·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대, 돌봄 인력양성,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실태조사 등

◎ 시설 지정 및 운영(제4조)

- 구청장이 직접 시설을 지정·운영 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 지원
-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 규정

- ◎ 시설 기능(제5조)
 - 방과후·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 학습 및 놀이공간 제공
 - 전문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 ◎ 지도점검 및 지정취소(제6조, 제7조)
 -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 부정 지정, 운영 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3 기대효과

- ◎ 파급효과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 생태계 구축
 - 지역 자원의 연계로 인한 마을의 공동체화 강화
 - 지역 자원의 연계로 운영으로 24시 돌봄의 연계 가능
 - 지역 자원활용으로 일자리확보
 - 실질적 민-관-학의 연계성을 확대
- ◎ 발전 방향
 - 돌봄센터가 지역의 중간 다리(학교-돌봄센터-학원-돌봄센터-집)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청소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

4 향후계획

- ◎ 단기(2026년)
 -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역연계형 돌봄을 할 수 있는 곳 1~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함
- ◎ 장기(2027년~)
 - 지역 내 권역별 아파트 단지 전체로 확대
 - 주택사의 경우, 작은도서관 단체와 함께 하여 공간 활용 확대
 - 민-관-학의 연계를 굳건히 함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2023년 6월 30일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폐광지역개발 기금의 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의회 업무보고 질의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폐광기금의 효율적 활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함
- 화순군은 전남에서 유일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만큼,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제정 목적

-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당초 기금운용 취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관행을 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 대표,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기금 운용에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심의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금 결산 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주민복지증진, 광해방지사업, 대체산업 발굴 등 폐광지역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심의함

◎ 기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높은 의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3 추진성과

◎ 주민참여형 기금 운용 구조 마련

- 조례 시행 직후, 집행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대표, 기금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심의 의견을 반영할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성과임

◎ 폐광지역 개발 및 기금 운용 개선 관련 적극적인 의정활동 추진

- 조례 제정 2건(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결의안 발의(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2건(정부의 폐광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기금 배분과 활용)

◎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폐광지역 및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함

4 기대효과

◎ 행정 투명성과 주민 신뢰 제고

- 본 조례 시행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가 정착됨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5 향후계획

◎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향후 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 이후 예산 편성에는 폐광지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할 예정

◎ 폐광기금 운용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 폐광기금 운용에 대해 강원도 태백, 정선 등 다른 폐광지역에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76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김용남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 배경

-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파쇄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 농촌 생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적용대상

- 강릉시 관내 농업인 및 영농부산물(벼·과수·채소 등 재배 후 잔재물)을 발생시키는 자

◎ 시행 목적 요약

- 영농부산물의 체계적 관리·처리를 통해 산불예방, 환경보전, 농업인 부담경감, 자원순환 촉진 실현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시장은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발생량 조사, 처리방식, 예산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

◎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영농부산물 발생현황, 처리실태, 위험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 소각위험이 높은 지역(산림 인접지, 고령농가 등)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 파쇄지원단 운영 및 지원사업

- 농가가 영농부산물 처리신청 시 '파쇄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처리 지원
-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 홍보 및 실시

◎ 교육·홍보

-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중요성과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 협력체계 구축

- 농업기술센터, 산림·환경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소방서·환경청 등과의 협력으로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가능

◎ 시장의 책무 규정

- 강릉시장은 산불 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하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추진성과

- ◎ “태우지 마세요”강릉시‘영농부산물 파쇄단’운영
 -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한편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
- ◎ “영농부산물 안 태워요”강릉시‘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선정
 - 단 1건의 불법 소각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

4 기대효과

- ◎ 환경적 효과
 - 영농부산물 소각 감소로 산불·미세먼지 발생 저감
- ◎ 경제·사회적 효과
 - 농가의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고령농가 부담 완화
 - 지역사회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 산불 발생 예방을 통한 막대한 예산 절감 및 생태계 보존
- ◎ 체감성
 - 농가 : 파쇄지원단 방문처리로 즉각적 편익 체감
 - 주민 : 봄철 연기·냄새 감소, 산불 위험 감소 실질적 체감
- ◎ 향후 발전방향
 - 정량적 실적(파쇄량·참여농가수 등) 공개 및 관리 강화
 - 퇴비화·바이오매스 등 자원화 기술 확대
 - 마을 단위 순환모델 구축 및 주민참여 확대
 -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인식개선 유도

5 향후계획

- ◎ 단기계획
 - 연도별 영농부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파쇄지원단 운영 정례화
 - 농가신청 기반의 현장 처리 지원 확대
 - 산림 인접 취약지역 집중 관리
- ◎ 중·장기계획
 - 파쇄물 퇴비화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구축
 - 처리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상과지표(산불건수, 미세먼지, 참여농가 등) 관리체계 구축
 -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강화

77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이경화 충청남도서산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목적

- 본 조례는 서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고령화 심화(22.9%, 2025.5월 기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복지체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 활력 저하 및 재정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 체계가 시급함
- 이에 인구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 유입·정착·순환 활성화를 추진하며, 인구교육과 시민 참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서산시 현황

- 타 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서산시 인구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
- 서산시는 인구감소 중에도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4,2025년) 등 자료에서 경제활동 정상화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입은 증가 전망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하고 있음
- 서산시 청년인구(18~39세)는 2021년 43,835명에서 2025년 38,563명으로 5,272명(-12%수준)의 유출이 지속되었음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과 행사성 예산 지원만 늘려 제대로 된 청년정책 반영이 되지 않음
- 청년인구는 인근 당진시로의 유출이 많았고, 이는 소극적인 서산시의 대응이 빚은 결과임

2 주요내용

-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 인구구조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기반 정책 추진
- ◎ 생활인구 확대 전략 명문화
- ◎ 인구교육 및 인구의 날 지정하면서 인식개선 사업 추진 근거 포함
- ◎ 시장의 교육·연구·홍보·행사 지원 근거 마련
- ◎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인구정책 민간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규정
- ◎ 인구영향평가·정책연계·자원조달 계획 규정
- ◎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3 추진성과

- ◎ 서산시 인구정책 관련 시정질문(25년) 집행부 답변
 - 서산시 인구정책 과제와 실행 방안의 체계화를 위해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예정이라 밝힘
- ◎ 서산시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서산시 특수성 맞춤형 전략을 제안하면서 대전대 SSK연구사업단 주최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다’세미나 참여(25.10.23.)
- ◎ 조례제정 이후(7월) 서산시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진행(25.10.20.)

4 기대효과

- ◎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사업 체계화 및 예산 기반 확보
- ◎ 생활 인구 확대 등 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발현될 것
- ◎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을 통해 시민 참여 플랫폼이 확보되고, 민·관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성 틀 마련
- ◎ 인구정책을 종합 전략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지속성·연속성·일관성 확보
- ◎ 시민인식개선 및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하는 기반 조성

5 향후계획

- ◎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내실화 하도록 제언
- ◎ 민간추진단 정례 운영 및 시민 제안제 확대 모색하도록 제언
- ◎ 타 부서 정책과 연계한 인구영향평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산시 중장기 특히, 청년층, 아이가 있는 세대 대책, 여성 청년 정착 기반 마련하도록 지원
- ◎ 서산시 인구 변화에 맞춰 세대별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통해 제도 정착 지원

1 조례개요

◎ 제정배경

- 2024년 여름,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 마을'은 집중호우로 다수의 주택이 침수되었으나, 그중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피해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행정의 절차가 주민의 절박한 복구 시간과 맞지 않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방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제정목적

- 중앙정부 기준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복구체계', '지속가능한 지역 회복력', '균형발전형 지방정부 모델'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 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
- 기상특보 발령 여부와 관계없이, 강우량·풍속 등 실질 피해가 확인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행정절차 간소화

- 피해 접수는 동장이 담당하고, 구청장이 신속히 결정·지급하도록 명문화하여 복구 행정의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대응 속도를 개선함

◎ 지급 기준 명문화

- 조례 부칙에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표'를 신설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절차를 시행 규칙으로 위임하여 제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함

3 추진성과

◎ 정책 형성 과정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 실태와 제도 미비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반복되는 재난, 대전 서구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24.9.14.)를 좌장으로 직접 주재하며 논의를 이끌었음
- 토론회에는 피해 주민, 전문가, 행정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2025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됨

◎ 의정·언론 반향

- “재난지수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 회복 입법”이라는 철학 아래,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중앙 정부 기준의 한계를 보완한 생활밀착형 입법 사례로 주목받음
- 여러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지역 맞춤형 재난지원 제도 모델로 참고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4 기대효과

◎ 지방시대 구현

- 중앙의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자치복구 모델을 확립함
- 재정 자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주권 실현에 기여함

◎ 균형발전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

- 재난 피해의 경중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삶과 생계를 중심으로 복구가 이루어져,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임
- ‘국가-지자체-주민’이 협력하는 다층적 회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함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대응하여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선제적 복구 체계를 마련함
- 지역 맞춤형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5 향후계획

- ◎ 조례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피해 유형별·규모별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복구 기준으로 발전 시킬 예정임
- ◎ 대전시 및 전국 지방정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생활형 재난지원 조례」를 광역 단위로 확산시키는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 ◎ 재난복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안전 회복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감염병, 사회적 재난 등 복잡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도시안전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전국 최초로『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공간 전반에『방재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2조)
-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제5조)
- ◎ 방재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 방재디자인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제8조)
-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제17조)
- ◎ 업무의 위탁 및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18조~제19조)

3 추진성과

- ◎ “재난·재해 대비‘방재디자인’필요”주장
 - 2022. 12. 5.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 ◎ ‘방재안전도시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2023. 1. 29. 방재디자인을 유성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토론회
- ◎ 안전한 도시를 위한 대응 방안 질의 및 방재디자인 활용 등 대안 제시
 - 2023. 4. 14.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구정질문
-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23. 9. 1.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방안 개선 및 활성화 촉구
 - 2023. 10. 20.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구정질문
- ◎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나서
 - 2024. 4. 2.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 전국 최초 방재디자인 진흥 조례 발의
 - 2024. 6.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2024. 7. 10.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4. 7. 12.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 11. 18.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자율방재단 운영계획수립
 - 2025. 2. 17. 유성구 청년 자율방재단 운영계획수립(활동조끼제작)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25. 4.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부 방재디자인 적용
 - 2025. 6-8. 학교 주변 그늘막 쉼터 일부 방재디자인 적용 설치(4개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복합쉼터 설치 계획 수립
 - 2025. 9. 유성구 스마트복합쉼터 설치 계획 수립(2개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그린Earth 그린City'연구회 연구용역 추진
 - 2025. 9. 재난유형별 민간 거버넌스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그린Earth 그린City'연구회 한일 심포지엄
 - 2025. 10. 기후위기 시대, 민간 재난대응 정책 한일 심포지엄 토론회
 - 기후위기에 따른 유성구의회 재난 안전 대응 정책

4 기대효과

- ◎ **재난·재해 예방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형 안전체계 구축
 - 방재디자인을 적용하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복구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 ◎ **지역 맞춤형 방재디자인 적용 확대**
 - 지형, 인구,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맞춤형 디자인 모델 개발
- ◎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정책의 전문성·실효성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구민 체감형 정책으로서의 파급효과 확대**
 - 생활 속 작은 안전디자인(보행로, 어린이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통해 구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안전 환경 조성

5 향후계획

◎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관리 강화

-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공공시설·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방재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

◎ 방재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우수작 활용

- 구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유성구 방재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 공모전 수상작은 공공시설과 생활 속 공간(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에 적용하여 안전성과 미관을 겸비한 대표 방재디자인 모델로 활용

◎ 생활밀착형 방재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청년기본법」 제1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마포구는 망원·합정·연남동 등 젊은 유동인구가 활발한 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년상인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단기 창업교육 위주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었음
- 또한,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신청 저조)을 계기로 ‘예비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청년다락방)’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창업체험 중심의 인큐베이팅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조례는 청년상인의 창업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지원,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혁신과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 구청장의 책무 명시(제3조) : 청년상인의 경영안정 및 육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제5조) : 5년 단위의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의무화, 창업교육·멘토링·상권분석·판로지원 등을 포함, 계획에는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상생협력, 자원조달방안 등을 포함
- ◎ 청년상인 지원사업(제6조) : ‘예비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청년다락방)’추진 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창업체험 지원, 한국적 특색의 관광형 기념품·공예상품 판매, 창업역량 교육, 멘토링, 홍보 지원 등.
- ◎ 업무의 위탁(제7조) :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예: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 위탁 가능
-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제8조~제9조) : 청년상인 활동 현황조사 및 민·관·학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3 추진성과

◎ 마포구 적용 가능성 및 준비성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와 연계 가능, 중복지원 우려 적음
- 평소 청년일자리 조례, 마포청년나루·청년센터 운영경험 등 기반 인프라 보유
- ◎ ‘청년창업-지역상권-문화관광’이 연계된 복합형 상권정책 추진 가능

- '청년상인 아카데미·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상권 회복 기여
- 청년상인 경진대회 및 창의사업 아이디어 지원 등 실질적 육성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예비 청년상인의 창업 초기 리스크 완화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상권 진입 기반 마련
- 마포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멘토링 체계 정착

◎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산업 연계

- 홍대·합정 일대 유동인구를 활용한 관광형 창업 모델 구축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적 감성 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상권 매출 증대

◎ 혁신형 로컬브랜드 육성

- 청년상인의 창의 아이템을 통해 마포형 로컬 브랜드 및 '청년다락방'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지속가능한 상생생태계 기반 마련

- 기존 상인회, 청년창업자, 주민이 협력하는 상생형 청년상권 모델 정립

5 향후계획

◎ 2025년

- 10~11월 : 창업체험 점포(컨테이너형 5개소) 제작·설치
- 11월 : 창업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소식 개최

◎ 2025년 12월~2026년 5월

- 「청년다락방」 운영 개시 및 창업체험 본격화

◎ 2026년 이후

- 사업성과 분석 후 '청년상인 지원센터' 설립 검토 및 광역형 네트워크 구축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2021년 발생한간병살인사건등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관심 증가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며 돌봄 자체의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과 생계위협 등 다양한 어려움이 중첩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간병·생계 등의 부담으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 지원 필요
-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에 갑자기 돌봄과 집안의 가장 역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보부재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개념은 물론, 제도적·정책적 준비가 미흡
-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개념과 지원계획 및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의 간호와 간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차별화

◎ 제정목적

-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대상자 발굴,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자원조달, 지원체계 구축 등 계획 수립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과 간호·간병 등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교육, 취업 등 지원사업 추진

3 추진성과

◎ 추진경과

- 2024.2.2. 조례안 발의, 2024.2.23. 본회의 통과, 2024.3.8. 공포 및 시행
- 조례 시행 후 관내 의심사례 대상자 집중발굴 및 기존의 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 ◎ 2023년 기준 금천구는 22명의 대상자가 있었으나, 2024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의심사례 대상자 집중발굴 결과 총 484명 확인
-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명이 일상돌봄을 받고 있음
- ◎ 일상돌봄서비스, 동네방네 돌봄SOS 서비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후원 자원 연계 사업 등 진행

4 기대효과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균형과 관계 개선 및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강화
-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 연계, 지원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추진

5 향후계획

◎ 유관부서·기관과 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다양한 지원 모델 개발

- 미래준비, 정서적 회복, 자기돌봄 강화, 가족간병 등 다양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령대와 성장단계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 ◎ 지원제도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비대면 서비스, 학교·청년 커뮤니티,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청소년·청년 맞춤 콘텐츠 제작
- ◎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와 간병을 지원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안정감 제고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남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정의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3 추진성과

- ◎ 30만 이상 기초·시·단위에서의 최초 조례 발의
- 성남 90만(24.02), 광명 28만(23.11), 대전 대덕 16만(23.06)

4 기대효과

◎ 탄소중립의 방향성·기준점 제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성남시 산업계에 영향

- 성남시 판교지역 등에 IT기업이 다수 자리하고 있음. 기업의 경쟁력 중 탄소중립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에 크고 작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계획

◎ 본 의원은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된 성남시 조례와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나갈 것

연번	입안조례명	구분	시행일
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공동 발의	시행예정 (25.9.22 본회의가결)
2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5.10.13
3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대표 발의	25.02.17
4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표 발의	25.02.17
5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대표 발의	24.02.19.
6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대표 발의	22.05.16.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 관련 대응을 위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 적응정책의 적극 발굴과 문명대전환을 위한 기후테크 등 사회 전 분야의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2023년 발생한 오송 참사의 아픔은 청주시가 단순한 사전 예방을 넘어선 책임성 있는 안전 관리와 안전 최우선 모범 도시를 지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주도형 '사전 예방 안전도시'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제도화하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및 참여권을 명확히 규정하며, '안전교육 지원센터'와 '민관협의체' 등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 본 조례는 오송 참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주도형 '사전예방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업 발굴, 캠페인 홍보, 안전신고 장려,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문화 확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안전 도시 환경 조성

3 추진성과

◎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예방안전 문화 정착

- 국제안전도시 공인(ISCCC) 획득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 착수
-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닌 '발생 이전에 막는'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
- 안전교육 → 신고 → 훈련 → 환류까지 시민참여 순환구조 실현

◎ 지역 커뮤니티·학교·기업을 아우르는 민관 협업 안전 플랫폼 구축

- 생활권·산업현장·교육현장을 연결하는 청주시형 협력모델 표준화
- 향후 국가 공모 및 타 지자체 확산 가능한 확장성 높은 구조의 체계화
- 구축된 민관 협력 시스템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조례'와 같은 다른 안전 분야의 협력 체계와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청주시 안전의 진정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완성해나가고 있음

4 향후계획

- ◎ 연차별 안전교육·안전문화 실행계획 및 성과평가 체계 운영
 - 조례 기반 지속적·평가기반 정책 실행 구조 정착
- ◎ 민간 협력형 안전리더 양성 및 청주시형 선도 안전사업 모델 발굴 및 고도화
 - 주민·학교·기업 대상 자율안전 거버넌스 강화
- ◎ AI·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 및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청소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스마트 교육 체계 고도화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함

◎ **관련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 운영**

- 채무자의 채무, 신용 관리 및 복지수급 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
-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 채무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비 예산 지원
-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관련 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

- 서민금융 관련 기관 및 지역 내 일자리·복지 기관과의 협력
-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단체 직원 파견

3 추진성과

-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2025.9.25.)
- ◎ 금융복지상담사 채용 (2025.9.25.)
- ◎ 센터상담실적(방문/전화) : 22회, 홍보 및 보도자료 발행 : 6회
- ◎ 관련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연계 3회
-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교육 : 45명, 2회
-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하여 신용 회복 절차 이행 : 5명

4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체감성

-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및 과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복지 통합상담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과다 채무를 극복하고 시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발전방향

-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강화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닿는 상담 지원
- 생애주기별, 상황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확대
- 법률·복지·정신건강 연계 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상담-법률-복지-심리 지원의 원스톱 구조 수립
- 심리적, 사회적 위기 극복 및 회복 중심 금융복지모델 추진
- 금융교육과 예방 중심의 시민역량 강화
- 상담 이후 시민 스스로 금융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 단기적 채무 해소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금융 회복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

5 향후계획

- ◎ 금융복지센터 상담실적, 지원 대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 분석 및 대상자 발굴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일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求職으로 경제적 자립 방안 강구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장애인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동물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

-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은 심신미약자
- 등록된 반려동물(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에 대해 연 20만 원 한도 내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 방식 및 절차

- 군수가 지정 또는 협약한 동물병원을 통해 진료 및 청구
-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 명시

◎ 운영체계

- 군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시·군·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가능
- 관내 동물병원을 우선 지정하여 지역경제 순환 구조 형성

3 추진성과

◎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 가결 (2025.4.24.)

◎ 향후 추진 방향

-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세부 지침 수립 예정
- 시행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진료항목 세분화 등 단계적 개선 검토

4 기대효과

◎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 및 심신미약자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어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사람 중심의 '정서복지 서비스'로 확장

◎ **지역사회 긍정효과**

-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및 반려동물 등록문화 정착 유도

- 장기적으로는 '반려복지 특화도시 연천' 이미지 구축

5 향후계획

◎ 반려동물 행동교정·기초예방교육 등으로 확대

◎ 반려동물 복지센터 및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검토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광주광역시 복구에는 2025년 6월 말 기준 시각장애인 2,178명 등록
-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 정보 환경 속에서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에 큰 제약을 받아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

◎ 제정목적

-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활동 현장에서 상황과 풍경, 인물의 표정 등을 실시간으로 언어화하여 전달받는 '현장영상해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
- 시각장애인의 '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접근의 차별을 해소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현장영상해설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

- '현장영상해설'의 정의와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시설 내 지원 시설 설치, 행사 현장영상해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규정

◎ 행정·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추진성과

◎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조례 실효성 제고

- 조례안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 전, (사)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등 유관 단체 및 장애인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 자문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함

4 기대효과

◎ (체감성) 시각장애인의 ‘또 하나의 눈’ 역할

-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현장영상해설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지역 축제 등 공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시각 정보를 차별 없이 향유하게 되어 당사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

◎ (파급효과) 광주 자치구 최초 발의를 통한 선도적 역할

-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발의된 본 조례는 단순한 행사 참여 지원을 넘어 “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불 권리’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에 환기시킬 것
- 북구의 선도적인 조례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

◎ (향후 발전방향)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의 밑거름

- 본 조례는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무장애(Barrier-Free) 포용 도시 북구’ 구현의 법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5 향후계획

- ◎ 본 조례가 2025년 9월 2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공공기관 주관 행사 시범 적용 등 활성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
- ◎ 조례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복지관 등과 즉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인해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 및 활용 격차가 심화됨
- 구리시는 어르신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여 행정·금융·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사업기간 : 2025년 4월 제정일 이후 상시 적용

◎ 사업대상 :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추진방향 및 전략

-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중심(스마트폰, 키오스크, 금융서비스, 온라인 행정 등) 및 공공시설 및 복지기관을 거점으로 교육 실시
- 지역상권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추진경과 (2025년)

- 2월 : 양경애 의원, 임시회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대책” 5분 자유발언(“어르신 디지털 배움터”제안)
- 4월 : 「구리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8월 :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 시작

◎ 사업비

-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운영비·강사비·교재비 등은 연도별 예산에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어르신(65세 이상 구리시민)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한 일상 편의 증진
- “생활디지털”, “지역상권”, “현장체험학습” 등 주요 용어 정의

◎ 시장의 책무

- 시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3년마다 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가능
- 기본방향, 추진목표, 교육지원 방법, 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평가, 협력체계, 홍보, 자원 등이 포함

- ◎ 사업 추진(예산의 범위 내)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 찾아가는 교육 및 디지털 상담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뱅킹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 ◎ 지역상권과의 협력
 - 지역 기관·단체·업소와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 추진
 - 교육 공로자에 대해서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가능

3 추진성과

- ◎ 입법 성과
 - 2025년 2월 임시회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대책 마련’ 5분 자유발언 실시(‘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 제안)
 - 2025년 4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4 기대효과

- ◎ 시민 체감 효과
 -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로 행정·금융·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 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 완화
- ◎ 정책 파급 효과
 -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중앙정부 디지털 포용 정책과 정합성 확보

5 향후계획

- ◎ 교육대상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 지원 대상을 확장
- ◎ 맞춤형 교육 강화
 - 성과분석을 통한 심화·맞춤형 과정 운영
 - 온라인 행정·금융 서비스, 사기 예방 등 실생활 중심 교육 확대
-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적 예산 반영
 -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진천군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괄목할 성장
*(22기준) 1인당 GRDP 9.7천만원(충북 평균 2배), ('16~'24)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 달성
- 진천군의 18년 연속 인구증가 * 전국 비수도권 군단위 유일
청년인구 비율은 17.6%로, 전국 평균 20.2% 比 3.04%↓

⇒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권익증진으로, 지역정착 유도 절실



※ 진천군 청년인구 조례 청년 연령 19세~39세

◎ 추진방향

- 지방의 인구성장을 위한 근간인 청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의 규정 마련
- 상위법 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과정

- '25.01.08. 진천군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현장간담회
- '25.02.11.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 '25.04.17. 제329회 임시회 조례안 발의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5.05.01. 조례(제3223호) 공포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근거
- ⊗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청년의 일자리·주거·문화·여가지원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거 마련
- ⊗ 군수의 책무, 청년친화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등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내용 포함



3 추진성과

-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5.5.1.) **충북도내 최초**
- ◎ 인구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비전 수립(25.6.4.) * 청년중심 인구성장
- ◎ 청년정책 전담팀(청년통계팀/팀장1명, 팀원2명) 신설(25.7.1.)
- ◎ 제1기 진천군청년정책협의체 출범(25.9.10.) * 청년 민관협력 거버넌스
- ◎ 진천군 청년센터 개소(25.9.16.) * 청년중심 소통·문화 허브
- ◎ 진천군 청년의 날 페스티벌 개최(25.9.19.) * 청년의날 주간행사
- ◎ 청년마을(롤빌리지 진천) '롤 페스티벌' 개최(25.9.27.~28.) * 청년마을 행사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조성

4 기대효과

- ◎ 청년 맞춤 정책 추진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지역 청년정책의 선도적 역할로 지자체 간 협력 및 교류 확대
- ◎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지방소멸시대에 효과적인 인구성장에 기여

5 향후계획

- ◎ 2026년 이후
 - 청년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위원회 및 정책협의체 협력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 청년정책 유관기관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지원 등

1 조례개요

- ◎ 2025.12.09. 전부 개정
- ◎ 대한민국 노인 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노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동네 곳곳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대표적으로 취약한 집단
- ◎ 한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활동은 생계이면서 자원 순환의 한 축임
-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활동이 생계 해결과 동시에 재활용 산업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취지를 담음

2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지원내용
 -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 야간 식별 장비
 - 계절별 위험환경으로 지원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 및 장비
 -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추진성과

- ◎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학습
- ◎ 5분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가격 차액 보전 제도에 대해 집행부에 공식 제안
- ◎ 폐지 가격 차액 보전 제도를 중심으로 한 조례 개정 중 부서와 협의를 통해 현 노인일자리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4 기대효과

-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단순히 빈곤노인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자원 순환 산업에 기여하는 일꾼이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됨
- ◎ 기존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계지원 폭은 넓히는 이중 효과를 가져옴
- ◎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림으로서 복지 혜택 확대

5 향후계획

-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노인일자리 참여 적극 독려
- ◎ 재활용품 수집 노인 중 수급자의 경우 노인일자리로 소득 발생시 수급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출산 장려 및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 근거 및 추진 배경

- 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비 상승, 출산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출산에 따른 지원제를 도입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장려하는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 중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주택소유 1채(자가 거주) 또는 무주택 세대(전·월세 거주) 모두 포함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및 방법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연 1.25%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
- (전국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유자녀 가구 확대 지원 조례 명문화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①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퍼센트를 연 1회 지원한다.

②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3 추진성과

◎ 연도별 예산 및 지원 현황(실적)

(단위 : 백만 원, 가구)

구분	예산	지급	신청	지원	비고
2021년	100	88	112	101	자가 57건 / 전세 41건 / 월세 3건
2022년	150	146	177	163	자가 86건 / 전세 75건 / 월세 2건
2023년	280	262	296	272	자가 191건 / 전세 81건
2024년	350	256	291	263	자가 191건 / 전세 81건
2025년 9월(1차)	480	323	252	234	자가 206건 / 전세 27건 / 월세 1건

◎ 조례 제정 이후, 사업 규모 및 지원 실적 크게 확대

(단위 : 백만 원, 가구)

구분	2021년	2025년 9월 (1차)	증가분 (21년 대비)	증가율
사업 예산	100	480	380↑	380%
지급액	88	323	235↑	267%
신청 가구	112	252	235↑	125%
지원 가구	101	234	133↑	131%
유자녀 가구	62	132	'25년 신설 (2025년 제도 첫 시행 후 유자녀 가구 89백만 원 추가지원)	
유자녀 지원금	-	89		

2025년 2차 사업 추가 지원 예정(10~12월)

4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비용 경감과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제고
- 출산에 따른 우대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주거·출산 정책을 결합한 복합지원 모델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가능성 확대
- 청년층의 아산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

5 향후계획

◎ 제도 운영 및 확대 방향

- 유자녀 가구 지원 상향(최대 200만원) 시행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자녀 수·소득 수준별 지원단계 세분화 검토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지원대상 실태조사, 부정수급 방지 등)
- 충남도 및 중앙정부 연계지원의 근거로 전국적 확산 및 제도 정착 기대

91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손정자 경기도남양주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남양주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 5년마다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자문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학교 및 어린이집,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 지원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재정지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운영

-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3 추진성과

◎ 2025년 남양주시 환경교육 추진성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미세먼지위해성 및 저감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등 방문교육	17,000
유아숲체험	찾아가는숲, 생태놀이, 개구리생태동화 등	239,627
물맑음수목원체험	목공예, 산림문화, 산림치유, 반딧불이체험	442,370
시민환경클래스 운영	환경명사(전문가) 초빙 시민 환경교육	16,000
시민환경해설사 양성	시민환경해설사를 양성하여 시민환경교육 시 활용	20,000
환경교육·체험부스 운영 지원	축제운영 시 환경교육·체험부스 시민운영 지원	5,000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의 주요정책, 계획, 이행 자문	1,400

4 기대효과

◎ 2026년 남양주시 환경교육 사업확장 계획

-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추진, 어린이 체험형·맞춤형 환경교육, 시민환경교육가 양성 등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6년~2031년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조례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국가종합환경교육계획 수립 후 추진	50,000
어린이 체험형/맞춤형 환경교육	- 사업일정: 2026년 1월~12월 - 사업내용: 초등 3학년~4학년 100학급 (환경기초시설 견학, 탄소중립교육 등) - 사업효과: 지구행동의 가족단위확산 ※ 강사: 환경관련 활동시민 공모 활용 ※ 2025학년도부터 교육청 협의 필요	50,000
시민환경해설사 양성	- 사업일정: 2026년 1월~12월 - 사업내용: 초/중(방학중 4회) 1개반 성인(4회) 4개반 - 사업효과: 향후 시민환경교육시 활용	20,000

◎ 휴먼북,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사회적기업, 수목원, 각급 학교 및 교육청, 시민단체 등 환경
교육 각종 협업 자원 발굴

5 향후계획

◎ 향후 사업추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환경교육센터, 유아(어린이) 기후환경교육관 등 운영 검토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맞벌이 가족 증가와 핵가족화 심화로 대체양육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 및 지역사회의 대응은 미비한 실정임
-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아동과 보호자·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입법경위

- 본 조례는 양육자 주도로 추진된 중구 최초의 주민조례로서 처음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미충족 사유로 각하되었으나, 이후 수개월간의 주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적용대상 확대

-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개정
- 돌봄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육·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하여 보편적 돌봄체계를 마련함

◎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 구청장은 아동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 돌봄정책 수립의 근거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아동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돌봄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취약가정·맞벌이가정 아동 등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돌봄시설 설치·운영 시 안전, 교통편의,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고려하도록 규정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 신설

- 구청장이 지역 내 돌봄 관련 기관(지자체·학교·마을 등) 간 연계·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함

3 추진성과

◎ 주민참여형 입법사례 창출

- 주민발안 과정을 거쳐 제정된 사례로, 주민·의회·행정이 협력한 참여민주주의 기반의 지역 입법 모델로 평가받음

4 기대효과

◎ 정책적 파급효과

-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 마련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
-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편적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향후 발전방향

- 통합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돌봄 인프라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 향후 ICT 기반 돌봄 플랫폼 도입을 통해 실시간 돌봄 연계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

5 향후계획

- ◎ 아동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과제 수립 및 실행
- ◎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아동권리 중심의 돌봄정책 지속 발전 추진

9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최기영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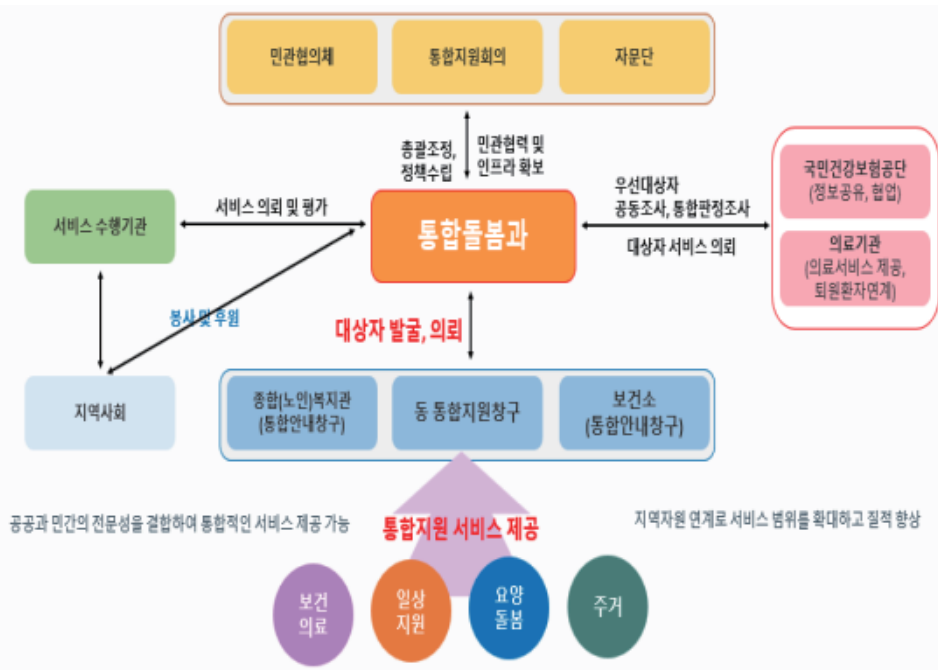
- 노인 및 장애인 등이 폐쇄적인 입소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 조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통합지원 체계의 근간을 구축

◎ 적용범위 및 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2 주요내용

◎ 의료돌봄 등 통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3 추진성과

- ◎ 통합판정조사를 적용한 통합지원체계 조기 정착
- ◎ 지역돌봄(광주다움)에 의료돌봄영역 추가확장으로 통합돌봄 체계 완결
- ◎ 통합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발굴채널 다양화
- ◎ 공공 및 민간자원의 돌봄연계 확대 및 안정적 체계 구축
- ◎ 유형별 전담인력을 통한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강화 및 내실화
- ◎ 전국화 대비 통합지원 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확대
- ◎ (지역특화돌봄) 영구임대 돌봄모델 협업체계 고도화
- ◎ (우선관리 대상자) 사회적 입원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필수 연계

구분(%)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기요양	주거지원
2024년	52.1	23.5	20.8	3.6
2025년	52.2	22.3	19.7	6.2

-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11월 중 협의체 회의 개최 예정
- ◎ 한방 방문의료지원센터 추가 운영
- ◎ 의료급여 대상자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 광주다움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활성화

4 향후계획

<통합돌봄의 전국화로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생태계 조성>

- ◎ 전국화 대비 주민홍보 강화
 - 주민이 '통합돌봄'을 이해하고, 지역 내 돌봄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 유도
 - 생활밀착형 홍보, 미디어·SNS 활용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 활용
- ◎ 마을돌봄 패러다임 확립
 -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돌봄서포터즈 등)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망 속의 공동실천 기반 마련
 - 기 구성된 동별 마을복지계획단을 활용,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발굴 및 연계 활성화
- ◎ 돌봄자원 통합DB 구축
 - 지역 내 흩어진 돌봄자원(인적·물적·기관)을 통합해 서비스 연계 효율성 극대화 필요
 - (통합기반 마련) 보건·복지·의료·주거·자원봉사 등 각 부문 자원 목록화

- (자원분류체계 표준화)
- 관리·운영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검증-등록-주기적 갱신체계 마련
- ◎ **촘촘한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돌봄자원 관리, 대상자 선정, 종결 기준 등 지자체 표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현장교육 병행
 -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 양적지표(서비스 수, 대상자 수) → 질적지표(만족도, 삶의 질, 자립도) 중심 전환

1 조례개요

◎ 제정목적

-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새활용센터'운영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중이며, 해당 조례는 그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상패와 상장 등을 친환경 재활용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해 상패 제작·수여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문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 제1조(목적) :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 제3조(책무) : 시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자,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
- ◎ 제4조(적용범위) : 「전주시 포상 조례」 및 「전주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른 상장·상패와 공공기관에서 제공 되는 상패를 포함
- ◎ 제5조(지원조항) :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홍보·교육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 제7조~제8조(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 상패 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3 추진성과

- ◎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기초단체 최초로 친환경 상패 원칙 명문화
- ◎ 탄소중립정책, 새활용센터 운영 등 전주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

4 기대효과

- ◎ 실질적 탄소감축 효과
 - 연간 공공 포상물 제작 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탄소 배출량 저감
- ◎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재활용 소재 사용 인식 제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 시민 참여 유도

- 상패 수거함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 체감형 참여 유발

◎ 제도 확장 가능성

- 향후 민간기업·학교·시민단체 포상제도까지 확대추진 가능

◎ ESG 행정 실현

- 전주시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정책 브랜드 강화

5 향후계획

◎ 조례 시행에 따른 상패 재질 가이드라인 및 친환경 인증 기준 마련

◎ 시 산하 및 출연기관 대상 친환경 상패 사용 실태조사 추진

◎ 친환경 상패 제작업체 DB구축 및 지역업체 우선 연계

◎ 향후 '친환경 공공물품 인증제'로 확대 검토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빈번한 재난·사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요구의 증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대응 능력이 낮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 조례 제정 근거 및 주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단독 또는 노인세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원범위

- 가스·전기·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안전장비 제공, 기타 생활안전환경 개선 지원**

◎ 지원절차

- 당사자의 지원 신청 또는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
- 심의안건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구성, 안건 의결 후 자동 해산
- 심의회는 관련 부서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심의체계 확립

◎ 협력체계

- 구청장이 필요 시 민간단체에 지원업무 위탁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또한,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점검·감독 규정 명시**

◎ 주민참여

- 구 홈페이지,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한 적극 홍보로 주민 접근성 강화

3 추진성과

◎ 제도적 근거 마련

- 2024년 5월 발의 이후, 양천구가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제도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2025년 6월, 양천구청은 조례 취지를 반영하여 1인 가구·범죄피해자·주거 취약계층 등 156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현관 안전장치, 스마트 도어벨, CCTV 등)'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례로, 본 조례의 제정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됨

◎ 언론보도

- (뉴스로, 2025.6.20.) 양천구,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156가구에 안심장비 지원 등

4 기대효과

◎ 체감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 지역 내 고위험군(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의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 기반 구축
- 안전복지행정의 모델로 타 자치구 확산 가능성이 있음
- 구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인식 확산

◎ 향후 발전방향

- 심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지원 항목을 생활안전교육·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서울시 지원사업 연계로 예산 안정성 확보
- 민관 협력 중심의 '안전취약계층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5 향후계획

- ◎ 조례 시행성과 분석 및 후속 개정 검토 (2026년 상반기)
- ◎ 민간안전단체·복지기관과 연계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 ◎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실시
- ◎ 서울시 자치구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 확산 추진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특히 국내 일회용품의 약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 제정 목적

-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

◎ 사업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화순군 관내 장례식장 및 이용 군민

※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제3조)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 마련

◎ 자발적 협약(제4조) : 군수와 장례식장 사업자 간 협약 체결자 우선 지원

◎ 지원사업(제5조) : 다회용기 대여비·세척비 지원, 회수·세척·재공급 사업, 관련 홍보사업 등 예산 범위 내 지원

◎ 위탁(제6조) : 회수·세척(재공급)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3 추진성과

◎ 추진 경과

- 24.07. : (업무보고) 다회용기 관련 환경과, 사회복지과 질의

- 24.08. : 화순군 장례식장 관계인 간담회

- 24.10. : 거창군 (거창군자활센터, 거창장례식장) 선진지견학

- 24.10. : 환경과, 사회복지과 자활센터 간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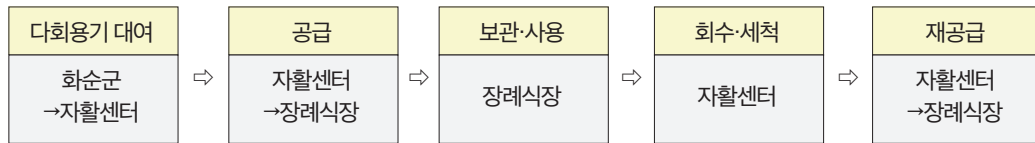
- 25.03. :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25.10. : 26년 다회용기 구입 및 위탁금 편성 요청(136백만원)

- 25.10. :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장례식장, 화순지역자활센터)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상반기 ~
- 사업대상 : 관내 장례식장 (화순 고려병원 장례식장 우선 추진)
- 사업비 : 136백만원 (군비 100%)
 - 다회용기 구입 : 50백만원 (1,000세트 / 장례식장 3개소)
 - 다회용기 보관시설 : 18백만원 (600만원(4개) × 장례식장 3개소)
 - 수거·세척·공급 비용 : 68백만원 (1,000세트 × 4,500원/세트 × 15회)
- 재원 : 2026년도 본예산
- 추진체계



4 기대효과

◎ **파급효과·체감성**

- 장례문화 영역의 일회용품 감축으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처리비용 부담 완화
- 회수·세척·재공급 체계 정착 시 장례식장 운영 편의성 제고, 유족·조문객의 친환경 참여 체감 증대

◎ **향후 발전방향**

- 협약 인센티브 다각화(우수 참여업체 인증, 홍보 지원 등) 및 군민 참여 캠페인 연계

5 향후계획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대여·회수·세척 체계 운영 → 위생·만족도 점검, 홍보 확대, 분기별 성과공개(이용률·감축량 등) 및 개선사항 반영

97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박인서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

1 조례개요

- ◎ 제정 목적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추진성과

- ◎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 친환경현수막 제작비용 : 구비 100%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국비 100%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계	347,820	357,278	372,001	381,997	392,272	1,851,368
친환경현수막 제작비용	337,820	347,278	357,001	366,997	377,272	1,786,368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10,000	10,000	15,000	15,000	15,000	65,000

4 기대효과

- ◎ 본 조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 기존의 PVC 재질 현수막은 폐기 시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소각 과정에서도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이 확산되면 폐기물 저감, 탄소 감축, 재활용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 또한 조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큰 환경실천이 된다'고 체감하게 되며, 행정기관의 친환경 정책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나아가 현수막 제작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
- ◎ 향후에는 울산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남구의 친환경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환경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

5 향후계획

- ◎ 현재 권고 시행 중인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단계별로 의무화하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
 1. 단계별 의무화 로드맵 수립
 - 2026년 : 공공기관 의무화
 - 2026년 : 민간단체 및 지역축제 등 단계적 확대
 - 2027년 : 전 구민 캠페인으로 확산
 2. 현수막 제작업체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원단 구입비 일부 보조
 - 제작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공
 3.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친환경 홍보물 사용 우수기관·단체 표창
 - 탄소저감 효과 수치화 및 주민공개 시스템 구축
- ◎ 본 조례는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시작점으로 남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울산시 전역,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본 조례는 춘천시의 풍부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을 문화·경제·관광·기술이 융합된 주민 체감형 산업 모델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함
- 이는 '전국 최초'로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 강화, 청년 창업, 농가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융합형 전통주 산업 조례로 춘천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 산업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선도 모델 제시

2 주요내용

◎ 춘천시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명확한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음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

- 산업 기반 강화: 전통주 개발·품질 향상, 판로 개척, 홍보, 경영 자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 농산물 기반 전통주를 춘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 확장
- 행정적 지원 체계: 시장의 육성 책임을 명시하고, 공공 조달 우선 구매, 유공자 포상 등 행정 지원 강화
-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농업, 관광,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과 연계한 융합형 산업 생태계 구축

3 추진성과

◎ 본 조례 제정 후, 춘천시 전통주 산업은 아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로 전통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연계 이벤트를 통해 300명 이상이 참여하고, 5건 이상의 농가 직거래 성사
- 농가 및 소상공인 연계: 지역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5~10% 증대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스타트업 참여 독려 및 인턴십·교육 프로그램에 50명 이상이 참여하며 청년 유입 확대
- '전국 유일'의 주민 참여형 성공 사례로 평가

4 기대효과

- ◎ 본 조례는 주민 체감형 서비스와 경제·문화·기술 융합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여 ‘춘천형 전통주 산업 모델’을 제시함
- 주민 체감 및 경제 효과 : 농산물 판로 안정화, 체험·축제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확대로 시민 경제에 직접적 기여
- 문화적 가치 및 도시 브랜드 제고 : 춘천만의 독창적인 전통주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 경쟁력 제고
- 향후 AI·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스마트 양조장 운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

5 향후계획

- ◎ 본 조례는 춘천 전통주 산업을 대한민국 K-푸드 및 K-컬처의 아이콘으로 성장시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함
- 단기(1~2년) : 지역 체험·축제 정례화와 농산물 연계 생산 가시화를 통해 청년 창업 기반 확립
- 중기(3~5년) : ‘춘천 전통주 페스티벌’의 전국적 브랜드 위상을 확립하고 융합 산업 모델 완성
- 장기(5년 이상) : 온라인 해외 유통망 구축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춘천 전통주 세계 시장 진출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김용호 열사는 당시 민주당 여수지구당 문화부장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던 중, 1960년 3월 9일 여수에서 독재정권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 의해 폭행당해 희생된 인물임
- 그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희생으로 평가받으며,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
- 여수시는 1948년 여순사건과 1960년 김용호 열사의 희생 등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 현장이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조례나 행정적 기반이 부재하였음
- 또한, 김용호 열사의 추모행사가 2022년부터 시민사회와 유족 중심으로 이어졌으나,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매년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음
- 본의원은 2023년부터 김용호 열사 추모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아 동판 제막 추진이 예산 부재로 무산된 경험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결심함

◎ 사업 추진기간 : 2022년 3월 ~ 2025년 3월 (3년간)

◎ 추진대상 : 여수시 관내 민주열사 및 정치·학문·예술 등 공헌이 있는 역사문화인물 전반

◎ 입법 전략

- 시민사회와 유족이 주도한 추모행사를 제도화하여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구축
- ‘공론화 → 입법 → 재정 반영 → 성과 실현’의 단계별 접근으로 압축 추진

◎ 주요 경과

- 2023.03.21. 제2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민주열사 제도화 필요성 공식 제기
- 2023.12.22. 정책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 : 학계·시민사회·언론 참여로 공론화
- 2024.01.22. 간담회 : 유족·시민단체·행정 간 의견 수렴
- 2024.03.09. 제64주기 추모식 : 동판 제막 무산 → 입법 필요성 재확인
- 2024.11.19. 조례 가결(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4.12.06. 조례 공포
- 2025.03.09. 제65주기 추모식 및 동판 제막식 성사(조례 시행 첫 결실)

2 주요내용

- ◎ 역사문화인물의 정의를 민주열사뿐 아니라 정치·사회·학문·문화·예술 등 공헌자로 확대
- ◎ 기념사업 범위 : 자료 발굴, 추모제·기념식, 학술연구, 교육·홍보, 기념물 제작 등
- ◎ 시장의 책무 명시 및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 설치(전문가·시민·공무원 참여) 규정 신설
- ◎ **사업비 및 재원구조**
 - 2025년 본예산에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추모공간 조성' 항목 신설
 - 시비 10,000천 원 + 민간후원 5,000천 원 = 총 15,000천 원 공동재원 구조 구축 ⇒ 민간 협력형 재원 모델로 정례화 기반 마련

3 추진성과

- ◎ 조례 제정으로 민주열사 및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행정책임과 지속성 확보
- ◎ 김용호 열사 65주기 추모식에서 최초 동판 제막식 성사 → 조례 실효성 입증
- ◎ 시민사회 중심의 추모행사가 행정의 책무사업으로 전환됨

4 기대효과

- ◎ 민주열사 및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정례화와 예산 안정성 확보
- ◎ 청소년 역사교육과 시민 정체성 강화로 민주주의 가치 확산
- ◎ 여수시를 '역사·문화·민주주의 계승도시'로 브랜딩
- ◎ 향후 손상기 화백·윤형숙 열사 등 다양한 역사인물 기념사업으로 확대 예정

5 향후계획

- ◎ 기념사업의 정례화 및 기념공간 조성 지속 추진
 - 민주당 여수지구당 문화부장이었던 김용호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
- ◎ 2026년 김용호 열사 추모비 주변 재정비(시비 1천만 원 추가 확보)
 - 시민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기념·휴식 공간으로 조성
- ◎ 공동재원 구조 정례화 및 장기 예산 항목화 추진

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박정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1인가구는 취업, 학업, 비혼·만혼·이혼의 증가, 고령화, 개인화되는 성향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및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안전, 건강,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1인가구에 대한 복지수요 확대 및 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맞춤형 정책 필요

: 통계청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형성원인은 다양하여 가구별로 서로 다른 삶의 형태와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라 지원 수용도가 달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다각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제정목적

- 급증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고립·안전·건강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인가구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재원의 규모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함

◎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사하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도 포함시켜 기존의 노인,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요 1인가구로 떠오른 청년·중장년층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

◎ 주요 지원사업

-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건강관리 및 식생활 지원사업
-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사업
-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등

3 추진성과

◎ 1인가구 교류·소통 활성화

- 부산광역시 「2025년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 노년기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홀로사는 인생 원더풀”을 통해 노년기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

◎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고독사 예방

- 중장년 남성(40~64세) 「싱글라이프」 운영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1인가구 청년대상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 1인가구 전용 포털 개설(구청 및 가족센터 홈페이지)

- 1인가구의 분야별·연령별·사업별 등 참여 프로그램 알림 및 각종 정보링크 제공하여 1인가구들이 손쉽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
- ◎ 건강·돌봄, 주거·안전, 자립·생계, 사회적 관계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지원으로 지역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 ◎ 지역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고립·고독사 등 사회문제 예방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함
- ◎ 부서 간 협업체계 및 민·관 협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임

5 향후계획

- ◎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연차별 종합추진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함
- ◎ 부산시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함
- ◎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립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101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설경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군산시가 주체가 되어 실태조사·발굴·상담·자립지원 등 전(全)주기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함
- 장기 은둔으로 인한 고독사·정신건강 약화·비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 기본법」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정의

- ‘은둔형 외톨이’란 6개월 이상 학교·직장 등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의 의지만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사람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
-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원인을 고려한 정책개입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도입

- 전수 또는 표본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구축 의무화
- 복지·보건·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연계 가능한 은둔형 외톨이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 및 2차 고립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심리치료·교육 프로그램 지원

◎ 민·관 협력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

- 사회복지·정신건강·고용·교육 등 분야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조례 추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강화함

◎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단순 선언적 조례를 넘어 지속가능한 예산 집행 기반을 갖춘 실행형 조례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기대효과

- ◎ 정책적 파급효과
 - 개인화된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문제로 전환
 - 복지·보건·교육·고용 등의 다양한 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 지원 모델 구축
 - 고립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립 촉진
- ◎ 사회적 효과
 -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 회복, 공동체 신뢰 회복에 기여
- ◎ 시민 체감 효과
 - 가족단위 상담·의료 접근성 향상
 - 지역사회 내 고립·우울 문제 조기 발견 및 예방 가능

4 향후계획

- ◎ 2026년까지 실태조사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예산 확보
-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 내 복지관 등과 연계한 사례관리·자립프로그램 확대 예정
- ◎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치료 → 자립·고용 연계)

102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제정 목적

- 2024년 2월 발발한 의료계 파업에 따른 응급실 대란을 계기로 보건의료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소아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2024. 4. 원안가결)
-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공모형식으로 심야(달빛)어린이병원을 추진했으나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병·의원들이 신청 자체를 꺼리던 상황으로 군산시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됨
- 소아 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 시예산까지 확보하여 10여 년 만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설(25.3.4.)을 이끌어냄

2 주요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정의(제2조)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군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 지정 및 지원(제3조~제4조)

- 시장은 소아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
-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 가능

◎ 관리 및 지정취소(제5조~제6조)

-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및 지도·감독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기준 명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취소 시,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3 추진성과

◎ 2025. 3. : 군산시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선정(키움병원, 435백만원)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355백만원(전액 시비)

- 달빛어린이병원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 2025년 실적(3-10월) : 운영 8개월 동안 총 1만7,436명 이용

구분	기간	총 환자수	외래소아	외래성인	입원
3월(28일간)	3.4.(화)~3.31.(월)	2,305	1,816	381	108
4월(30일간)	4.1.(화)~4.30.(수)	2,428	1,893	434	101
5월(30일간)	5.1.(화)~5.31.(토)	2,158	1,650	418	90
6월(30일간)	6.1.(일)~6.30.(월)	1,981	1,492	401	88
7월(31일간)	7.1.(화)~7.31.(목)	1,712	1,268	339	105
8월(31일간)	8.1.(금)~8.31.(일)	2,109	1,515	470	124
9월(30일간)	9.1.(월)~9.30.(화)	2,001	1,521	380	100
10월(31일간)	9.1.(월)~9.30.(화)	2,742	2,007	623	112
누계	3.4.(화)~10.31.(금)	17,436	13,162	3,446	828

- 2025년 추석연휴기간 이용실적 : 총 환자수 948명 이용

기간(7일간)	총 환자수	외래소아	외래성인	입원
10.3.(금)~10.9.(목)	948	693	693	38

4 기대효과

- ◎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2023.1)」에 의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소아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 ◎ 의료계 파업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피해 최소화
- ◎ 도내 최초 자체 자원 마련,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인력 확충, 초기 의료기관의 부정적 인식과 인력 부족 문제까지 극복해 시민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임

5 향후계획

- ◎ 2025. 12. : 이용실태 및 수요자 중심 만족도 조사 실시
- ◎ 2026. 1분기 :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 ◎ 2026. 2분기 :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건의안 발의 등 검토

103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미옥 경기도수원특례시의회의원

1 조례개요

◎ 추진배경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이나, 사업 종료 후 행정·재정적 지원이 중단 되면 '다시 쇠퇴'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의 한계가 명확함
- 수원시의 경우 6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 이에,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주민 공동체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제정목적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체계적 사후관리) 시장에게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도시 쇠퇴 방지 대책과 모니터링 체계,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 의무 수립

◎ (지속적 지원) 사업 완료 후에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 (전문적 평가) 전문성을 갖춘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 사업 성과를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단은 기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주민 공동체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 (투명성·책임성 확보) 의회 보고 의무화

- 집행부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매년의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수원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
- 이를 통해 사후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

3 추진성과

-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선제적 제도 기반 마련

4 기대효과

- ◎ 도시재생 성과의 지속성 확보 및 재쇠퇴 방지
-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생력 강화
- ◎ (향후 발전방향) 2026년 준공되는 사업장부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

5 향후계획

- ◎ 즉각적 시행 준비
 -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6개 도시재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조례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계획이 즉시 수립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면밀히 점검함
- ◎ 모니터링 및 환류
 - 전문 '모니터링 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 보고 및 정책 환류에 적극 활용함
- ◎ 표준 모델 정립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원형 도시재생'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

[부록] 참고 사이트 안내

본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각 정책 및 조례안의 전문은
아래의 공식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제·개정 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위임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공식 법령 정보 시스템
- [접속 주소 : www.law.go.kr](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원문을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
- [접속 주소 : www.elis.go.kr](http://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국회 지방의회 의정보털

- 전국 지방의회의 의안, 조례, 회의록 등 의정자료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 포털
- [접속 주소 : clik.nanet.go.kr](http://clik.nanet.go.kr)



국회 지방의회 의정보털

※ 유의사항

- 안내된 사이트를 활용하여 해당 조례의 전문 및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조례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열람 시 최신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실제 적용 및 운영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더불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